

# 강원도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방안

지해명<sup>1)</sup>, 정태연<sup>2)</sup>, 최다희<sup>3)</sup>

- 
- 1) 강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 3)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조사역

## < 요약 >

### I. 서론

### II. 강원도 서비스업의 순환구조 분석

### III.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

1. 경제발전전략 분석
2. 서비스업 성장전략 구상

### IV. 성장가능 서비스업종 분석

1. 성장가능성 평가
2. 성장여건 분석

### V. 서비스산업 성장전략·정책

1. 분석의 전제
2. 서비스업 일반의 지원제도 평가
3. 현서비스업의 성장촉진 방안
4. 코어서비스 구축: 메디컬헬스타운 조성

### VI.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 요약 〉

2013년 기준 강원도는 전국에서 생산과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 2.1%로 인구비중 3.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저성장구조이다. 소비는 3.1% 정도의 저소득이나 기본적 생활비라 평가되는 평균 소비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저축여력이 낮으며, 자본공급(도내저축)이 부족하다. 민간투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2.4%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공급이 제한되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미비로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등 자본의 수요측면에서도 저성장의 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실업최소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조업 육성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발전전략이론에 기초하여 순환구조 분석, 성장 가능 서비스 업종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성장전략을 수립해보았다.

먼저 강원도 서비스업의 경제순환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은 전산업과 유사한 수준이나 총투자의 전국대비 비중은 1.4%(1인당 총투자는 전국 평균의 47% 수준)로 낮은 수준이다. 민간투자의 전국대비 비중은 1.3%(1인당 민간투자는 전국 평균의 43% 수준), 정부투자도 전산업에 비하여 낮은 2.3%(1인당 정부투자는 전국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하여 서비스업의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 강원도의 경우 시장이 작으며, 자본의 공급 또한 제한됨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유인은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수요측면에서도 저성장의 순환고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원도의 서비스업 성장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있다. 첫째,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조건은 대체로 LQ는 3이상의 높은 수준, GRDP에서 차지하는 임계규모 비중은 대략 10% 정도인데 이러한 서비스업은 강원도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둘째, 2015년 1인당 GRDP 23.7백만원(전국 평균의 86%)에 기반을 둘 때 시장규모가 단기간에 커질 가능성은 미미하다. 셋째, 2040년까지의 강원도인구는 현 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다. 넷째, 강원도 유망한 서비스업종은 영세하며, 지역인구에 비하여 과밀할 정도로 집적되어 있다. 다섯째, 서비스업 경쟁력도 대체로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서비스업 일반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강원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업 구조는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기존 서비스업의 구조변화(집적·시설개선·입지강화 등등)를 통하여 상호 수요를 견인하고 시장영역을 확장해 가는 점진적인 방법이 가능하다. 그 결과 지역서비스업의 순환구조를 한 단계 높은 순환구조로 변모시키고, 강원도 서비스업의 영세규모·국지성 극복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gradualism). 다만 점진적인 접근방식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둘째, 충격처방은 지역을 상징하는 일부업종의 대규모화를 통

해 특정 서비스업의 허브화(선도산업)를 이루는 것이다(shock therapy). 단기간에 성장 동인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강원도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견인할 메디컬헬스타운을 조성하는 안이다. 현재의 서비스업구조에서는 강원도 서비스업에 성장 동인을 줄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존 서비스업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동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스포츠시설,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과잉(자본유희화)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업을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있다. 생산(공급)측면에서 첫째, 서비스 생산비용을 낮추도록 정부의 지원제도와 연계한다. 둘째, 생산비용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물리적인 집적, 공간내로의 집적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내 중간재사용으로 생산비용을 최소화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지원결정 시 신상품·신서비스·GRDP 비중이 높은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수요측면에서 첫째, 안정적인 수요창출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둘째, 지역생산 중간재를 이용토록 하여 누출을 방지하고 업종간 산업연관관계를 심화시켜 간다. 셋째, 도내 서비스에 공동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시군간 서비스상품의 이동성을 높인다. 정책측면에서는 첫째,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둘째, 현 정부의 포괄적 복지정책 활용, 셋째, 강원도의 특수성인 접경지역·폐광지역·보호구역 등에 의한 개발에서의 소외 부각, 넷째,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후생수준 악화방지란 균형발전시각을 활용해야 한다. 자본지원 방향 설정에서는 가급적 시설유희화가 우려되는 스포츠오락서비스, 숙박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등은 향후 변화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충격처방 방식의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지원을 토대로 지역의 가용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메디컬헬스타운의 조성을 제시한다. 메디컬헬스타운 조성 조건은 구비되어 있는데 첫째, 의료·보건은 공공성이 있는 분야로 강원도 LQ는 0.8 정도로 인구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가 적게 공급된다. 둘째, 지역내 상품공급비율이 96.2%로 타서비스업에 비하여 지역내 공급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셋째, 의료·보건분야는 강원도 GRDP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다른 성장가능 서비스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넷째, 비교적 새로운 의료·헬스서비스가 부가됨으로써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공동시장(구역)을 창출할 것이므로 지역내·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분단과 개발연대 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된 강원도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 서론

분단 상황에 따른 공간이용의 제약과 개발연대 성장축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강원도는 낮은 소득과 시장위축으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되고 잠재력이 소진되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제조업 기반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타개할 방안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2014), 강원도 역시 서비스업에서 성장의 동인을 모색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지역내·지역주변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충족되어 있거나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강원도는 서비스업의 성장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상품은 지역고착적이고 거래비용(상품조달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입지와 이동성에 제한이 큰 산업이다. 따라서 상당수준의 인구집적이 필요하다. 서비스상품은 생산·소비의 동시성을 가지므로 완전한 상품을 생산·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완결된 생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독점적 경쟁상품으로 생산자가 동일한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거래비용·고정비용·회임기간이 상당히 수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낙후지역에서는 서비스의 시장확보와 상품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강원도는 민간자본투자의 조건이 되는 시장규모가 왜소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일반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생산자서비스·소비자서비스(공적 소비자서비스·사적 소비자서비스)·공공서비스(공공행정 및 국방)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생산자서비스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며 전문기능을 가진 분야로 상당 수준의 학력·숙련 노동력과 높은 R&D 집적이 필요한 분야로 간주된다. 제조업 및 R&D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이러한 산업은 큰 시장을 필요로 하며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공행정 및 국방은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인구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지자체로서는 사실상 외생조건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강원도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소비자서비스업이다. 공적 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은 보건·의료·사회보험·교육 등 공공부문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로 정부의 대규모 투자(수혜)가 없는 한 지역의 인구와 비례하여 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적 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은 고유성·편리·즐거움·접근성·가격조건이 결부된 복합 상품으로 강원도가 다른 서비스업보다 성장 동인을 찾기 수월한 업종이다. 이 산업에 속하는 관광은 산업으로서도 독립계정을 가지지 못한 산업(음식·숙박·문화·쇼핑 등등)으로 전방위의 논의가 필요한 업종이다. 일반적 사적 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관광업의 성장도 가능하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특수가 나타나고 스포츠오락서비스에서의 공급능력이 상당 수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조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 기반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경제성장·실업최소화를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

하는 것이 제조업 육성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방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소비자서비스업은 인구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기본적인 시장(기본수요)이 존재한다는 유리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제조업이 취약한 강원도와 같은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를 인구비례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 대규모 자본투입은 시장의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명제이며,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저축여력이 부족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현 성장조건 미비, 균형발전시각, 접경지역·폐광지역·보호구역에 의한 개발제한, 현재 주민생활 낙후 해소를 위한 향후 비용절감의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의 투입이 절실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적용했던 점진적 성장(gradualism)이나 충격처방(shock therapy)의 개념을 차용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점진적 성장에서는 기존 서비스업의 구조변화(집적·시설개선·입지강화 등등)를 통하여 상호 수요를 견인하고 시장영역을 확장해가는 방법을 따른다. 그 결과 지역서비스업의 순환구조를 한 단계 높은 순환구조로 변모시키고, 강원도 서비스업의 영세규모·국지성 극복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충격처방은 지역을 상징하는 일부업종의 대규모화를 통해 특정 서비스업의 허브화(선도산업)를 이루는 것이다. 양자 모두에 적용해야 할 것은 강원도의 국지성 극복을 위해서 지역내 공동구역을 설정하고 개발하여 지역적 통합과 공동시장 개념의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구체적 개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II장에서는 경제의 순환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 경제상황을 검토하고, 생산 - 소득 - 소비로 연계되는 순환구조에서 지역경제성장의 기본축이 되는 자본의 공급여력과 투자유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III장에서는 강원도가 처한 상황, 순환구조에 적합한 경제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전략(high development theory)을 개관하고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촉진을 위한 전략을 두 가지 축으로 구상하는데, 첫째로는 현존 서비스업종의 성장조건과 둘째로 코어서비스업의 구축 전략을 구상하기로 한다. IV장에서는 IRIO 통계를 통해 취업·소비·생산구조를 분석하고 승수분석을 통하여 수요유발구조를 평가한 후 강원도에 적합한 서비스업종을 중분류 수준에서 선별하기로 한다. 이어 세분류 수준의 가용데이터를 이용한 업종별 규모분석, 집적도 평가,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하여 성장가능한 산업을 제시하기로 한다. V장에서는 전략구성의 전제로서 강원도 서비스업이 갖는 성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적시하도록 한 다음 현행 지원제도를 수요지원·공급지원·생산요소지원으로 구분하고 각 서비스업에 타당한 지원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 부분이 점진적 성장안의 조건이 될 것이다. 나아가 차후 강원도에 필요한 코어서비스업으로서 메디컬헬스타운 조성의 필요성·가능성을 제시하고 정성적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한 적합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II. 강원도 서비스업의 순환구조 분석

경제성장은 자본투입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자본집약도의 증대를 의미하며 경제이론으로 정립된 사실이다(Galenson & Leibenstein(1955)). 자본의 수급측면에서 보면 자본공급은 저축여력과 저축성향에 의존하며, 자본수요는 투자욕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국 평균이하의 성장세를 보이는 강원도는 자본의 수요·공급측면에서 모두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난다. 경제성장이 저조한 강원도에서 자본 공급측면에서는 생산기반미비로 인하여 저소득과 저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된다. 자본 수요측면에서 보면 적은 인구 및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시장이 작기 때문에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따라서 자본부족 - 저생산성 -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된다. 강원도에서는 저성장 순환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낮게 유발되는 것이며, 임계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제순환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표 1> 강원경제의 거시지표

(단위: %)

		2010년		2013년	
		전국대비 점유비중	1인당 지표 평균대비비율	전국대비 점유비중	1인당 지표 평균대비비율
인구		3.0		3.0	
전산업	생산	1.6	52	1.6	53
	부가가치	2.0	66	2.1	69
	민간소비	3.0	98	2.9	97
	정부소비	4.0	131	3.8	127
	총소비	3.2	105	3.1	104
	민간투자	2.1	69	2.4	81
	정부투자	6.3	209	6.1	201
총투자		2.8	94	3.1	101
서비스업	생산	2.1	69	2.1	68
	부가가치	2.2	73	2.2	74
	민간소비	3.0	98	2.9	97
	정부소비	4.0	131	3.8	127
	총소비	3.2	107	3.2	106
	민간투자	1.5	50	1.3	43
	정부투자	4.2	139	2.3	75
총투자		1.8	59	1.4	47

주: 1인당 지표 평균대비 비율 = 강원 1인당 지표/전국 1인당 지표 평균 x 10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전국지표와 강원도 순환구조를 비교하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난다. 2013년 기준 강원도의 전국대비 생산비중은 1.6%(1인당 지표의 전국대비 비율은 53%)로 인구비중 3.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1) 부가가치 비중도 2.1%(1인당 지표의 전국대비 비중은 69%)로 저조한 상황이다. 생산·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강원도는 상당한 저성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강

1) 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종합자료(일반균형 통계체계)는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이며 가장 최근년도의 IRIO모형은 2013년이다(한국은행 2015년 발간).

원도 총소비의 전국 대비 비중은 3.1%로 인구에 비례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 소비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부가가치 비중은 2.1%인데 소비는 3.1% 정도로 나타나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소비가 나타난다. 이는 강원도의 소비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비한 평가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소비수준(사실상 기초소비 정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 내부의 저축여력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본의 공급여력(도내저축)이 부족하게 된다.

자본장비율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최적생산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원도의 소비 비중인 3.1%는 대규모투자에 대해 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대외시장을 지향한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연관산업 미비, SOC 미흡 등으로 투자여건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강원도의 민간투자는 전국대비 2.4%(1인당 투자기준 전국 평균의 81%)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투자가 전국대비 6.1%를 차지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부족을 다소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총투자 비중은 3.1%로 1인당 투자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대비 101%로 나타나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자본의 공급여력 부족과 연계된 문제점이다.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전국대비 비중은 전산업과 유사한 수준이나 총투자의 전국대비 비중은 1.4%(1인당 총투자는 전국 평균의 47% 수준)로 낮은 수준에 있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현시점 투자로 볼 때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전망은 밝지 않다. 민간투자의 전국대비 비중은 1.3%(1인당 민간투자는 전국 평균의 43% 수준), 정부투자도 전산업에 비하여 낮은 2.3%(1인당 정부투자는 전국 평균의 7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자본이동에 제한이 없지만 시장이 작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GRDP는 낮은 반면 민간소비 수준은 평균소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축여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시장이 작으며, 자본의 공급 또한 제한됨으로 민간부문의 투자유인은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수요측면에서도 저성장의 순환고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강원도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서비스경제권의 형성(국회 지방살리기포럼, 2014) 등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강원도의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의 정부투자는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으므로 국회의 논의는 사실상 현실을 도외시한 선언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인구 3.0%에 소비 3.0%는 전국의 평균적인 소비수준으로 강원도가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2013년간 단기적 통계이기는 하나 강원도는 투자부족과 낮은 경제적 잠재력이 순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거시지표에서도 인구비중 3.0%, 부가가치 2.6%(1인당 GRDP 평균대비 86%)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투자는 현(現)기의 수요로 나타나며(자본재 생산부문의 최종수요 증가) 자본의 회임기간이 지나면 자본장비로 생산에 고용됨으로써 미래시점의 생산능력을 결정한다. 강원경제의 순환구조에서 볼 때 향후 성장경로를 가늠할 지표인 투자가 평균수준이지만 이는 정부(공공부문)의 강원도 투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민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작게 유발되면 성장잠재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강원경제의 현상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입에 기인한다. 물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적 사실이며, 강원도 민간부문의 활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강원지역 주민들의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지원은 필연적이다. 다른 지역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강원도가 평균적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의 비용(정부지원 규모)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미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도 강원도가 자생적 성장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강원도의 시장규모(인구·GRDP·소비수준 등)로 볼 때 강원도 서비스경제의 성장전망도 밝지 않으므로 낮은 수준의 저성장 순환구조를 유지하거나, 정부(공공부문)의 개입으로 강원경제 순환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 Ⅲ.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

강원도 경제전반, 특히 서비스업의 현상은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투자부족으로 인하여 향후 강원경제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전략에 근거할 때 두 가지 발전경로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현 산업구조에서 다양한 서비스업 투자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생산기반을 갖추어 가는 점진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현존 서비스업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여 산업연관관계를 높여가는 방안이다. 강원도 내 선도산업의 역할을 수행할 산업기반이 없어 다양한 산업에서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간 금전적 외부성이 발현되는 성장경로이다. 이는 다양한 산업이 점차 상호수요를 견인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성장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gradualism).

둘째로 상당 수준의 자본투입을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축을 형성하고 여타 서비스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코어(허브) 서비스업을 창출하고 자원을 집중하여 해당산업을 성장시키는 발전방안이다. 핵심서비스업에 기반한 산업연관구조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이다(shock therapy). 충격처방은 정부를 위시한 공공부문의 자본투입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산업의 점진적 발전과 산업간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에 비하여 충격처방은 보다 빠른 서비스업 성장구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sup>2)</sup>

서비스업의 성장전략·정책을 성안하기 위하여 균형 경제발전전략과 불균형 경제발전전략으로 구성된 고전적 경제발전전략을 개관할 것이다. 경제발전전략이 강원도에 기여할 부분을 정리하고 기존 입지론(location theory)에 추가적인 결정요인을 부가하여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정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 1. 경제발전전략 분석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전략(high development theory)으로 명명되며 복고된 고전적 경제발전전략(Krugman(1993))<sup>3)</sup>은 이론적 정교함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 입안에 필요한 체계적 방법론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어온 지역경제발전정책, 지역별 전략사업구축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후 수립된 강원도 경제전략도 구체적·체계적 산업연관관계를 구현하지 못하는 모호한 상황에 있다. 성장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효과가 없을 경우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경제발전전략이라고 판단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도 동

2) 경제발전전략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분야는 '경쟁'이다. 지자체간 대립·협조구도가 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경쟁구도 분석은 서비스업의 진입·퇴출 등의 평가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인바 이는 추가로 논의하도록 한다. 인구규모에 비교한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는 경쟁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경쟁에 관련해서는 IV장의 세부업종 평가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3) Krugman(1993)에 의하여 이러한 경제발전론이 복구되었으며, 고차원 발전이론(high development theory)으로 명명되었다. 동 논문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경제발전전략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성장론에 관해서는 Barro&Sali-i-martin(1995), Takahashi(2008), Yiffu-Lin (2003)이 참조할만하다.

일한 견지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고전적 경제발전전략에서 보면 균형발전론(균형론)은 공급측면을 중요시하므로 생산-생산연관관계의 선순환을 성장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견지한다. 반면 불균형 발전론(불균형론)은 경제의 수요측면을 중요시하는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수요연관관계의 확대재생산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초기투자는 선도산업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Hirshman(1961), Krishna & Perez(2005)). 전반적으로 볼 때 고전적 발전이론에서는 산업의 성장성은 생산성과 수요, 산업별 생산·수요연관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Rima(2004)).<sup>4)</sup>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촉진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 경제발전론 검토를 제기하는 이유는 기존 지역산업발전 등 정책방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이는 지역산업정책(RIS구축, 클러스터조성 등)은 대부분 낙후지역에 기존 산업구조와는 별개로 신산업의 집적을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수립되었으므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연계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및 우려가 있다. 전략산업이 앵클라브 형태로 존속하게 되면 산업연관효과를 구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이 이식된 신산업 위주(춘천 바이오, 원주 의료정밀기기, 강릉 해양바이오·신소재 등)<sup>6)</sup>의 전략산업이 산업연관구조상 의도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성장구도 구축에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기존 산업구조와의 정합성 및 산업연관구조에 따라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구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산업 동시투자와 선택적 집중투자의 문제, 산업간 투자배분의 논점 역시 고전적 발전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배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경제발전론 검토는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 및 산업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대부분 저성장지역은 중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매우 낙후된 상황에 있으므로<sup>7)</sup>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합성이 있는, 체계적인 전략구사가 필요하다.

## 가. 균형발전이론

강원도의 경제·서비스업은 발전된 지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서 순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기저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균형론자인 Nurkse(1953)와 Scitovsky(1954)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이론의 연구자들은 상대

4) Rima(2004)는 성장론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총수요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5) 미 상무성 산하기관인 EDA(1997)에 따르면 경제정책의 성과는 집행된 지 6년 이상의 완숙기(maturity)가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강원도의 공공부문 투자 방향을 규정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이미 그 완숙기를 거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발전론에 근거한 구조분석은 그 방향 분석에 집중되므로 경과된 시간과 관계없이 연구할 수 있다.

6) 원주·횡성·홍천으로 이어지는 의료정밀기기산업은 상당 수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관련 내용은 강원도 전략산업기획단(2008)을 참조할 수 있다.

7)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북 등의 지역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낙후지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공공부문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적·절대적 경제침체는 기본적으로 저축여력 및 투자부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사 이래 자본은 충분한 적이 없었으며, 자본이 생산을 결정한다. 자본공급은 지역내 저축여력 및 저축성향에 의존하게 되며, 자본수요는 투자인센티브에 의하여 결정된다. 빈곤이 지속되는 지역(국가)에서는 그 기저에 자본의 수요·공급측면에서의 병목이 있는데 자본공급의 순환고리를 보면 자본부족 → 저생산성 → 저소득으로 인하여 다시 저축여력이 부족하며, 자본수요의 전달경로에서는 자본부족 → 저생산성 → 저소득 → 구매력 저하 → 시장협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하여 투자유인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균형론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공급측면이 수요측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소득으로 인한 낮은 저축과 투자유인 부족에 따른 적절한 투자미비를 저생산성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sup>8)</sup> 균형론에서 경제의 순환과정을 고려할 경우 생산이 순환하여 유발생산으로 환원되는데 이때 유발되는 생산이 이전 단계의 생산보다 커야 경제가 성장한다. 따라서 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연관구조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astro(2006)).

강원도는 대체로 산업기반, 특히 제조업의 기반 미비로 인하여 제조업·서비스업의 연관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sup>9)</sup>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 시장은 경기도 등과 같이 통합된 시장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괴리되어 국지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통합된 시장에 비해 투자자에 대한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업종의 성장 역시 제한적이다.<sup>10)</sup>

균형론에서는 제조업의 초기 발전단계(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특정 국가(지역)에서는 시장규모가 작고,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자본의 유희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본집약적 생산공정을 채택하기 어려우며, 시장이 협소하면 민간부분의 진입욕구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Warner(2006)). 대부분의 경우 자본집약도 고도화는 생산이 증가됨을 의미하지만<sup>11)</sup> 강원도의 입지적 한계, 즉 시장규모가 작아 제조업에서의 자본진입(대규모·중규모 기업 설립), 특히 민간부문 투자가 유발될 수 없는 구조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자본장비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입지적 한계로 인한 수요부재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진입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연관효과도 발현시키지 못하였다. 제조업에서의 이러한 투자부진은 서비스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서비스업을 보면 관광에 치중된 성장전략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산된 미약한 투자는 나타났지만, 부실하여 유명무실해진 레고랜드 조성사업이나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그 전례가 없는 것이다.(물론 하이원리조트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에 속하지만 전략상 많은 문제점을

8) 물론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할 것인데 균형론자로 평가되는 Ciccone(2002)에서는 적절한 중간투입재의 연관구조 결여가 저생산성의 주요 원인이며, Aghion(2002)은 상품의 질을 높이는 발전과정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9) 장래인구추계에서도 2040년경까지 인구는 정체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통계청(2017))

10) 강원도를 지역외·해외 생산기지화 할 개연성은 있다고 해도 현재의 입지여건 즉 생산비용(물류비용 포함), 연관산업, 숙련노동력, R&D 창출 등등 여러 면에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1) 자본집약도의 증대는 생산을 증대시키며,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집약도를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다양하게 강조되어 왔는데 기존 연구에서 Galenson & Leibenstein(1955), Stewart(1978), 지해명(2014) 등이 참조할만한 연구이다.

유발하고 있다.)<sup>12)</sup> 서비스업 자체에서도 유기적인 산업연관관계는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론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경제 관점에서 현대적 자본장비 도입시 수요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경우 강조되는 정책수단은 교역에 대한 규제철폐(Warner(2006))이다. 이를 지역경제 관점에서 보면 시장규모가 작을 때 지역간 상품교역을 근간으로 교차거래·지역내외 수요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성을 높일 경우 수요가 진작되며 이는 시장확대의 기능을 한다는 논지이다.

균형론의 다른 핵심논지는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성이므로, 주어진 인구규모에서 생산증가, 그에 따른 가격하락은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켜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생산성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므로 시장은 오로지 전반적인 생산성의 증가에 의하여 확대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Rosenstein-Rodan(1943). 정책과 연계지어 볼 때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의 생산능력 및 생산성 제고라는 큰 명제가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은 대체로 생산과정에 고용된 자본(자본집약도)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초기 생산자의 경우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현대적 장비도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강원도의 현 상황과 연결되는 사실이다.

특정지역의 초기 개발단계에서 새로운 장비를 갖춘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창출되지 않는 한 시장규모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낮은 소득수준에서 낮은 가격탄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창출 여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역내수요가 보장되어야만 기업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이는 투자유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해법으로 균형론에서는 “다양한 산업에 동시에 자본(장비)이 도입되었을 때 시장규모가 동시에 팽창하는 결과가 나타난다”(Skitovsky(1953))는 견해를 견지한다. 보완관계를 갖는 산업이 동시에 효율적인 자본장비를 도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면 각각의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의 수요자로서 기능하게 되므로 보완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완관계가 있는 산업에 대한 동시투자가 상대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13)</sup>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의 욕구에 비례하여 모든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여 배분하는 조건하에서 모든 생산증가는 자체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는 고전적 시장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산업의 균형성장엔 시장규모를 넓히고 투자유인을 창출하는 조건이 된다. 특정산업의 시장제약 때문에 민간투자유인이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정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서 동시에 투자를 증가시켜 금전적 외부효과(pecuniary externality: Scitovsky(1954), Ciccone(2002): 특정기업의 이윤이 다른 생산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sup>14)</sup>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을 그 메커니즘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을 지연산업, 전략산업, 일반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해 볼 때 산업군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지만<sup>15)</sup> 생산측면이든 수요측면이든 제시된 산업군

12) 강원랜드는 수익면에서 높은 성과를 시현하고 있고 리조트사업이 본래 공간적으로 괴리된 지역에서 성장한다고 해도 강원도 특히 정선지역에서 하이윌리조트는 완전한 앵글라브로 존재한다. 전혀 산업연관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전략상 논의·재검토가 필요하다.

13) Nurkse(1953) 참조.

14) 금전적 외부성은 시장기구내에서 작동하는 현상으로서 실제 외부성의 개념과는 다르다. 기술적 외부성의 경우 시장기구외에서 작동하는 현상이므로 이 부분이 실제 외부성의 개념에 부합한다.

15) 예를 들면 정부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지자체는 지연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양 산업이 동시에 상대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

내·외에서 강한 보완관계가 형성되도록 동시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상호수요를 견인하는 메커니즘 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부침이 서로 상쇄되어 경제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장점도 있다. 낙후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간 상품이동이 제한적이라면 보완관계를 갖는 다양한 산업에 고른 투자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지역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벽이 사실상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다산업 동시투자(다변화)와 선택적 집중투자(산업집중)의 중간 형태의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Rosenstein-Rodan(1943)과 Murpy etc.(1989)에서 공업화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급자족 형태의 발전전략을 채택하는데 모든 산업, 즉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것을 공업화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는 소비 등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는 동시에 내부에서만 자원을 동원하므로 자본부족 등의 상황에 처하여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타지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도외시하면 타지역과 상당 수준 독립된 경제단위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역내의 분업의 감소와 함께 수요의 감소, 따라서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이동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논지이다. 낙후지역 경제의 현실을 볼 때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행될 경우 자본제약 및 생산제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둘째, 다른 전략으로는 분업의 경향을 따르는 한편 상당한 규모의 소요자본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주민들의 소비 등 생활수준을 급격하게 낮추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sup>16)</sup> 분업할 경우 저발전 지역에서는 낮은 수준의 기술(주로 노동집약적 산업)로 생산이 가능한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기술(주로 자본집약적 산업)이 필요한 산업은 역외 경제에 의존하게 된다.<sup>17)</sup> 동 이론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동원하는 첫번째 전략 보다는 두번째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지역간 구도에서 보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경제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의 산업투자자금은 지역별로 배분된다. 국가균형발전 전력의 일환으로서 정부는 1999년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역전략산업 형성에 자금을 투입되었으며, 지자체는 대응자금 형태로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에 참여하였다(유치산업 육성이나 공공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입장에서 정부자금은 국가간·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등에 비하여 제약은 덜하지만 사실상 타지역과 경쟁하여 조달하는 외부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고조달이 지자체 경제성장의 핵으로 존재한다. Rosenstein-Rodan(1943)이 제시하였듯이 자금의 조달측면에서 공업화에 이르는 두번째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타지역과의 분업관계, 즉 특정산업의 특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산업(과거 영동지역의 석탄위주의 모노컬처)만을 대규모로 육성하게 되면 역내수요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잉생산의 위험이 수반될 수도 있으며, 해당 산업이 붕괴될 경우 지역경제

16) 구사회주의 경제권에서 구소련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공업 우선발전전략을 채택한 경우 대부분 공업화의 차질과 주민의 소비생활 악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17) Chamon & Kremer(2006) 참조.

가 일순 와해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예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른 과거 석탄생산지(brown fields)의 경제적 침체가 있다).

낙후된 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오로지 민간부문에만 의존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산업별 투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형(low level equilibrium)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신산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유닛을 구성하고 전략을 시행할 경우 수요확산 등 외부경제가 발생하여 공업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정산업에서의 공과만이 타산업에 대한 수요로 이용된다면 수익성이 없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수익만이 유일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채널이라면 고성장 균형성장경로 구현은 어렵게 된다. 한 산업의 산업화가 다른 제조업 분야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수요변동이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경로, 즉 두 가지 채널인 수익과 수요증대를 통하여 고성장 균형에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sup>18)</sup>

균형론이 낙후지역 경제성장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은 첫째, 생산 → 유발생산의 확장과정을 거쳐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점은 생산연관구조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생산 혹은 수요측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에 대한 동시투자가 중요한데 낙후지역의 경우 사실상 자본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정부자금을 이용하되 기술수준을 감안한 특화(분업체계)를 모색하는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할 경우 성장성이 있는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공공부문을 축으로 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하되, 투자는 국내 분업구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지역에서 다산업 동시투자나 모노컬처식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간형태의 경제정책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나. 불균형발전이론

균형론에 대한 반론으로 산업별 투자측면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수단으로 하는 전략이 제기되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이론이 Hirshman(1961)류의 불균형론이다. 균형론은 외부의 자원을 매개로 근대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분업 체계에 편입되는 한편, 여러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외부성을 창출하고 산업간 연관관계에 따른 산업간 수요창출을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동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하여 Hirshman(1961)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첫째, 균형론은 산업구조면에서 새롭고 독립된 현대적인 산업이 전통산업에 이식된 형태로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연계가 없는 완전한 이중구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보완관계(특정산업을 매개로 근대적 경제구조에 편입)는 성립할 수 없게 되며, 산업간 상호 수요창출이란 메커니즘이 발현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은 강원도의 예를 들면 지역산업진흥사업(1999~2004년간)에 의거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 온 바이오·의료정밀기기·신소재 등 신산업과 기존 강원도 전통산업간 연계문제에 대한 비판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균형론의 동시투자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본·자원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하

18) Murphy etc.(1989) 참조.

지만 저발전지역의 경우에는 가용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역내자원만 가지고는 투자계획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국고에 의존하는 낙후지역의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균형론은 불황기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투자<sup>19)</sup>·소비지출 증가(유효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경제가 회복되는 케인지언의 패러다임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0)</sup> 이는 공급은 탄력적이거나 수요가 낮은 수준에서 비탄력적인 경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그렇지만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미비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부양 정책을 시행할 경우 수요의 상당 부분이 지역외로 누출되므로 위 논의의 타당성은 다소 떨어진다.

넷째, 저개발국가에서는 적절한 투자유인이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산자는 외부경제를 적절하게 전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sup>22)</sup> 계획기관이 모든 생산과정을 통합하고 통제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균형론의 전략(계획기관이 동시·대규모 투자를 시행)인데,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실행되면 하나의 프로젝트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는 있으나 국가(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Craft(2005)와 Francois & Zabojnik(2005)이 주장하듯이 제도(시스템)의 우월성도 전략 성패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이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계획가(social planner)로서의 역할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본제약·시장제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매우 낮다는 점은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표 2> 균형발전론과 불균형발전론 비교

	균형발전론	불균형발전론
성장계기	산업간 균형적 보완관계(생산연계)	산업간 불균형 인과관계(수요견인)
산업투자	다양한 산업 동시투자	선도산업 우선·집중투자
산업구조	산업간 균형	산업간 불균형
순환과정	공급중시(생산연관구조)	수요중시(수요연관구조)
기획기능	공공부문	시장
시장규모	생산성(생산)	유발수요
재원조달	외부자원	외부자원
경제안정	다양한 투자로 위험분산	선택집중투자로 경기변동에 취약

19) 투자는 수요증대와 회임기간을 거쳐 생산자본으로 고용될 때의 생산능력 제고란 이중의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중 수요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 이러한 전략은 과소고용 상황에 적합한 정책으로 평가되며, 경제의 순환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중지된 기능과 역할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경제에서 균형있게 경제가 회복되는 경우이면 가능하다. 저개발국가(저발전 지역)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 등을 집행하더라도 경제체제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장(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Hirshman(1961)).  
 21) 균형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는 공급제약에 걸린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공급(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22) 급진적 외부성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생산자의 경제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시장기구에서의 변화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citovsky(1953)) 참조.



Hirshman은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위한 불균형 발전전략은 한 산업의 불균형적인 성장이 후발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흡수되며, 성장의 동인은 외부성(특정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금전적 외부성, 규모의 경제), 산업간 보완관계, 유발투자(수요) 등이다. 만약 불균형 성장전략이 가능성이 없다면 균형성장전략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위의 주장에서는 산업간 보완관계·유발투자(수요) 등에 근거하여 수요측면의 분석이 필요한데, 이는 수요연관구조의 규명을 통하여 우리나라 낙후지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보도록 할 것이다.

불균형론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이 반드시 일정한 정도로 성장해야 하는가? 실제 다른 시점간의 경제성장을 비교하면 개별산업의 경우 일정한 비율로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비용감소형 혁신, 신상품 출현, 수입대체 등의 결과로 가격하락이나 신수요 유발로 시장이 특정산업의 생산증가를 흡수하며, 공급측면에서는 특정산업의 생산증가는 가격변화를 통하여 여러 산업으로 그 상품(인풋)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상술하고 있다. 그런데 신산업과 전통산업간 연관관계가 깊지 않을 경우 위의 메커니즘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불균형론에서는 선도산업에 대한 우선·집중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선도산업과 후발산업간 연관구조가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발하여 균형론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는 강점을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특정산업으로 자본이 집중되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가능성이 있지만 균형론에서와 같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자본이 배분되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어렵다. 대부분 낙후지역의 경우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다.<sup>23)</sup> 투자는 유발투자(induced investment)와 독립투자(autonomous investment)<sup>24)</sup>로 구성되는데 발전된 국가(지역)의 경우 독립투자가 장기적 경제성장의 주요한 계기를 형성하게 된다. 저발전된 국가에서는 독립투자에 의존하여 경제가 성장하도록 동인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보완관계에 근거한 유발투자가 후진경제를 점차 변화시킬 것이라고 Hirshman은 주장하고 있다.

불균형성장의 메커니즘은 이전의 산업간 불균형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제적 행위가 차후 그 이상의 성장을 추구토록 하는 불균형을 창출한다. 즉 특정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생산증가는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 여러 산업에 대한 동시투자보다 강력한 경제성장의 동인을 형성하게 된다.<sup>25)</sup>이 부분

23) 특정산업에 투자를 집중할 경우 대규모 고정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누릴 가능성이 있으며, 균형론의 경우에는 자본이 다양한 산업으로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가능성은 작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에 근거한다.

24) 유발투자는 특정의 생산물 또는 경제전체의 지출 증가에 따라 행해지는 투자를 말한다. 유발투자의 원인으로서는 소득증가와 인구성장에 의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증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발투자는 특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한 추가설비에 대한 지출로 간주할 수 있다. 자발적 투자(독립투자)는 신상품·신기술개발·신공정도입 등에 의해 나타나는 투자를 의미한다. 특정산업에서의 독립투자는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전체의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25) 산업 부문별 불균등 성장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면(예로 SOC)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은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는 것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균형론과 차별화되는 주요한 논점이다. Krisina & Perez(2005)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떠한 단계에서의 비용감소는 최종재의 가격을 낮추고 수요를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중간투입재의 수요가 증대되고 수요증대는 다시 이윤을 증대시킨다. 바로 이 부분이 수요승수와 수요연관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타지역과의 분업관계(보완관계)에 대한 논의와 자원조달(예산제약)에 근거한 투자방향 정립도 필요한 작업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평가하면 불균형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지역별 산업정책을 보면 대체로 전략산업 성장에 치중되어 있다는 측면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산업·일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방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의 증대가 중요하며, 이 부분이 시장규모 및 투자유인을 발현시킬 조건이 된다. 다른 면에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전략 자체의 집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을 높이는 산업간 수요의 견인, 역내수요의 확보 역시 성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 2. 서비스업 성장전략 구상

다양한 산업에 대한 동시투자와 선택적 집중투자의 대립구도를 제외하면 균형론이건 불균형론이건 경제발전전략은 생산성, 시장규모, 유발수요를 중시하고 있으며,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상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본유입이고,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 지역외자금의 유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자금 투입여부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논지에서 정부개입(공공성이 있는 계획기관)에 관해서는 균형론의 시각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기타 논점은 <표 2>에서 정리된 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 수립에 이용하고자 한다.

우선 고려할 사안은 현 강원도 서비스업 생산구조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강원도 서비스업 구도를 쇄신하며 성장의 동인을 창출할 업종을 강화 혹은 이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 전략의 결과적 차이점으로는 점진적 접근방식은 주로 기존 생산기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지요인이 강화될 경우 역외에서의 이용객이 늘어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코어서비스 조성에서는 생산기반의 강화 나아가 생산기반을 새로 구축하게 될 것이므로 상주인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상 효과는 결론에서 집약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성장조건과 코어서비스업의 조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 가. 현존 서비스업의 입지강화

강원도에 산재한 기존 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한 조건은 우선 공간경제에서 주요한 논점을 제공해 온 베버의 산업입지론(industrial location)에 근거한다. 베버의 선구적 논지인 산업집적, 연관산업 형성, 생산비용 최소화는 기본적인 성장요건이 되

는데, 이를 포괄하여 경제발전전략이 시사하는 서비스업 성장조건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장조건은 강원도 성장가능 서비스업종의 선별기준으로서 적용된다.

서비스업의 성장조건에서는 첫째,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생산비용은 수요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존 가능성 지표이고 포괄적 입지를 대표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이며, 업체의 부가가치를 결정한다. 지방기업일수록 경쟁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물류시스템의 미비 등 단점을 극복하고 지역간 경쟁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제조업에 비해 중간투입이 작으며, 부가가치투입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지이지만 서비스의 질(質)제고를 위해 적절한 인력의 투입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자본지원·영업지원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존재한다. 현재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강원도 서비스업종이 정부의 지원제도와 연계되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둘째, 균형·불균형론 모두에서 강조되었듯이 타산업 수요유발이 성장의 주요한 조건이 되는데 특히 안정적인 역내수요 창출은 성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주요한 부분은 유발수요부분이다. 다양한 연관산업이 존재하면 수요승수는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균형론은 동시 다발적 수요조건인, 불균형론은 선도산업의 수요조건이 중요하다. 일차산업·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산업연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수요연관구조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타산업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종은 깊은 수요연관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수요증대는 생산부문과 주민소득으로 환류된다.

LQ가 3이상 되어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기존연구도 있지만(Norcliff(1983)), 소비자서비스업은 인구규모와 비례하여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므로 LQ가 "1"을 중심으로 변동한다면 이러한 업종은 안정적이고 기초적인 역내수요는 확보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수요유발구조와 LQ 분석을 통하여 성장가능성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가 보장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일정 성장을 모색하고 지역적으로는 지역내(강원도) → 수도권 → 중국연안지역 등으로 점진적 시장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부연할 것은 지역의 시장규모(인구·소득)가 작기 때문에 역내시장을 찾는 수요계층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일수록 완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서비스 관련 제조업·서비스업의 집적이 필요하다. 연관산업이 집적되지 않았거나 기업저변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생산비용·물류이동·시장확보·영업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인적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일한 공간내에 집적된 경우 뿐 아니라 지역내에서 커넥션을 형성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발휘하는 집적화가 가능하다. 또한 집적·집중의 정도와 개념을 제조업에 준하여 평가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외양을 구비하고 적절한 인적구성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생산요소의 투입비중이 높으므로 제조업에 비하여 물리적·공간적 연관산업·산업집적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섯째, 소비패턴의 변화를 감안해야 하므로 민간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교육·의료보건·문화스포츠 등과 같이 소비비중이 점차 커지는 분야를 선별해야 한다.

이 조건은 생산성과 수요유발을 접목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소비비중이 증대되는 분야일수록 낙후지역에서도 시장이 확대되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려면 해당서비스업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아야 하는 조건이 수반된다. 물론 점유비중이 10%는 되어야 선도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GRDP 비중이 높은 업종이면 발전전략에서 제기되는 투자유인부재와 시장협소란 난제를 다소 완화하는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GRDP 비중, 즉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일 경우 균형론에서 제기되는 생산성 제고 등의 조건을 다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 창출에서 우위를 보이는 산업의 경우 일반적 생산성도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면 구매력을 높이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일곱번째, 서비스의 지역간 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은 지역의 인구와 소득에 비례하여 성장하며 생산기반이동의 비용이 매우 높아 지역간 거래가 매우 제한된다. 여기에서 균형론에서 제기된 국가간 교역제한철폐와 같이 강원도 서비스업의 관점에서 지역간 서비스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서도 지역간 이동이 증대되면 수요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여덟번째, 상품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상품·서비스는 탄생·표준화·사양화 단계를 거치며(Vernon의 상품주기론), 독점적 경쟁상품이라고 해도 표준화에 이르면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의 부침이 존재하게 된다. 검증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는 유보할 수 있지만 비교적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요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고정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상품은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수익모델창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한 신상품을 생산하는 서비스업종의 성장동력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부연하면 표준화된 제품은 타시도 서비스와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며, 표준화단계에는 대체재가 상당수 출현하게 된다. 지역간·지역내 경쟁은 출혈을 초래하므로 가능한 공간적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 경제권을 지향하는 신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혁신의 개념이 접목되는 신산업 성격의 서비스업종 특화가 필요하다는 논지이다.

아홉번째,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원은 필연적이다. 균형론에서는 초기 자본투자가 필요할 경우 외자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강원도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정책과 합치되거나 산업의 공공성이 입증되면 공공재·정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부문지원은 민간자본 유입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강원도에서 이를 제시할 수 있는 업종의 발굴이 필요하다. 2010·2013년 IRIO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투자규모에도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만약 허브구축을 의도한다면 지역균형시각도 역시 차후 서비스산업의 기반형성에 도움을 주겠지만 무리한 균형발전논리보다 주력산업의 필요성·성장성·공공성의 논리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혹자)와 올림픽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이벤트는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숙박서비스업, 음식 및 주류업, 일부 문화서비스업이나 의료 및 보건업에 영향을 미치는 하드·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올림픽 이후의 안정적 수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숙박서비스업, 음식 및 주류업 등의 시설과잉(자본유휴화)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sup>26)</sup>

경제발전전략 및 기존 입지론에 근거한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의 집적도 조건(LQ 3 이상)과 경제적 기여도 조건(GRDP 점유비중 10% 이상)을 충족시키는 서비스업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토대로 하여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식별하게 되면 현재 설정한 성장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보완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코어서비스 조성

기존 서비스업의 점진적 입지요인 강화는 사실상 서비스업의 연관업종이 상당수 준 구비·발전된 지역에서 여러 산업이 동시에 상호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전략을 선택할 경우 강원도의 산업구조로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타지역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이의 대안으로 코어서비스업 혹은 허브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산업연관관계의 의존률(dependency ratio)에 근거하여 개별사업(상품)이 완성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투입(상품·서비스)을 구비하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다. 주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상품개발: 대표상품의 속성과 연계상품군 파악
  1. 농산물/특산물(1차 상품군)
  2. 가공제품(2차 상품군)
  3. 서비스상품(3차 산업군)
  4. 연계상품군
- 지원서비스: 시장개척을 위한 대표상품의 부각(각인) 수단 확보
  1. 지역방송/지방지
  2. 중앙방송/중앙지
  3. 공익광고
  4. 순회홍보 등

26) 올림픽이 흑자로 이어지고 그 자본이 지역내 투자 특히 지속적으로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27) Hirshman(1960)이 균형론의 비판에서 제기한 논점 중 하나는 균형론이 주장하는 바의 금전적 외부효과는 여러 산업이 발전한 개발된 지역에서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강원도의 점진적 발전방안 역시 Hirshman이 비판한 바와 같이 강원도에 적합한 발전방안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존 영세규모 서비스업의 경우 공공부문으로서는 입지요인을 강화해줄 필요성과 당위성은 존재한다.

- 연관산업: 대표상품의 패키지화에 필요한 업종 분석 제시
  1. 음식업: 전통음식, 특색음식 등 차별화
  2. 숙박업: 여관·호텔·유스호스텔·이색(한옥/수변) 상품성에 맞게 고안
  3. 보완(사업)서비스업
  4. 연계서비스업: 소매업·교통(대체로 지역 SOC로 평가)

② 상품차별화의 조건: 강원도가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상품은 독점적 경쟁상품일 것이므로 경쟁대상이 매우 많지만 상품별 차별화방안을 모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수 있다.

- 입지적 특성: 상품의 적합성과 함께 특색있는 상품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유성·지역성을 부각시키는 조건이다.
- 제품차별화: 입지적 특성을 가진 상품이라도 어떻게 다른 제품보다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하다.
- 가격차별화: 입지적 고유한 특성이 있고 상품이 제품차별화의 견지에서 독창성을 가졌다고 해도 구입은 수요자가 하므로 가격이 적정해야 한다.
  - 가격에 크게 의존하는 상품(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이므로 다소 저렴하다 느낄 수준의 가격을 설정한다. 기존 정책·할인제도(경로·학생·단체·지역주민 등)의 수용여부 판단하도록 한다.

③ 마케팅: 서비스상품은 생산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상품의 특성(이동성이 매우 제한됨)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고를 축적하지 못한다. 우선 홍보로 수요층을 확보해야 한다.

- 재고개념 도입: 사용권 발행·사업에서 일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배달가능 상품화: 원격진료 등도 가능한 방안이나 영상홍보물과 특색상품 패키지화. 지자체차원·해당민간업체의 공공지원 차량은 가능할 것이다. 상품이 가지 못하면 사람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④ 재원조달: 서비스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투입자금에 비례한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원론은 국고·지자체 자금투입은 민간부문 자금유입의 조건. 상품성이 있는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을 취한다.

- 국고지원은 상품의 공공성(공공재·공익성)이 매우 높거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국가균형발전(지역간 균형발전), 접경지역·폐광지역·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보상형식일 때 가능할 것이다.
- 강원도 접경지역·폐광지역·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낙후지역의 경우 상품의 공공성이 확보되면 국비지원 요청이 가능할 것이다.
- 지역공공재일 경우 도·해당지자체의 자금투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상품 사용의 파급범위(전국적/지역적/개개인), 사용재의 성격유무,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⑤ 정부차원 공공구매제도의 연계 가능성: 공익성이 있거나, 특정지역의 개발, 중소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수요보장 측면의 제도 이용가능성을 검토한다.

- 예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기관(군납이 가능한 부분 포함) 등을 활용하는 안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유형의 상품 외에도 건설수주(입찰)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에 가까운 상품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공구매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 고유한 독자적 시장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상품의 경우 해당 산업군의 공공구매제도 이용 혹은 제도에의 편입을 검토하고 정부에 요구한다.
- 수요보장은 국비확보만큼이나 중요한 제도이므로 전략상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공공구매제도 품목에 포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적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시설관리비용만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공공부문의 수요창출 수단을 접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⑥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투입과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생산·부가가치·취업에서 현재는 고용/나아가 창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취업자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서비스는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므로 생산의 개념) 어떤 산업에서 수요가 유발되는가를 정량화하여 연관산업을 제시하고 해당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도록 방향을 정립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전략 수립과정에서 코어서비스업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했을 경우, 위에서 설정한 여섯 가지의 성장조건을 토대로 정성적 관점에서 산업연관관계와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V. 성장가능 서비스업종 분석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균형통계체제인 2013년 IRIO 모형(한국은행)을 이용한 중분류 수준의 분석을 우선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취업자 기준 LQ(Locational Quotient; 입지계수)<sup>28)</sup>분석을 실시하는데, 서비스업 집적도는 현재의 경제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한다. 서비스업종의 LQ분석을 통하여 성장성과 기본수요 유지정도를 평가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업이 집적될 정도로 성장이 가능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생산에서의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GRDP비중을 이용하여 지역내에서 해당 서비스업의 기여도 및 수요창출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서비스업의 소비패턴 변화도 향후 업종의 성장성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서비스업종 소비의 LQ를 판단하고자 한다. 동 지표분석은 해당 서비스업의 위상을 평가할 뿐 산업간 연관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후 수요-수요승수를 이용하여 지역산업간 수요유발구조를 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선별된 업종에 대하여 지역산업별 연관구조를 살펴보고 업종별 누출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세분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이론에서 설명되지 않은 경쟁구도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분석에서는 업종별 규모분석, LQ와는 달리 지역별 인구 규모로 본 세분류업종의 집적수준, 종사자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의 경쟁력평가를 포괄한다. 매출은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상품의 가치실현이 되는 판매를 포괄하는 지표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성장 가능성과 경쟁구도 평가를 종합하여 개략적인 시각에서 업종의 성장을 전망하기로 한다.

### 1. 성장가능성 평가

#### 가. 취업구조

강원도는 인구비중에 비하여 생산 및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업종 선별시 여러 지표가 가중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할 것이나 먼저 취업자 LQ를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LQ가 “1”보다 높을 경우 인구비례로 성장하는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 기본적인 지역내 수요는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취업자 LQ가 높을 경우 대체로 도내 평균임금이 타지역에 비하여 낮으므로 ‘저소득일자리’라는 비판의 여지는 존재하지만 실업률 측면에서 보면 타

28)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는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있는 중요도를 전국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LQ 값이 1 이상인 산업은 전국에 비해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임을 의미한다.

i지역의 j산업에 대한 LQ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LQ_{ij} = (X_i^j / X_i) / (X^j / X) *$$

\*  $X_i^j$  : i지역의 j산업 부가가치(산출액, 취업자 등),  $X_i$  : i지역의 지역내 총부가가치(산출액, 취업자 등),

$X^j$  : 전국의 j산업 부가가치(산출액, 취업자 등),  $X$  :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총 부가가치(산출액, 취업자 등)



당한 분석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강원도는 고용성장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고용을 중심으로 LQ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산은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지역외로의 수요누출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취업자 기준 LQ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분류>는 <표 3>을 참조).

<표 3> 산업부문분류

	산업(상품분류)	IRIO 소분류 번호		산업(상품분류)	IRIO 소분류 번호
1	작물	1-3	42	육상운송서비스	116-118
2	축산물	4-5	43	수상운송서비스	119
3	임산물	6	44	항공운송서비스	120
4	수산물	7	45	창고운송보조서비스	121-124
5	농림어업 서비스	8	46	음식점 및 주점	125
6	석탄원유천연가스	9-10	47	숙박서비스	126
7	금속 및 비금속광물	11-12	48	우편 서비스	127
8	식료품	13-20	49	유, 무선 통신서비스	128
9	음료품	21-22	50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29
10	담배	23	51	방송서비스	130
11	섬유 및 의복	24-28	52	정보서비스	131
12	가죽제품	29	53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32
13	목재및목제품	30-31	54	컴퓨터관리서비스	133
14	펄프 및 종이제품	32-34	55	출판서비스	134
15	인쇄 및 복제	35	56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135
16	석탄석유화학	36-48	5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36
17	고무제품	49-50	58	기타 금융기관	137
18	유리 및 유리제품	51	59	보험서비스	138
1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52-55	60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139
20	철강1차제품	56-57	61	주거서비스	140
21	철강가공제품	58-59	6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41
22	비철금속과1차제품	60-61	63	부동산관련 서비스	142
23	금속 주물	62	64	기계장비용품 임대	143
24	금속제품	63-66	65	연구개발	144
25	일반목적용기계	67-72	66	범우경영지원 서비스	145
26	특수목적용기계	73-77	67	광고	146
27	전기전자	78-88	68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147
28	가전	89	6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148
29	정밀기기	90-91	70	청소소독시설서비스	149
30	자동차	92-94	71	인력공급 및 알선업	150
31	선박	95	72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51
32	기타 운송장비	96-98	73	공공행정 및 국방	152
33	기타제조업임가공	99-100	74	교육서비스	153
34	전력신재생에너지	101	75	의료 및 보건	154
35	가스, 증기 및 온수	102-103	76	사회보험서비스	155
36	수도	104	77	사회복지서비스	156
37	폐수처리	105	78	문화서비스	157
38	폐기물재활용	106-107	79	스포츠오락 서비스	158
39	건물건설건축보수	108-110	80	사회단체	159
40	토목건설	111-114	81	수리서비스	160
41	도소매서비스	115	82	개인 서비스	161

LQ에서 특화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볼 때 3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전문화된 지역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해외연구도 있지만<sup>29)</sup> 본고에서는 우선 기본적인 수요분석을 위하여 “1”이상의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대체로 인구

29) Norcliff(1983) 참조.

비례로 성장하는 소비자서비스업과 인구 및 정부정책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공행정 및 국방은 1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요가 유발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입지적 우위요인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표 4> 참조).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의 집적도는 대체로 1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구에 비례한 소비는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장 서비스업은 단기지만 2010~2013년 간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서비스업중에서 비교적 기여도가 높은 숙박업은 4.1의 집적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은 약 1.7 정도 집적도를 보이고 있어 고용기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 1.0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있지만 의료 및 보건업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균형적 기반보다는 작은 '0.8' 정도의 낮은 집적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복지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해당서비스업의 집적도가 낮은 것은 특정사업의 집행 내지는 공공부문이 시급하게 서비스를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집적도는 0.6~0.7 이하로 분석되며 변동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종은 생산기반 취약이란 측면 외에도 역내 주변 제조업기반·연관산업 미흡 등 성장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중기적으로는 성장전망이 밝지 않다.

수요유발구조에서는 중위수준의 효과를 보이며 자급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의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업종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입지론에 근거하면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은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비례로 성장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동산업의 집적도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수요는 창출되고 있으며, 업종의 특화를 토대로 하여 타지역과의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단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강원도 서비스업의 LQ: 2013 · 2010 IR10 데이터

		생산			부가가치			취업자		
		2010	2013	증가율 (%) <sup>1)</sup>	2010	2013	증가율 (%) <sup>1)</sup>	2010	2013	증가율 (%) <sup>1)</sup>
1	숙박서비스	6.8	6.7	-1.3	5.7	5.6	-1.5	4.2	4.1	-3.0
2	공공행정 및 국방	2.9	2.6	-8.5	2.0	2.0	2.7	1.6	1.7	3.2
3	스포츠오락 서비스	3.1	3.0	-3.5	3.1	2.5	-17.9	1.6	1.7	4.5
4	부동산관련 서비스	1.1	1.1	-2.0	0.9	0.8	-4.6	1.7	1.6	-2.7
5	유, 무선 통신서비스	1.7	1.3	-23.4	1.3	1.0	-22.8	1.1	1.4	32.6
6	문화서비스	1.2	1.3	9.7	0.9	1.0	15.3	1.4	1.4	2.7
7	기계장비용품 임대	1.3	1.2	-7.7	1.0	0.8	-12.0	1.4	1.4	-0.6
8	사회복지서비스	2.5	2.5	-0.9	2.2	1.9	-12.9	1.4	1.4	-3.4
9	우편 서비스	1.2	1.2	-1.9	0.9	0.9	7.5	0.8	1.4	73.0
10	음식점 및 주점	2.0	2.0	-3.0	1.7	1.7	-2.5	1.2	1.2	-2.8
11	사회단체	1.7	1.7	5.2	1.3	1.3	-0.2	1.2	1.2	0.1
12	교육서비스	2.1	2.2	5.1	1.8	1.7	-2.9	1.1	1.1	5.1
13	수리서비스	1.6	1.7	3.6	1.3	1.3	-1.2	1.1	1.1	1.2
14	방송서비스	1.2	1.0	-12.4	1.1	0.9	-23.0	1.3	1.1	-13.7
15	개인 서비스	1.7	1.6	-4.9	1.4	1.3	-5.1	1.1	1.1	-7.3
16	청소소독시설서비스	1.6	1.7	3.2	1.3	1.3	-0.2	0.8	1.0	23.7
1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1	1.1	-1.7	0.9	0.9	-2.6	1.0	1.0	-3.9
18	육상운송서비스	1.3	1.2	-9.3	1.1	1.0	-9.0	1.0	0.9	-5.1
19	보험서비스	1.6	1.5	-1.3	1.2	1.2	-3.7	0.9	0.9	-6.9
20	도소매서비스	1.0	0.9	-5.5	0.9	0.9	6.5	0.9	0.9	-2.8
21	사회보험서비스	1.6	1.6	-1.9	1.3	1.2	-3.5	0.9	0.9	-4.9
22	의료 및 보건	1.7	1.6	-6.8	1.3	1.3	-1.9	0.9	0.8	-7.9
23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0.5	0.5	8.6	0.4	0.4	5.5	0.6	0.8	35.3
24	기타 금융기관	0.6	0.6	1.2	0.6	0.5	-3.9	0.7	0.7	2.3
25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0.9	1.0	2.8	0.8	0.8	6.9	0.8	0.7	-16.6
26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0.5	0.5	-4.2	0.4	0.4	-3.7	0.6	0.6	-0.5
27	정보서비스	0.3	0.2	-11.0	0.2	0.2	-13.9	0.6	0.6	-2.1
28	기타사업지원서비스	0.9	0.9	-5.3	0.8	0.7	-12.1	0.5	0.6	14.4
29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0	1.1	9.8	1.0	0.8	-17.3	0.5	0.5	-2.8
30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0.5	0.5	-10.4	0.4	0.4	-15.9	0.4	0.5	19.9
31	연구개발	0.6	0.5	-7.6	0.4	0.4	-5.4	0.5	0.4	-14.9
3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0.2	0.2	7.9	0.2	0.2	5.8	0.4	0.4	8.6
33	인력공급 및 알선업	0.5	0.6	19.9	0.4	0.5	16.7	0.3	0.4	45.5
34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0.6	0.6	3.8	0.5	0.5	0.9	0.5	0.4	-17.3
35	출판서비스	0.4	0.4	-18.3	0.3	0.3	-21.5	0.4	0.4	-11.7
36	수상운송서비스	0.5	0.5	-12.1	0.6	0.5	-19.6	0.3	0.4	29.4
37	소프트웨어개발공급	0.2	0.3	18.3	0.2	0.2	18.2	0.2	0.2	41.6
38	컴퓨터관리서비스	0.4	0.3	-35.1	0.3	0.2	-33.9	0.3	0.2	-29.2
3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0.0	0.2	902.3	0.0	0.1	977.3	0.0	0.2	1,920
40	광고	0.2	0.2	15.2	0.1	0.2	18.6	0.2	0.1	-9.5
41	항공운송서비스	0.0	0.0	-30.1	0.0	0.0	-10.2	0.1	0.1	-16.7
42	주거서비스	0.6	0.6	-2.7	0.5	0.4	-12.5	0.0	0.0	0.0

주: 1) 증가율(%) = (2013년 LQ/2010년 LQ-1) \*100  
 자료: 한국은행

## 나. 소비구조

최종수요에는 민간소비·정부소비·투자·수출이 포함된다. 전국 최종수요분석에서는 산업별 최종수요 비중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며, 강원도 분석에서는 短期지만 2010~2013년간 최종수요 비중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도록 한다. 거시경제의 순환구조에서 타지역과의 비교해보면 강원도 최종수요의 전국 대비 비중은 2.6%로

이는 인구비중 3.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1인당 최종수요의 전국 평균대비 비율도 87%로 평균소비를 밑돌고 있어 시장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최종수요에 대한 지역내 공급비율은 60.6%로 전국 평균 67.0%에 비해서 매우 낮아 지역경제의 생산기반 역시 취약함을 반영하고 있다(2013년 생산 점유비중 1.6%). 수요는 있으나 지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유인이 매우 작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여건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저성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지역별 서비스업 최종수요: 2013년 IRIO 데이터

(단위: %)

	지역별최종수요 전국대비비중	인구비중	1인당소비 전국 평균대비비율	지역내공급비율	수입비율
서울	28.2	19.8	142	83.4	2.8
인천	5.5	5.6	97	58.9	3.7
경기	22.1	23.9	92	61.9	4.5
대전	3.4	3.0	114	58.3	4.6
충북	2.6	3.3	78	57.4	4.1
충남	3.3	4.0	81	58.2	3.4
광주	2.6	2.9	90	60.7	4.0
전북	3.1	3.7	86	59.6	3.8
전남	3.3	3.7	88	57.1	3.5
대구	4.0	4.9	82	61.8	4.0
경북	4.5	5.3	86	54.1	4.0
부산	6.3	6.9	91	68.6	3.7
울산	2.2	2.3	95	58.7	3.7
경남	5.2	6.5	80	57.1	4.1
강원	2.6	3.0	87	60.6	3.6
제주	1.2	1.2	100	69.1	3.2
전국	100.0	100.0	-	67.0	3.7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최종수요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소비자서비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은 2010~2013년간 점유비중도 높아졌으며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주요한 지출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LQ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공공행정 및 국방의 높은 비중은 강원도에서는 사경제의 비중이 낮는데 기인한다. 또한 동 산업은 인구 및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동산업의 입지요인이 경쟁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서비스업의 입지요인이 우월하다는 것을 통해 동산업이 강원도 서비스·총량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 및 LQ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강원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자서비스업은 제조업을 배후로 하여 성장하는 산업이므로 2013년 제조업 비중이 취업자 기준 7.0%에 불과한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인 금융·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법무경영지원업 등은 1.0%를 하회하는 수준에 있어 강원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역내 상품공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산기반 취약성에 따라 지역내 수요가 많이 누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점유비중이 높은 강원도 서비스업에서 주거서비스·도소매업·음식점 및 주점의 경우 도내 자급비율은 각각 27.9%, 15.7%, 29.9%로 낮아 도내 주력업종의 내부공급비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강원도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2010·2013 IRIO 데이터

(단위: %, %p)

연번	산업별종합	구성비 (%)	비중변화 (%p)	LQ	지역내공급 (%)	수입 (%)
1	공공행정 및 국방	17.5	1.76	1.57	99.9	0.0
2	교육서비스	14.2	1.70	1.26	76.1	3.8
3	주거서비스	11.8	1.58	1.10	27.9	1.3
4	도소매서비스	9.5	1.23	0.82	15.7	0.0
5	의료 및 보건	8.2	1.01	1.00	78.3	0.4
6	음식점 및 주점	7.0	0.72	1.09	29.9	8.4
7	보험서비스	3.2	0.39	0.99	82.3	0.3
8	연구개발	3.1	0.12	0.40	30.8	8.9
9	사회복지서비스	3.0	0.66	1.45	93.6	0.3
10	소프트웨어개발공급	2.6	0.63	0.92	8.6	8.9
11	스포츠포락 서비스	2.4	0.21	1.16	59.2	2.8
12	육상운송서비스	2.4	0.06	0.96	64.2	5.2
13	숙박서비스	1.7	0.19	1.53	60.0	39.6
14	개인 서비스	1.5	0.20	1.03	86.9	0.9
15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3	-0.08	0.99	71.3	3.8
16	유, 무선 통신서비스	1.2	-0.27	0.75	88.4	1.6
17	사회단체	1.2	0.18	1.10	91.0	0.8
18	수리서비스	1.1	0.09	1.01	85.2	0.5
19	기타 금융기관	0.9	-0.06	0.97	41.1	3.6
20	문화서비스	0.7	0.12	0.88	55.6	13.4
21	부동산관련 서비스	0.6	0.08	0.86	66.1	0.9
2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0.5	-0.05	0.81	13.7	0.0
23	수상운송서비스	0.5	-0.39	0.19	93.0	0.7
24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0.5	-0.04	0.88	36.3	3.4
25	기타사업지원서비스	0.4	0.05	0.40	38.7	48.0
26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0.4	0.09	1.05	35.9	0.2
27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0.4	0.07	0.89	17.1	5.5
28	방송서비스	0.3	0.10	0.91	81.2	0.6
29	항공운송서비스	0.3	0.04	0.26	0.4	95.1
30	출판서비스	0.3	-0.03	0.90	5.6	36.3
31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0.3	0.03	0.67	76.1	0.6
32	정보서비스	0.3	0.08	0.95	18.2	0.2
33	사회보험서비스	0.2	0.02	0.92	100.0	0.0
34	기계장비용품 임대	0.2	0.04	0.48	62.2	0.4
35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0.1	0.02	0.35	52.5	0.3
36	청소소독시설서비스	0.1	0.01	0.76	76.9	0.7
37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0.1	0.03	1.23	13.2	3.5
38	인력공급 및 알선업	0.1	0.01	0.51	51.6	0.3
39	광고	0.0	0.00	0.16	20.2	0.6
40	우편 서비스	0.0	0.00	0.68	85.6	0.4
41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0.0	0.00	0.02	68.3	0.0
42	컴퓨터관리서비스	0.0	0.00	0.02	56.7	2.0
	서비스 전산업	-	-	-	60.7	3.6

### 다. GRDP분석

생산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서비스 전산업 부가가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0%로 나타나고 있는바 전국 평균 55.1%를 5%p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기반(2013년 생산의 전국대비비중 2.1%, 부가가치의 전국대비 비중 2.2%)은 취약한 반면 부가가치율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부가가치 생산요소 투입비율이 높다는 것은 생산기반을 확충할 경우 강원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지역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2013년 IR10 데이터

(단위: %)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
서울	52.6	전남	57.5
인천	48.8	대구	57.3
경기	56.7	경북	58.5
대전	57.4	부산	55.9
충북	59.0	울산	53.2
충남	58.6	경남	59.3
광주	57.6	강원	60.0
전북	59.9	제주	59.7
전국		55.1	

자료: 한국은행

업종별 분석에서는 서비스업의 강원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GRDP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과 소비자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서비스업에서는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종인 교육·의료 및 보건·사회복지업 등이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문화서비스업·출판서비스업의 GRDP 비중은 각각 0.3%, 0.1%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 사적 경제를 대표하는 해당부문의 침체는 전반적인 강원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서 향유하는 정도가 높아지는(지출비중이 높아지는) 문화산업은 미래 고용창출이 무한한 부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강원도 내부 시장도 작지만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발달된 문화서비스업은 강원도가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울뿐더러 생산기반 자체의 마련이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된다.<sup>30)</sup>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생산자서비스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도 서비스업 GRDP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도 높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가가치율은 66.5%로 전국 및 강원도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을 상회하고 있다. 상품의 유통·공급측면에서 도소매업의 확충은 소득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도내에서 생산된 상품·서비스의 이출입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연계된 물류산업(수송·보관 등)의 성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반적

30) 강릉 커피거리는 식·음료업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요소를 갖춘 문화서비스 기능을 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며 형성된 문화기반을 찾는 것이 그 요인을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나 기회비용이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강원도의 입지상 주변·내부에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은 일정부분 역할은 하겠지만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8> 강원도 서비스업의 GRDP: 2010·2013 IRIO 데이터

(단위: %, %p)

연번		GRDP 구성비 (%)		GRDP 구성비변화 (%p)		부가가치율 (%)	
		강원	전국	강원	전국	강원	전국
1	공공행정 및 국방	20.6	11.0	2.4	0.8	76.4	77.6
2	교육서비스	14.8	9.4	-0.6	-0.3	74.2	73.1
3	도소매서비스	13.1	15.3	1.3	0.4	66.5	51.5
4	의료 및 보건	6.5	5.6	0.3	0.2	54.1	52.6
5	음식점 및 주점	6.3	4.0	0.1	0.1	39.4	35.6
6	주거서비스	3.9	9.7	-0.5	0.0	73.5	80.9
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3.8	4.6	-0.8	-1.0	79.5	73.5
8	스포츠오락 서비스	3.0	1.3	-0.8	-0.1	52.5	48.5
9	숙박서비스	3.0	0.6	0.0	0.0	66.8	62.0
10	육상운송서비스	2.8	3.1	-0.4	-0.2	46.6	43.2
11	보험서비스	2.3	2.1	0.2	0.2	35.9	36.9
12	사회복지서비스	1.9	1.1	-0.1	0.1	45.1	44.9
13	연구개발	1.7	4.2	0.2	0.6	58.2	57.5
14	유, 무선 통신서비스	1.6	1.7	-0.8	-0.3	36.6	35.6
15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5	1.9	-0.3	0.0	45.8	46.9
16	수리서비스	1.4	1.1	0.0	0.0	43.2	43.9
17	개인 서비스	1.3	1.1	0.0	0.0	58.3	57.3
18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0	1.6	-0.1	0.0	58.6	58.3
19	청소소독시설서비스	0.9	0.8	0.1	0.0	73.0	72.6
20	사회단체	0.8	0.7	0.0	0.0	44.2	44.6
21	부동산관련 서비스	0.8	1.1	0.0	0.0	85.9	85.7
22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0.7	0.9	0.0	-0.1	58.0	53.4
23	기타 금융기관	0.7	1.3	0.0	0.0	44.8	37.6
24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0.7	1.6	0.0	0.0	72.3	70.4
25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0.6	1.7	0.0	0.0	67.5	66.1
26	인력공급 및 알선업	0.6	1.2	0.1	0.0	80.5	79.1
27	문화서비스	0.6	0.6	0.1	0.0	55.0	55.1
28	기계장비용품 임대	0.6	0.7	-0.1	0.0	51.1	53.9
29	부동산 임대 및 공급	0.5	3.2	0.0	0.0	59.0	61.1
30	방송서비스	0.4	0.5	-0.1	0.0	46.2	42.0
31	소프트웨어개발공급	0.4	2.2	0.1	0.2	62.5	60.5
32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0.3	0.8	-0.1	-0.5	43.2	45.9
33	사회보험서비스	0.2	0.2	0.0	0.0	58.7	58.8
34	우편 서비스	0.2	0.2	0.0	0.0	71.2	68.9
35	수상운송서비스	0.1	0.3	-0.2	-0.2	13.1	9.4
36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0.1	0.3	0.0	0.1	34.7	34.9
37	컴퓨터관리서비스	0.1	0.5	0.0	0.0	35.3	37.2
38	정보서비스	0.1	0.5	0.0	0.0	41.9	41.3
39	출판서비스	0.1	0.3	0.0	0.0	31.9	32.7
40	광고	0.0	0.2	0.0	0.1	21.3	17.7
41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0.0	0.2	0.0	0.0	32.5	34.9
42	항공운송서비스	0.0	0.5	0.0	-0.2	24.5	22.0
	전산업	100.0	100.0	0.0	0.0	60.0	55.1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라. 수요유발구조: IRIO 수요-수요승수

강원도의 전산업 수요유발효과는 총효과(지역내 효과와 지역의 효과의 합)는 180억원(82개 산업 100억원 투입시 평균유발효과)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9> 참조).<sup>31)</sup> 강원도의 지역내효과 비율은 전국 평균 65.8%에 비해 다소 낮은 64.0% 수준이며 지역내 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 115억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원도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투입(원·부자재)의 지역내 자급도가 낮는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 수요유발효과에서 총효과는 전산업 평균 168억원으로 전국 평균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산업 기준 지역내효과는 전국 평균 70.9%에 비해 다소 낮은 69.5%에 머물고 있으며, 유발효과는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낮은 지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표 9> 지역별 수요유발효과: IRIO 수요-수요승수분석

(단위: 억원, %)

	전산업			서비스업		
	지역내효과 (억원)	총효과 (억원)	비율(%)	지역내효과 (억원)	총효과 (억원)	비율(%)
서울	124	183	67.6	129	170	75.8
인천	120	182	66.1	121	171	70.5
경기	126	180	70.2	126	169	74.3
대전	113	184	61.5	116	168	68.9
충북	115	181	63.7	117	169	69.3
충남	119	180	66.0	118	168	70.2
광주	115	184	62.7	118	170	69.4
전북	118	181	65.2	118	167	70.7
전남	120	179	66.9	117	168	69.6
대구	118	182	64.7	120	168	71.3
경북	119	180	66.1	117	167	70.2
부산	120	179	67.1	122	167	72.9
울산	118	181	65.3	118	170	69.5
경남	122	179	68.6	122	168	72.8
강원	115	180	64.0	117	168	69.5
제주	115	173	66.6	118	168	70.1
평균	119	180	65.8	120	169	70.9

지역내 효과를 기준으로 서비스 업종별 수요유발효과를 평가하면(<표 10> 참조) 가장 내부화 비율이 높은 산업을 성장 가능업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내 생산자서비스업의 지역내 효과는 상위그룹(1~9번)과 하위그룹(37~42번)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적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은 대체로 중위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간주되어 온 관광업과 연계된 산업 역시 중위수준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 역시 중위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단일업종으로는 비교적 지출규모가 큰 공공행정 및 국방의 자급도는 81%로 높은 수준에 있지만 총효과, 즉 수요유발효과가 작기 때문에 내부화 비율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분석에서 제기되는 Holmes·Stevens가설을 적용하면 강원도의 경우 제조업의

31) Hirshman류의 불균형론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유발수요구조의 분석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RIO 수요~승수분석 방법론과 구도는 <부록>에 수록하고 있다.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연관산업의 생산기반 역시 취약한 상황에 있으므로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이다. 즉 생산자서비스업의 지역내 수요유발 효과는 크지만 주변 대도시와의 경쟁에도 불리하며 생산자서비스업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역내 서비스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산업의 우선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인구비례로 성장하게 되는 소비자서비스업은 중위수준의 수요유발효과를 보이지만 이는 도내에서 기본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지역고착적인 수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래인구전망에 근거할 때 도내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선 도내에서 기존업종의 구조고도화와 동시에 해당 산업간 연계를 추진하여 연관관계를 높이는 방안에서 단초를 찾아 성장하는 균형론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취약한 공간구조, 즉 접경지역·폐광지역·일부 상수원보호지역 등 상황과 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하면 보다 개연성이 있는 공적 소비자서비스 영역은 개발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보건·교육·사회복지 등의 산업은 공익성이 있으며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별 지분을 요구할 분야가 있고, 특히 집적도(LQ)가 낮은 의료보건분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입으로 육성할 명분도 존재한다고 본다.<sup>32)</sup>

<표 10> 강원도 서비스업의 수요유발효과: IRIO 수요-수요승수분석

(단위: 억원,%)

연번	산업	총효과 (억원)	지역내 효과 (억원)	비율 (%)	연번	산업	총효과 (억원)	지역내 효과 (억원)	비율 (%)
1	광고	236	150	63.7	22	문화서비스	170	116	68.5
2	보험서비스	190	129	68.2	23	도소매서비스	154	116	75.2
3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210	129	61.4	24	건축토목관련서비스	158	116	73.2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64	128	78.1	25	육상운송서비스	170	115	67.4
5	기타 금융기관	182	125	68.7	26	연구개발	161	114	71.1
6	정보서비스	195	124	63.7	27	범무경영지원 서비스	145	114	78.8
7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180	123	68.2	28	수리서비스	201	114	56.8
8	사회단체	193	122	62.9	29	공공행정 및 국방	139	113	81.1
9	창고운송보조서비스	187	122	65.0	30	의료 및 보건	167	112	67.2
10	주거서비스	142	121	84.8	31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44	112	77.3
11	사회보험서비스	167	121	72.3	32	기타과학기술서비스	144	111	76.9
12	사회복지서비스	186	121	64.8	33	개인 서비스	169	111	65.4
13	유, 무선 통신서비스	189	121	64.0	34	숙박서비스	154	110	71.5
14	방송서비스	169	119	70.7	35	교육서비스	141	110	77.9
15	음식점 및 주점	202	119	58.8	36	인력공급 및 알선업	133	109	82.0
16	컴퓨터관리서비스	197	118	60.2	37	중앙은행예금취급	128	108	84.4
17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65	118	71.9	38	청소소독시설서비스	141	108	76.5
18	스포츠오락 서비스	178	117	65.9	39	부동산관련 서비스	121	107	88.3
19	기계장비용품 임대	168	117	69.5	40	수상운송서비스	145	106	73.1
20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201	117	58.1	41	우편 서비스	133	105	79.3
21	출판서비스	200	116	58.1	42	항공운송서비스	140	101	72.3

32) 제주의 헬스케어타운 형식의 개발방향도 모색할 수 있는데 수요계층 및 내용에서 제도와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 마. 성장가능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성장성은 현재의 집적수준·GRDP기여도·소비비중·수요유발효과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지표간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지수화하기 어려운 범주가 개제되는 한편 상당수준의 정성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 배제되는 산업은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특정업종의 높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지표상 나타나는 미비점(결함)은 전략차원에서 동업종의 성장을 위하여 공공부문·해당 민간부문이 마련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할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분석에서 공공행정 및 국방은 정부의 정책 및 인구규모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자서비스는 지역내 제조업 생산기반의 규모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며, 소비자서비스업은 인구규모와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입지패턴이다.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종은 상당 수준 인구규모에도 비례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배려, 민간부문의 비중에 따라서 그 지원규모가 규정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입지조건 외에도 현재 시점에서 인구규모와 생산기반 존재여부를 조건으로 부가한다. 예를 들면 물류서비스는 SOC가 건설되어 수요를 창출하는 경향도 물론 존재하지만 공간적 입지가 규정되어 있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현재의 기반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지역 경제의 성장성을 결정하는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강원도의 서비스업종의 분석에서 보면(<표 11> 종합표 참조) 취업자기준 LQ, GRDP 비중, 최종수요비중 및 변화경향으로 판단할 때 <공공행정 및 국방>,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에서 교육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에서는 숙박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자서비스업>에 속하는 도소매서비스업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3)</sup>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생산자서비스업 성장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첫째, 강원도의 제조업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전국 전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50.1%, 부가가치 30.1%, 취업자 15.7%이지만 강원도의 그 비중은 각각 23.5%, 10.9%, 7.0%에 불과한 수준이다. 둘째, 중간투입이 많은 제조업은 유통·물류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제조업 기반이 미비하여 이러한 산업의 성장계기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조업에서도 생산자서비스 투입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제조업 미비로 인하여 그러한 성장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하여 낮은 상황에 있는바 전국 및 강원도의 생산자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은 각각 25.9%와 20.8%, 부가가치비중은 각각 38.1%와 25.8%, 취업자비중은 각각 15.7%와 7.0%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에 적합한 서비스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업>에 속하는 도소매서비스업은 경제구조의 생산·유통·소비 축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분야지만 강원도에서는 소비시장·제조업생산기반·공간적 괴리 등으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그 성장가능성이 그다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3) 도소매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소비자서비스업으로도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은 인구·정부정책·공간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서비스업으로 공공부문의 증대는 유망서비스업을 선별하는 연구에서는 외생부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당분야도 성장하는 산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에서 교육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각기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교육사회복지 예산을 감안하면 경제규모가 작고 낙후된 지자체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역할에 따라 경제성장경로와 주민생활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사적경제의 성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원도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의 성장촉진책에서 차선·최선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표 11>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성 분석: 2010·2013년 IRIO 데이터 및 승수분석

(단위: %, %p, 억원)

		취업자		GRDP		최종수요		수요유발효과
		LQ	LQ 변화(%)	구성비 (%)	변화 (%p)	구성비 (%)	변화 (%p)	지역내수요 (억원)
41	도소매서비스	0.9	-3	13.1	1.3	9.5	1.2	116
42	육상운송서비스	0.9	-5	2.8	-0.4	2.4	0.1	115
43	수상운송서비스	0.4	29	0.1	-0.2	0.5	-0.4	106
44	항공운송서비스	0.1	-17	0.0	0.0	0.3	0.0	101
45	창고운송보조서비스	0.5	-3	1.5	-0.3	0.3	0.0	122
46	음식점 및 주점	1.2	-3	6.3	0.1	7.0	0.7	119
47	숙박서비스	4.1	-3	3.0	0.0	1.7	0.2	110
48	우편 서비스	1.4	73	0.2	0.0	0.0	0.0	105
49	유, 무선 통신서비스	1.4	33	1.6	-0.8	1.2	-0.3	121
50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0.2	1920	0.0	0.0	0.1	0.0	129
51	방송서비스	1.1	-14	0.4	-0.1	0.3	0.1	119
52	정보서비스	0.6	-2	0.1	0.0	0.3	0.1	124
53	소프트웨어개발공급	0.2	42	0.4	0.1	2.6	0.6	112
54	컴퓨터관리서비스	0.2	-29	0.1	0.0	0.0	0.0	118
55	출판서비스	0.4	-12	0.1	0.0	0.3	0.0	116
56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0.5	20	0.1	0.0	0.4	0.1	117
5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0	-4	3.8	-0.8	1.3	-0.1	108
58	기타 금융기관	0.7	2	0.7	0.0	0.9	-0.1	125
59	보험서비스	0.9	-7	2.3	0.2	3.2	0.4	129
60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0.8	35	0.3	-0.1	0.5	0.0	123
61	주거서비스	-	-	3.9	-0.5	11.8	1.6	121
6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0.4	9	0.5	0.0	0.5	-0.1	128
63	부동산관련 서비스	1.6	-3	0.8	0.0	0.6	0.1	107
64	기계장비용품 임대	1.4	-1	0.6	-0.1	0.2	0.0	117
65	연구개발	0.4	-15	1.7	0.2	3.1	0.1	114
66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0.4	-17	0.7	0.0	0.1	0.0	114
67	광고	0.1	-10	0.0	0.0	0.0	0.0	150
68	건축 도목 관련서비스	0.7	-17	0.7	0.0	0.0	0.0	116
6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0.6	0	0.6	0.0	0.4	0.1	111
70	청소소독시설서비스	1.0	24	0.9	0.1	0.1	0.0	108
71	인력공급 및 알선업	0.4	46	0.6	0.1	0.1	0.0	109
72	기타사업지원서비스	0.6	14	1.0	-0.1	0.4	0.1	118
73	공공행정 및 국방	1.7	3	20.6	2.4	17.5	1.8	113
74	교육서비스	1.1	5	14.8	-0.6	14.2	1.7	110
75	의료 및 보건	0.8	-8	6.5	0.3	8.2	1.0	112
76	사회보험서비스	0.9	-5	0.2	0.0	0.2	0.0	121
77	사회복지서비스	1.4	-3	1.9	-0.1	3.0	0.7	121
78	문화서비스	1.4	3	0.6	0.1	0.7	0.1	116
79	스포츠포락 서비스	1.7	5	3.0	-0.8	2.4	0.2	117
80	사회단체	1.2	0	0.8	0.0	1.2	0.2	122
81	수리서비스	1.1	1	1.4	0.0	1.1	0.1	114
82	개인 서비스	1.1	-7	1.3	0.0	1.5	0.2	111

인구규모와 공적 소비자서비스는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해당서비스업의 생산기반 강화를 상당 수준의 합리적·논리적 세련화가 필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부문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비중도 높고 LQ도 높지만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며, 인지도면에서도 장래 학령인구의 감소추세에서도 강원도가 비교우위를 갖기 어려운 분야로 판단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성장을 유발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내 수요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산업으로 판단된다. 의료 및 보건분야는 GRDP비중이 높아 성장가능성이 크고 소비지출면에서도 증가세가 보이는 산업이다. 이 분야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한다.

유망서비스업에서 숙박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이 속한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이 사실상 강원경제의 성장경로를 결정할 분야이다. 중장기적 전망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2013년 기준 서비스업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70.5%에 버금가는 68.9%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고용성장 없는 성장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노동의 자본대체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공공부문의 예산을 감안하면 고용·자영 등 취업에서 강원도 사(私)경제의 육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경제규모로 보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는 사경제가 좌우할 것이므로 최소한 서비스업에서 사경제의 성장단초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이탈할 경우 경제구조의 재편 혹은 경제의 재생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의 증대는 사적 소비자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므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시장개척·시장형성을 타겟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성장이 유망한 분야로 평가되는 서비스업분야의 지역산업간 수요유발구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현재 강원도 서비스업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업종의 지역내 수요누출 비중은 19.9~42.3%에 달하고 있다. 전국 서비스업의 평균누출은 약 33%에 달하며, 강원도 서비스업의 평균누출은 약 40%로 성장가능 서비스업의 누출은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의 누출은 42.3%에 달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장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평가되는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35.2%에 이른다(<표 12> 참조). 지역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의 누출비중이 약 15~18%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기반 및 연관산업이 잘 갖추어진 서울로의 누출이 8~10%에 이르고 있으며, 간선망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강원도의 누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가 지역고착적이며 거래비용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고 해도 서울의 서비스재 생산·질·범위 등에서 강원도가 더욱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

<표 12> 성장가능 서비스업의 지역별 주입·누출비중: IRI0 기본승수 분석

(단위: %)

	도소매	음식점 주점	숙박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서비스	의료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문화 서비스	스포츠 오락
서울	8.4	8.1	7.5	4.8	6.3	8.2	8.2	10.2	8.9
인천	2.1	3.2	2.7	1.2	1.8	1.9	3.3	2.0	2.5
경기	5.6	8.7	6.1	4.1	5.3	8.5	7.6	6.5	7.8
대전	0.4	1.0	1.3	0.3	0.3	0.7	0.6	0.6	0.8
충북	0.7	1.9	1.9	0.6	0.8	2.1	1.3	1.2	1.3
충남	1.9	4.1	2.5	1.8	2.1	4.5	3.4	2.7	3.4
광주	0.2	0.4	0.2	0.2	0.2	0.3	0.3	0.2	0.3
전북	0.4	1.7	0.5	0.5	0.5	0.6	1.0	0.9	1.2
전남	1.1	2.8	1.4	1.3	1.2	2.1	2.2	1.5	1.6
대구	0.4	0.7	0.7	0.4	0.3	0.5	0.6	0.7	0.6
경북	1.2	3.3	1.2	1.6	1.2	1.4	2.5	1.6	2.1
부산	0.7	1.4	0.7	0.6	0.6	0.8	1.1	1.0	0.9
울산	1.2	1.4	1.4	1.3	1.4	1.5	1.8	1.6	1.6
경남	0.9	2.8	1.4	1.1	1.0	1.0	2.1	1.2	1.6
강원	74.4	57.7	70.4	80.1	76.9	65.9	63.6	67.8	64.8
제주	0.3	0.7	0.1	0.1	0.1	0.2	0.3	0.3	0.3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누출	25.6	42.3	29.6	19.9	23.1	34.1	36.4	32.2	35.2

개별상품의 지역산업별 누출구조를 보면 수요가 지역산업별로 분산되기 때문에 지역산업을 특정하기 어렵다. 서비스업도 연관산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성·고유성을 확보하더라도 중간재 조달측면에서의 대응도 쉬운 것이 아니다(<표 13> 참조). 우선 도내 연관산업간 연계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전에 언급한대로 생산량·서비스의 질·서비스의 범위 등에서 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강원도 문화서비스업의 생산유발규모에서 강원 문화서비스업 비중이 58.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산업간 연관관계에서 유발되는 생산유발규모는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7%, 서울 도소매서비스업 1.6%, 서울 출판서비스업 1.2%, 울산 석탄석유화학업 1.1%, 충남 석탄석유화학업 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지역·타산업에서 중간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누출로서 간주된다. 음식점 및 주점업은 지역내 산업내 유발효과는 제시된 산업에서 가장 낮은 48.4%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역외로 누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누출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내 생산연관구조의 강화, 즉 지역내 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제조업보다는 유연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필수중간재 조달구조의 변화는 심한 경우 생산공정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재 공급구조(거래선)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반대급부의 수요창출(최종재 구매)이 더 손쉬운 방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간재를 조달하는 지역산업이 다양하므로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연관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성장가능 서비스업의 지역산업별 주입·누출구조(%): IRIO 기본승수 분석

(단위: %)

도소매			음식점 및 주점			숙박서비스		
지역	산업	비중	지역	산업	비중	지역	산업	비중
강원	도소매서비스	64.0	강원	음식점 및 주점	48.4	강원	숙박서비스	63.7
강원	유, 무선 통신서비스	2.2	서울	도소매서비스	3.0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2.0
서울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7	강원	식료품	2.9	서울	도소매서비스	1.4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1	경기	식료품	2.7	강원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3
서울	도소매서비스	1.0	서울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6	인천	가스, 증기 및 온수	1.2
울산	석탄석유화학	0.9	충남	식료품	1.4	울산	석탄석유화학	1.1
충남	석탄석유화학	0.7	인천	식료품	1.0	경기	펄프 및 종이제품	1.1
전남	석탄석유화학	0.6	경북	식료품	1.0	경기	가스, 증기 및 온수	1.0
서울	음식점 및 주점	0.6	울산	석탄석유화학	1.0	충남	석탄석유화학	1.0
강원	보험서비스	0.6	전남	석탄석유화학	0.9	서울	광고	0.9
	강원	74.4		강원	57.7		강원	70.4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지역	산업	비중	지역	산업	비중	지역	산업	비중
강원	공공행정 및 국방	71.1	강원	교육서비스	70.1	강원	의료 및 보건	58.8
강원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2.9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6	경기	석탄석유화학	3.9
강원	수리서비스	0.8	서울	음식점 및 주점	1.1	충남	석탄석유화학	3.4
울산	석탄석유화학	0.8	서울	도소매서비스	1.1	서울	도소매서비스	2.4
서울	도소매서비스	0.7	울산	석탄석유화학	1.0	전남	석탄석유화학	1.6
충남	석탄석유화학	0.7	충남	석탄석유화학	1.0	충북	석탄석유화학	1.4
전남	석탄석유화학	0.6	경기	음식점 및 주점	0.8	서울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2
강원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0.5	강원	음식점 및 주점	0.8	울산	석탄석유화학	1.1
강원	기계장비용품 임대	0.5	전남	석탄석유화학	0.7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9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4	경기	기타제조업임가공	0.5	강원	수리서비스	0.9
	강원	80.1		강원	76.9		강원	65.9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오락		
지역	산업	비중	지역	산업	비중	지역	산업	비중
강원	사회복지서비스	52.5	강원	문화서비스	58.4	강원	스포츠오락 서비스	55.0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6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7	서울	도소매서비스	1.9
서울	도소매서비스	1.5	서울	도소매서비스	1.6	강원	식료품	1.7
인천	가스, 증기 및 온수	1.3	서울	출판서비스	1.2	경기	식료품	1.5
울산	석탄석유화학	1.3	울산	석탄석유화학	1.1	강원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1.3
충남	석탄석유화학	1.2	충남	석탄석유화학	0.9	서울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1.2
경기	가스, 증기 및 온수	1.1	전남	석탄석유화학	0.9	울산	석탄석유화학	1.1
강원	식료품	1.0	강원	청소소독시설서비스	0.8	충남	식료품	1.0
서울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0	서울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0.8	충남	석탄석유화학	0.9
전남	석탄석유화학	1.0	서울	음식점 및 주점	0.7	전남	석탄석유화학	0.8
	강원	63.6		강원	67.8		강원	64.8

현 시점에서는 강원도내에서 제한적이지만 성장 가능한 서비스업이 사적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사적 소비자서비스업 만으로는 강원경제를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킬만한 동인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소비시장·생산기반·인구규모 등에서 성장의 제한요인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사경제부문이 성장하는 중간단계로서 강원도 서비스업에 성장 동인을 주기 위하여 공적 소비자서비스, 특히 수요가 보장되는 의료 및 보건을 Hirshman 개념의 선도 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해 가는 방안이 효과적인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는 성장의 제약요인, 즉 집경지역·폐광지역·자원보호구역 등 물리적인 제약이 많으며,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85%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있으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정부의 개입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경제·산업구조에서는 강원도가 경제총량으로 볼 때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동태적 실익(dynamic gains)을 얻기 위해서도 정부는 실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집적도가 0.8 수준에 불과한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성장축으로 하여 강원도의 서비스업에 성장 동인을 부여하는 충격요법(shock therapy)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2. 성장여건 분석

강원도의 성장가능 서비스업을 <9개 분야>에서 모색해 보았는데, 가용데이터가 있는 수준까지 범위를 좁혀 분석하도록 한다. 공공행정 및 국방은 연관 산업이 많지 않으며, 인구비중과 정부정책 등에 의존하는 분야로서 경제적 성과는 거의 투입에 의존하는 고정된 외생부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에 속하는 교육부문은 강원도가 비교우위에 있지 않으며 인구비례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기도 어렵다. 사교육시장 역시 규모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아주 특별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강원도에서 성장축으로 고려할 산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인구비례로 비교적 지역내에서 발생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의 생산규모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의 특성상 지역내 공급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의 이동(공급)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타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는 그 기능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서비스업에 속하는 도소매서비스업은 유통을 촉진하는 산업으로서 지역내 소득순환을 가속화하는 기능은 하겠지만 대부분 서비스가 아닌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작을 것이다. 즉 서비스업의 성장이나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할 부분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에 속하는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과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에 속하는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세분류된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성장여건을 검토하도록 한다. IRIO 산업분류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논점에 대하여 분석하는바 첫째, 기업규모, 둘째, 집적도, 셋째, 경쟁력(중사자당 매출액 기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 가. 기업규모분석

기업규모는 사업체당 종업원수와 사업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규모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자본의 격차와 종업원의 생산성 차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규모의 왜곡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체당 매출액을 부가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규모는 전국 평균의 83%, 매출규모는 68%로 나타나고 있다. 동업종의 종사자 및 매출액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여 영세한 수준에 있는데 강원도는 더욱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규모는 업체당 9천만원, 고용자당 3천만원 수준에 있으므로 규모증대가 필요한 분야이다.

강원도 숙박서비스업 종사자는 전국 평균의 96%로 대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액은 전국 평균의 71%로 낮은 상황이다. 세부업종에서 기타숙박업(수련원·자연학습원, 민박·산장·펜션·야영장 캠핑장 등 관광숙박시설)의 업체당 종사자는 평균의 7.9배, 업체당 매출액은 전국 평균의 10.4배로 나타난다. 동업종은 특화도도 높으며, 매출액은 종사자규모를 능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고용비중은 0.04%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숙박시설운영업(호텔·여관·콘도미니엄 등)의 고용비중은 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종사자는 전국 평균의 90%, 매출액은 65%로 나타나 평균에 비하여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종사자 비중과 비교하여 매출규모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종을 이루는 대규모 숙박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비하여 수익이 낮은 상황에 있으므로 규모보다는 시설·서비스질·가격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문화서비스업 종사자는 전국 평균 대비 112%, 매출액은 86%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분류 문화서비스업종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분류업종에서 공연시설운영업은 전국지표로 보아 서비스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는 사업체당 종업원 (7.5명, 전국 평균대비 41%), 사업체당 매출액 (6.6억원, 전국 평균대비 47%)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규모화가 필요한 분야로 생각된다. 식물원·동물원·자연공원운영업은 현재의 규모로도 타지역과 경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규모를 증대시켜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서비스를 더욱 향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대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은 전국 평균에 비교할 때 사업체당 종사자수 및 매출액에서 강원도의 입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가능한 서비스업으로는 골프장스키장운영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갬블링배팅업종을 들 수 있다. 강원도 입지에서 골프장스키장운영업은 현재에도 전국 평균보다는 고용비중이 높은 0.4%(2,648명)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규모를 증대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사업체당 종사자 및 매출액은 각각 60%, 41%로 낮은 수준에 있지만 2013년 사업체당 종사자·매출은 각각 25명, 2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장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해당업종의 규모증대가 실현되면 충분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원랜드가 주축인 갬블링 및 배팅업은 고용 및 매출액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이원리조트

는 공간·종사자·매출규모에서 강원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완전한 앵글라브 형태로 존재한다. 강원도내·정선군내에서 더욱 좁혀서 사북읍내에서만이라도 업종간 연관관계를 가지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sup>34)</sup> 한편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스포츠 오락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숙박서비스, 음식 및 주류업 등에서 시설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않으면 시설 유희화에 따른 자본잠식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보건분야에서 강원도의 사업체당 종사자와 매출액이 각각 전국 평균의 96%, 94%로 나타나고 있어 규모가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 3.5%에 미달하는 2.9%로 나타나고 있어 세부업종인 병원·의원급에서는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도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업종은 공격기능이 강한 소비자서비스업으로 인구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소비 패턴의 변화에 근거할 때 시장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낙후지역 의료보건 차원의 수혜(공공성)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지역 서비스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4) 리조트사업은 공간적으로 괴리된 지역에 입지하여 업소내에서 완결구조를 가지고 운영될 수는 있겠지만 연구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리조트와 카지노 모두 지역내 공간적·산업간 연계가 아주 미흡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1> 성장가능 서비스업 규모: 2013년

(단위: 명, 억원)

지역		전국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업체당 (종사자: 명, 매출액: 억원)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3.1	1.5	2.5	1.0	3.9	2.0	3.1	1.5	2.9	1.2	3.2	1.5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4	0.8	2.1	0.6	2.9	1.0	2.5	0.9	2.4	0.8	2.3	1.0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3.5	2.4	3.2	1.6	8.7	13.1	4.6	3.2	3.7	1.7	3.3	1.9
	기타 숙박업	1.9	1.0	15.2	9.9	1.9	0.8	1.9	1.0	2.3	1.0	1.7	0.9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18.2	14.2	7.5	6.6	18.4	15.0	22.1	10.4	18.0	17.1	21.9	14.5
	공연단체	6.3	2.4	6.7	1.9	5.5	3.2	4.2	0.6	8.3	3.3	3.5	0.8
	자영 예술가	1.7	0.5	1.2	0.2	1.6	0.5	1.1	0.2	1.1	0.2	1.5	0.3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4.5	5.4	2.6	1.6	4.8	6.1	3.4	3.7	2.9	3.7	4.4	4.1
	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3.9	1.6	3.7	1.4	4.3	1.9	4.1	1.9	3.0	1.1	4.4	1.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8	8.7	5.7	2.6	16.8	16.8	7.2	6.4	10.6	12.1	6.5	4.6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20.5	13.8	22.9	13.2	37.8	24.2	26.2	25.9	28.8	14.5	17.9	15.7
	기타 도서관 사적지유사여가관련	5.9	4.3	10.8	7.8	3.0	1.1	-	-	1.0	0.1	-	-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37.7	180.5	12.4	12.0	36.3	62.4	124.4	802.1	19.0	11.6	18.4	14.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9.0	84.2	88.3	63.0	12.1	25.3	112.2	83.5	38.3	23.6	137.0	146.1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9	1.3	2.2	0.8	3.6	1.8	3.0	1.1	2.9	1.2	2.7	1.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1.0	18.9	8.7	8.0	9.0	28.5	13.4	11.9	8.2	1.5	7.6	19.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40.4	51.4	24.4	20.9	179.2	252.4	3.0	0.8	45.5	31.1	12.8	67.8
	오락장 운영업	2.0	0.6	1.9	0.4	2.1	0.7	2.1	0.5	1.9	0.4	1.9	0.6
	수상오락 서비스업	2.5	0.5	3.7	0.4	1.8	0.6	1.9	0.4	2.4	0.2	2.1	0.9
	갠블링 및 베팅업	5.5	47.9	26.0	97.0	7.6	97.3	5.9	22.2	3.0	10.2	5.8	28.0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4.1	1.9	2.8	1.8	7.5	3.5	2.5	1.0	2.9	1.0	3.3	1.4
의료 보건	병원	136.3	134.4	129.2	128.2	246.2	239.5	125.9	110.7	137.8	136.4	143.7	149.1
	의원	5.7	5.4	5.8	5.1	5.7	5.7	5.6	5.1	5.2	5.1	5.9	5.4
	공중 보건 의료업	8.5	6.7	7.3	5.0	67.9	49.6	42.0	30.3	31.5	28.9	18.7	13.8
	기타 보건업	4.2	1.9	4.1	4.6	4.9	3.0	3.6	1.2	3.7	1.5	5.7	2.4

<표 14-2> 성장가능 서비스업 규모: 2013년

(단위: 명, 억원)

지역 업체당 (종사자: 명, 매출액: 억원)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3.2	1.4	3.1	1.5	3.0	1.7	3.1	1.5	3.3	1.6	2.7	1.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4	0.8	2.5	1.0	2.2	0.8	2.1	0.6	2.5	0.9	2.1	0.7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3.4	1.5	3.7	2.2	2.9	1.3	2.1	0.7	3.4	1.6	2.9	1.3
	기타 숙박업	1.8	0.6	2.0	2.3	2.1	1.2	1.7	0.4	1.8	1.0	2.1	1.7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21.5	11.6	14.4	9.2	37.1	42.8	3.0	3.0	23.8	21.1	3.3	2.9
	공연단체	4.1	1.2	4.4	1.1	3.7	0.6	-	-	8.2	2.2	6.0	1.0
	자영 예술가	1.2	0.4	1.3	0.8	1.2	0.3	-	-	2.6	0.8	1.0	0.2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4.7	10.2	2.1	1.7	3.4	3.8	4.2	0.9	5.6	7.8	2.3	1.0
	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2.9	0.9	3.6	1.7	3.2	1.3	42.0	29.0	4.6	1.8	3.0	1.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10.2	10.4	10.2	12.3	10.3	12.5	42.0	29.0	9.6	9.3	8.4	6.9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16.4	11.0	57.9	34.2	8.6	3.1	42.0	29.0	19.9	16.1	16.4	6.2
	기타 도서관 사적지유사여가관련	-	-	-	-	1.0	0.0	-	-	-	-	6.8	7.3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11.0	22.8	23.3	12.5	22.0	17.6	48.6	51.0	81.6	499.8	36.0	31.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3.0	49.4	52.0	47.3	81.6	89.0	48.6	51.0	110.7	109.3	83.5	74.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5	1.2	2.7	1.0	2.7	1.7	1.8	0.7	3.1	1.3	2.3	0.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3.4	42.2	18.8	32.8	19.1	32.5	48.6	51.0	14.1	14.3	8.6	9.4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2.3	8.9	42.0	36.5	12.0	11.6	-	-	76.9	126.4	4.5	1.1
	오락장 운영업	2.0	0.5	1.8	0.6	1.8	0.5	2.1	0.7	2.1	0.6	1.8	0.5
	수상오락 서비스업	1.3	0.3	1.9	0.6	1.2	0.3	-	-	2.2	0.5	2.1	0.4
	갬블링 및 베팅업	3.9	32.3	3.1	30.5	1.6	1.0	-	-	3.7	33.0	1.6	0.8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8	1.0	4.1	2.6	4.6	2.3	2.3	0.5	5.0	2.9	2.8	0.7
의료 보건	병원	102.6	92.2	148.5	146.3	101.2	100.3	49.1	25.8	126.0	120.0	117.2	103.8
	의원	5.5	4.9	5.9	5.2	5.8	5.6	5.6	4.5	5.7	5.3	6.2	6.2
	공중 보건 의료업	24.5	22.2	22.1	24.6	16.3	15.6	6.4	11.2	12.0	10.5	5.9	5.5
	기타 보건업	3.3	1.7	4.6	1.8	3.6	1.4	5.0	1.0	5.1	2.1	3.7	1.5

<표 14-3> 성장가능 서비스업 규모: 2013년

(단위: 명, 억원)

지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종사자	매출액
업체당 (종사자: 명, 매출액: 억원)													
음식점주점	음식점업	2.7	1.3	2.9	1.2	2.6	1.1	2.4	1.1	2.7	1.1	3.1	1.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0	0.7	2.2	0.8	1.9	0.7	1.9	0.5	2.1	0.7	2.5	0.9
숙박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2.5	1.0	2.7	1.2	2.6	0.9	2.8	1.3	2.5	0.9	4.6	3.3
	기타 숙박업	1.8	0.9	2.1	1.0	4.3	3.6	2.5	1.5	2.3	1.2	10.7	8.2
문화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10.8	12.1	15.0	13.7	16.7	6.9	15.1	14.8	13.4	9.5	24.2	10.3
	공연단체	8.6	3.1	8.3	2.7	9.6	2.4	4.2	0.6	7.5	1.8	14.5	4.9
	자영 예술가	1.2	0.3	1.4	0.3	1.3	0.3	2.0	0.1	1.2	0.2	1.0	0.2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4.6	3.1	3.1	2.4	3.3	6.0	2.4	2.4	2.6	1.8	5.1	1.3
	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3.1	1.5	3.2	1.3	3.3	1.3	3.4	1.6	4.0	1.6	4.2	1.9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10.5	8.6	7.5	5.9	8.1	4.7	8.9	7.9	7.8	4.3	11.1	11.1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15.6	8.8	19.2	11.5	14.8	11.4	18.5	9.0	16.5	11.7	21.4	22.1
	기타 도서관 사적지유사여가관련	11.0	7.2	1.0	0.2	2.0	0.2	2.8	1.6	2.0	0.6	-	-
스포츠오락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23.2	19.8	8.9	5.5	8.0	6.1	7.9	8.4	23.3	148.4	32.7	227.4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1.5	62.1	67.2	50.1	76.5	51.5	74.9	67.4	102.2	102.7	91.6	126.7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2	0.9	2.4	0.9	2.3	0.9	2.2	1.1	2.5	1.0	2.5	0.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4	6.6	5.5	14.1	9.0	22.7	9.6	12.8	13.4	16.1	16.8	27.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9	2.9	6.7	3.8	13.9	8.9	35.5	40.2	72.7	42.8	16.5	12.6
	오락장 운영업	1.8	0.6	2.0	0.5	1.8	0.5	1.8	0.5	1.9	0.5	2.0	0.4
	수상오락 서비스업	1.5	0.4	2.6	0.3	2.0	0.5	2.2	0.4	3.0	0.3	2.8	0.6
	캠블링 및 베팅업	3.2	30.5	1.4	1.0	1.5	0.8	1.4	1.0	2.2	6.6	29.4	41.0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9	1.1	3.1	1.4	3.1	0.8	3.2	1.2	2.5	0.6	3.1	1.2	
의료보건	병원	98.4	81.7	111.1	87.3	111.5	96.4	100.8	80.3	112.1	102.5	220.2	201.3
	의원	6.0	5.8	5.9	5.1	5.6	5.3	5.4	4.8	5.6	5.5	5.7	4.7
	공중 보건 의료업	6.4	5.5	5.1	4.2	4.8	3.5	5.4	3.8	6.1	4.5	8.4	4.6
	기타 보건업	3.4	0.8	3.3	1.0	2.6	0.8	3.1	0.7	3.6	1.0	3.3	1.2

## 나. 집적도 비교

지역별 인구당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율(<표 15-1~2> <표 16-1~2>의 수치는 bp)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여건(밀집도)을 비교하도록 한다. 동 지표에서 평균이하의 집적도를 보이면 해당 서비스업은 일정 부분 창업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는 전국 평균의 150%, 종사자는 124%로 상당히 밀집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주변 서울은 평균수준의 집적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가 평균이하의 집적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내·지역외 모두 심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숙박서비스업은 업체수·종사자 비율이 전국 평균의 434%, 415%로 포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강원도만큼 과밀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성상 지역외방문에 의존하는 서비스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적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장은 강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문화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집적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이동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예술가가 전국 평균의 76%, 53% 정도로 낮은 수준의 집적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아직 문화서비스의 도내시장이 확대되어 선순환하는 경로는 상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지역외 수요에도 많이 의존하며 타서비스업에 비해 집적도가 높지 않은 공연시설운영업·자영예술가·창작관련예술 분야에서는 창업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의 사업체·종사자는 전국 평균대비 145%, 170%로 상당 수준의 집적이 진행된 상황에 있다. 단지 경기장운영업에서 종사자가 전국 평균의 62%로 나타날 뿐이다. 동서비스업 역시 지역내 수요보다는 지역외 수요에 의존해 성장하는 업종이며,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주변지역 및 타지역의 집적도가 높지 않다. 그렇지만 스키장·유원지테마파크·수상오락분야는 지역내 업체의 경쟁이 매우 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공적 소비자서비스인 의료보건업은 전체 사업체수는 전국 평균의 90%, 종사자수는 86%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보건업에서 공중보건의료업은 포화된 상황으로 보이지만 병원·의원의 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80%대에 있으므로 인구비례로 성장한다는 Holmes-Stevens 가설에 근거하면 창업 등 공급여력을 증대시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은 물론 병상수를 고려해야겠지만 경기 지역의 공급여력도 크지 않은 상황에 있으므로 타지역과의 경쟁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15-1> 지역산업별 인구대비 사업체비율

(단위: bp)

		전국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91.0	144.4	81.1	92.2	88.5	74.2	79.6	92.1	99.5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35.8	46.2	37.3	42.7	37.4	31.6	38.5	30.5	40.0
	소계	126.8	190.6	118.4	134.9	125.9	105.8	118.1	122.6	139.5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9.0	44.2	3.4	5.9	3.7	7.6	5.0	5.1	7.5
	기타 숙박업	1.2	0.1	3.4	0.8	0.4	0.7	1.2	0.5	0.6
	소계	10.2	44.3	6.8	6.7	4.1	8.3	6.2	5.7	8.1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0.1	0.1	0.2	0.1	0.1	0.1	0.1	0.1	0.1
	공연단체	0.3	0.4	0.5	0.3	0.3	0.2	0.4	0.3	0.2
	자영 예술가	0.1	0.1	0.2	0.2	0.2	0.0	0.2	0.1	0.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0.4	0.4	0.9	0.2	0.3	0.2	0.3	0.3	0.2
	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1.3	1.3	1.5	1.1	1.3	0.9	2.4	1.3	1.3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0.3	0.8	0.2	0.2	0.1	0.2	0.2	0.2	0.1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0.1	0.4	0.0	0.0	0.0	0.0	0.1	0.1	0.0
	기타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서비스업	0.0	0.1	0.0	0.0	0.0	0.0	0.0	0.0	0.0
소계	2.5	3.7	3.6	2.0	2.3	1.5	3.7	2.3	2.0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0.0	0.1	0.0	0.0	0.0	0.0	0.0	0.0	0.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0.1	0.2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5.9	7.3	6.3	5.4	5.5	5.5	6.4	5.9	6.6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2	0.3	0.2	0.2	0.1	0.1	0.1	0.2	0.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0	0.1	0.0	0.0	0.0	0.0	0.0	0.0	0.0
	오락장 운영업	9.8	10.4	9.4	9.5	12.0	11.2	13.6	12.5	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0.2	1.7	0.0	0.0	0.1	0.2	0.0	0.1	0.1
	갠블링 및 베팅업	0.7	1.0	0.7	0.7	0.9	0.6	0.7	0.8	0.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0.6	1.4	0.5	0.7	0.6	0.4	0.5	0.4	0.6
	소계	17.7	22.6	17.2	16.6	19.2	18.1	21.4	19.9	20.8
의료 보건	병원	0.6	0.6	0.4	1.0	0.8	0.5	1.3	0.7	0.8
	의원	11.2	8.9	15.3	12.3	12.8	9.5	11.7	12.8	10.0
	공중 보건 의료업	0.7	1.6	0.1	0.1	0.1	0.2	0.1	0.1	0.2
	기타 보건업	0.8	0.9	0.8	0.8	1.0	0.4	1.3	1.1	0.7
	소계	13.2	11.9	16.5	14.2	14.6	10.6	14.5	14.7	11.7

<표 15-2> 지역산업별 인구대비 사업체비율

(단위: bp)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98.3	76.7	113.2	110.4	92.2	98.4	118.3	110.0	126.3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5.2	29.1	34.3	32.2	32.2	40.0	39.3	42.1	59.1
	소계	123.5	105.8	147.5	142.6	124.4	138.4	157.6	152.1	185.4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5.1	5.3	10.9	16.2	11.3	16.9	14.1	15.1	38.3
	기타 숙박업	0.2	1.1	0.5	0.5	0.5	0.1	0.3	0.3	0.1
	소계	5.3	6.5	11.4	16.7	11.9	17.0	14.4	15.4	38.4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0.1	0.0	0.1	0.1	0.1	0.1	0.1	0.1	0.2
	공연단체	0.0	0.1	0.2	0.2	0.4	0.2	0.2	0.2	0.7
	자영 예술가	0.0	0.1	0.1	0.1	0.1	0.1	0.1	0.1	0.0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0.3	0.2	0.2	0.1	0.3	0.2	0.2	0.2	0.4
	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0.1	1.1	1.3	1.0	1.4	1.4	1.0	1.3	1.6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0.1	0.2	0.4	0.3	0.4	0.5	0.4	0.3	1.3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0.1	0.1	0.2	0.2	0.2	0.3	0.2	0.1	0.6
	기타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서비스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0.8	1.9	2.4	1.9	2.9	2.7	2.2	2.3	4.7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0.1	0.0	0.1	0.1	0.1	0.1	0.1	0.1	0.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0.1	0.1	0.2	0.1	0.1	0.2	0.2	0.1	0.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2	5.8	6.9	5.5	5.4	5.8	6.0	5.6	7.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1	0.1	0.1	0.2	0.3	0.2	0.2	0.1	0.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0	0.0	0.1	0.1	0.0	0.1	0.0	0.0	0.4
	오락장 운영업	8.1	9.1	10.8	9.8	8.3	8.3	10.0	8.9	8.8
	수상오락 서비스업	0.0	0.3	0.6	0.6	0.1	0.2	0.4	0.3	0.4
	갠블링 및 베팅업	0.6	0.6	0.7	0.6	0.9	0.6	0.6	0.6	0.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0.4	0.5	0.8	0.8	0.8	0.8	0.8	0.8	1.4
	소계	13.8	16.7	20.3	17.6	16.0	16.2	18.3	16.5	20.0
의료 보건	병원	0.4	0.5	0.6	0.7	1.0	0.9	0.8	0.8	0.3
	의원	9.0	9.7	9.5	9.3	10.9	8.6	8.7	9.0	11.0
	공중 보건 의료업	1.2	0.3	1.7	1.9	2.1	2.9	2.1	1.2	1.1
	기타 보건업	0.3	0.7	0.8	0.7	0.9	0.5	0.7	0.9	1.2
	소계	10.9	11.2	12.5	12.6	14.9	13.0	12.2	11.9	13.7



<표 16-1> 지역산업별 인구대비 종사자비율

(단위: bp)

		전국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283.4	362.6	315.3	288.0	258.8	235.9	254.3	287.8	301.4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85.9	96.6	106.4	105.9	91.0	72.7	93.7	75.2	89.6
	소계	369.3	459.2	421.7	393.9	349.9	308.6	348.0	362.9	391.1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31.9	140.7	30.0	26.9	13.6	24.9	17.2	19.0	21.5
	기타 숙박업	2.4	1.7	6.3	1.6	1.0	1.2	2.1	1.1	1.2
	소계	34.3	142.4	36.3	28.4	14.6	26.0	19.3	20.1	22.7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1.8	1.0	3.1	2.2	1.5	1.3	3.2	1.3	3.2
	공연단체	1.8	2.7	2.9	1.1	2.4	0.6	1.6	1.5	0.7
	자영 예술가	0.2	0.1	0.3	0.2	0.2	0.1	0.2	0.1	0.2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6	1.0	4.5	0.7	0.9	0.7	1.4	0.6	0.5
	도서관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5.0	4.9	6.4	4.4	3.9	4.0	6.9	4.7	4.1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2.5	4.7	3.4	1.2	1.2	1.1	2.4	1.7	1.3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2.0	9.5	0.7	1.0	1.4	0.4	0.9	3.0	0.4
	기타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서비스업	0.0	0.6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5.0	24.4	21.3	10.8	11.5	8.2	16.7	12.8	10.4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1.4	0.9	0.5	2.5	0.6	0.3	0.2	0.6	0.8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7.8	17.1	0.3	3.2	0.5	3.8	1.3	1.4	3.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7.2	16.4	22.8	16.3	16.0	14.7	15.8	15.9	17.8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8	2.7	2.1	2.5	1.0	0.7	3.5	2.9	2.3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5	3.3	1.6	0.1	2.0	0.3	0.3	0.8	0.4
	오락장 운영업	19.6	19.5	19.9	20.0	22.4	21.5	27.7	22.6	22.5
	수상오락 서비스업	0.6	6.4	0.0	0.1	0.2	0.5	0.0	0.1	0.1
	갬블링 및 베팅업	3.9	25.4	5.5	4.4	2.6	3.5	2.9	2.4	1.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5	4.0	3.7	1.7	1.6	1.2	1.4	1.6	2.8
소계	56.3	95.8	56.4	50.5	46.9	46.3	53.2	48.4	51.6	
의료 보건	병원	87.3	71.1	103.8	122.7	103.3	66.8	137.6	99.9	78.1
	의원	63.5	51.7	87.1	69.7	66.0	56.0	65.0	76.0	58.4
	공중 보건 의료업	5.8	11.8	4.0	4.2	3.5	4.0	3.5	2.7	3.5
	기타 보건업	3.2	3.5	3.8	2.9	3.6	2.5	4.3	5.0	2.6
	소계	159.8	138.1	198.7	199.6	176.5	129.3	210.4	183.6	142.5

<표 16-2> 지역산업별 인구대비 종사자비율

(단위: bp)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302.5	255.5	300.8	300.7	265.7	256.1	288.2	294.0	394.8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53.8	72.2	71.1	65.7	69.2	76.6	75.0	90.0	147.8
	소계	356.3	327.7	371.9	366.4	334.8	332.7	363.2	384.0	542.6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10.6	18.1	31.6	41.2	30.3	44.1	39.5	37.4	174.9
	기타 숙박업	0.3	2.1	1.0	0.9	1.1	0.5	0.7	0.7	1.1
	소계	10.9	20.1	32.6	42.1	31.4	44.7	40.2	38.1	176.0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0.4	1.0	0.2	0.9	1.8	1.9	1.8	0.9	5.2
	공연단체	0.0	1.1	1.3	1.4	3.4	1.8	1.0	1.4	9.5
	자영 예술가	0.0	0.4	0.1	0.1	0.1	0.1	0.1	0.1	0.0
	기타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1.3	1.2	0.4	1.8	0.8	0.6	0.4	0.5	1.9
	도서관기록보존소독서실 운영업	5.4	5.2	4.0	3.1	4.5	4.6	3.6	5.3	6.6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2.7	1.6	3.0	3.2	3.0	4.0	3.2	2.2	14.3
	식물원동물원자연공원 운영업	5.4	1.3	2.6	3.0	3.0	4.4	3.9	2.1	12.7
	기타도서관사적지유사서스업	0.0	0.0	0.2	0.1	0.0	0.0	0.0	0.0	0.0
	소계	15.2	11.8	11.8	13.6	16.7	17.4	14.0	12.5	50.3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3.1	2.8	2.1	1.2	0.8	0.4	0.4	1.3	7.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2	12.2	19.0	7.1	7.5	16.1	13.3	9.5	48.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7	18.1	15.7	12.2	12.8	13.5	13.0	13.9	18.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6.2	1.5	1.1	0.7	1.4	1.4	1.6	1.8	3.6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0.0	2.4	0.2	0.6	0.3	1.0	1.4	2.0	6.5
	오락장 운영업	16.7	19.5	20.1	18.1	16.4	15.1	17.7	16.9	17.4
	수상오락 서비스업	0.0	0.6	1.3	0.8	0.4	0.4	0.8	0.8	1.2
	갠블링 및 베팅업	2.7	2.4	1.1	2.1	1.2	0.9	0.9	1.2	27.1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0	2.6	2.1	2.3	2.5	2.3	2.7	2.1	4.2
소계	43.7	62.0	62.7	45.1	43.5	51.1	51.8	49.4	133.9	
의료 보건	병원	22.0	64.4	68.3	65.9	106.2	104.1	77.6	90.0	68.9
	의원	50.4	55.3	58.5	56.1	63.9	48.3	47.0	50.5	63.0
	공중 보건 의료업	7.4	3.2	9.9	12.2	11.0	14.1	11.1	7.5	9.0
	기타 보건업	1.3	3.4	2.9	2.4	2.8	1.3	2.2	3.3	4.0
	소계	81.1	126.3	139.6	136.6	183.9	167.9	137.9	151.2	144.9

## 다. 경쟁력 비교

생산·부가가치 생산성은 공급측면에서의 분석이지만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수요 조건(시장수요)·마케팅능력 등이 감안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사자당 매출액(평균매출액)을 강원도 해당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강원도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평균대비 비율은 82.8%로 전국에서 경쟁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변 수도권의 동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 저조는 피용자보수 저하로 나타날 것인데 강원도가 해당 서비스업의 평균임금(여기서는 피용자보수/취업자로 분석했기 때문에 하향편의가 있을 것임)이 가장 낮은 지역의 하나로 평가되는 것도 매출액 저조와 연계되어 있다. 사실상 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생산성제고를 통한 가격조건 인하를 하나의 성장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숙박서비스업도 주로 서울·광역시·제주의 경쟁력이 높다는 지역적 차이를 제외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이 공급측면의 여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전국 평균의 약 77%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바 자영예술가·기타창작예술·박물관 및 사적지운영업 등이 더욱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에 고착된 서비스업에서 관광객 수요(지역외 수요 창출)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수준 자본투입으로 상품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뿐 공공부문의 수요유발정책을 제외하면 수요를 창출할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동성이 높은 문화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화산업의 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상당 수준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업체수/종사자수 증대가 아닌 규모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은 업체수·종사자가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 있지만 경쟁력은 낮은 상황에 있다. 동 서비스업종의 종사자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당 매출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업체당 투입자본 규모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는 스포츠 관련 업종의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도 추론할 수 있다. 해법은 규모증대로 판단되는데, 일반론에서 공공부문의 지원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료보건 분야는 전국 평균의 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산업이므로 아직 인구당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적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판단된다. 주변 서울의 경쟁력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고유의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며 자본투입 규모에 따라서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소득증가 및 기호변화에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원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17-1> 지역산업별 종사자당 매출액

(단위: 억원)

		전국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0.47	0.39	0.52	0.48	0.41	0.47	0.43	0.47	0.55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0.35	0.28	0.35	0.35	0.33	0.41	0.32	0.39	0.37
	소계	0.44	0.37	0.48	0.45	0.39	0.45	0.40	0.46	0.51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0.68	0.49	1.50	0.69	0.45	0.59	0.43	0.59	0.44
	기타 숙박업	0.49	0.65	0.43	0.52	0.45	0.53	0.32	1.17	0.56
	소계	0.67	0.49	1.32	0.68	0.45	0.58	0.42	0.62	0.45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0.78	0.88	0.82	0.47	0.95	0.66	0.54	0.64	1.15
	공연단체	0.38	0.28	0.59	0.14	0.39	0.24	0.30	0.25	0.17
	자영 예술가	0.27	0.18	0.29	0.21	0.15	0.17	0.30	0.62	0.22
	기타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	1.20	0.63	1.28	1.10	1.29	0.94	2.15	0.79	1.13
	도서관기록보존소독서실운영업	0.41	0.39	0.44	0.46	0.38	0.39	0.31	0.46	0.39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0.88	0.45	1.00	0.90	1.15	0.70	1.02	1.21	1.21
	식물원 동물원자연공원 운영업	0.68	0.58	0.64	0.99	0.50	0.88	0.67	0.59	0.36
	기타도서관사적지유사서비스업	0.72	0.73	0.36	-	0.08	-	-	-	0.03
	소계	0.65	0.50	0.78	0.57	0.62	0.53	0.63	0.60	0.75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4.79	0.97	1.72	6.45	0.61	0.77	2.07	0.54	0.8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0.95	0.71	2.09	0.74	0.62	1.07	0.78	0.91	1.09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0.43	0.37	0.49	0.37	0.41	0.41	0.50	0.38	0.6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71	0.92	3.17	0.88	0.18	2.51	0.97	1.75	1.7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27	0.86	1.41	0.26	0.68	5.28	0.73	0.87	0.97
	오락장 운영업	0.29	0.24	0.35	0.24	0.22	0.31	0.25	0.32	0.26
	수상오락 서비스업	0.19	0.12	0.36	0.22	0.11	0.43	0.19	0.30	0.22
	캠핑 및 베팅업	8.69	3.73	12.89	3.74	3.35	4.82	8.21	9.86	0.6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0.46	0.63	0.46	0.38	0.35	0.43	0.35	0.63	0.51
	소계	0.92	1.08	1.38	0.73	0.36	0.59	0.59	0.68	0.40
의료 보건	병원	0.99	0.99	1.22	0.88	0.99	1.04	0.90	0.99	0.99
	의원	0.95	0.88	1.01	0.90	0.98	0.91	0.88	0.88	0.96
	공중 보건 의료업	0.79	0.69	0.73	0.72	0.92	0.73	0.91	1.11	0.96
	기타 보건업	0.45	1.13	0.62	0.35	0.41	0.42	0.50	0.40	0.40
	소계	0.95	0.93	1.10	0.88	0.97	0.96	0.89	0.93	0.97

<표 17-2> 지역산업별 종사자당 매출액

(단위: 억원)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0.47	0.49	0.45	0.48	0.40	0.42	0.45	0.42	0.39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0.30	0.36	0.35	0.34	0.36	0.35	0.28	0.35	0.35
	소계	0.45	0.46	0.43	0.46	0.40	0.40	0.41	0.41	0.38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0.35	0.47	0.44	0.40	0.45	0.35	0.46	0.35	0.73
	기타 숙박업	0.23	0.56	0.80	0.47	0.47	0.84	0.63	0.52	0.77
	소계	0.35	0.48	0.45	0.40	0.45	0.36	0.46	0.35	0.73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0.99	0.89	0.86	1.12	0.91	0.41	0.98	0.71	0.43
	공연단체	-	0.27	0.17	0.35	0.32	0.25	0.15	0.24	0.34
	자영 예술가	-	0.29	0.19	0.23	0.21	0.20	0.07	0.15	0.15
	기타 창작예술관련서비스업	0.21	1.39	0.45	0.21	0.75	1.82	1.00	0.68	0.25
	도서관기록보존소독서실운영업	0.69	0.39	0.39	0.48	0.40	0.39	0.48	0.39	0.44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0.69	0.97	0.82	0.83	0.78	0.59	0.90	0.56	1.00
	식물원 동물원자연공원 운영업	0.69	0.81	0.38	0.56	0.60	0.77	0.49	0.71	1.03
	기타도서관사적지유사서비스업	-	-	1.09	0.65	0.15	0.12	0.57	0.32	-
	소계	0.66	0.64	0.49	0.58	0.56	0.57	0.63	0.49	0.72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1.05	6.12	0.86	0.85	0.61	0.76	1.06	6.36	6.9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1.05	0.99	0.90	0.76	0.75	0.67	0.90	1.00	1.3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0.41	0.41	0.40	0.40	0.39	0.38	0.52	0.41	0.34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05	1.02	1.10	1.49	2.58	2.53	1.34	1.20	1.6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1.64	0.24	0.33	0.57	0.64	1.13	0.59	0.76
	오락장 운영업	0.33	0.29	0.28	0.33	0.25	0.27	0.26	0.25	0.21
	수상오락 서비스업	-	0.25	0.18	0.26	0.12	0.27	0.18	0.11	0.22
	갠블링 및 베팅업	-	8.83	0.54	9.58	0.73	0.56	0.68	3.00	1.3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0.21	0.58	0.23	0.38	0.44	0.25	0.36	0.25	0.38
	소계	0.45	0.90	0.41	0.63	0.36	0.39	0.42	0.54	1.18
의료 보건	병원	0.53	0.95	0.89	0.83	0.79	0.86	0.80	0.91	0.91
	의원	0.80	0.93	1.01	0.96	0.87	0.94	0.89	0.98	0.82
	공중 보건 의료업	1.75	0.88	0.92	0.87	0.82	0.73	0.70	0.72	0.55
	기타 보건업	0.19	0.40	0.41	0.23	0.32	0.31	0.23	0.27	0.36
	소계	0.81	0.92	0.93	0.88	0.81	0.87	0.81	0.91	0.84

## V. 서비스산업 성장전략 · 정책

### 1. 분석의 전제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전략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현 서비스업 성장 촉진방안으로서 현재 정부의 지원제도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서비스업을 조정해가는 방안이다. 두번째로는 성장 동인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메디컬 헬스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서비스업구조에서는 강원도 서비스업에 성장 동인을 졸업종을 선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이 있지만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은 작으며, 오히려 스포츠시설,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과잉 및 자본유희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반론 차원에서 서비스업을 진단하면 첫째,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조건은 대체로 LQ는 3이상의 높은 수준, GRDP에서 차지하는 임계규모 비중은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서비스업은 강원도에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존 강원도의 소득수준(2015년 1인당 GRDP 23.7백만원, 전국 평균의 86%)에 근거할 때 시장규모가 단기간에 커질 가능성은 미미하다. 셋째, 2040년까지의 인구전망에 근거하면 강원도 인구는 현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넷째, 강원도에서는 유망한 서비스업종이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영세하며, 지역인구에 비하여 과밀할 정도로 집적되어 있다. 다섯째, 서비스업 경쟁력을 간접 평가할 수 있는 종사자당 매출액도 종사자규모가 매우 작아 기여도가 크지 않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 있다(<표 18-1~2>). 이는 지역에 고착된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지역간 경쟁에서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강원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서비스업 구조는 마련되기 어렵다고 본다. 즉 시장규모·특화·경쟁구도에서 열위에 있으므로 점진적 우위 확보는 매우 어려운 성장경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축여력 저하에 따른 자본부족으로 인한 강원도 주민생활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자본분산은 생산성 비교열위와 수요부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조건에서는 불균형론(Hirshman 류)의 성장전략과 같이 지역의 서비스업을 견인할 소수의 산업을 육성하는 안이 필요하다. 자본을 집중하고, 선도산업의 수요견인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강원도 서비스 전반을 육성하는 안이 필요하다. 대부분 낙후지역의 산업육성에서 생산기반은 확보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요창출, 특히 초기 수요창출이 어렵다.

따라서 산업연관관계와 유발수요창출이 다소 낮아도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있어 정부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업,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보건의료분야의 사업, 즉 강원도에 메디컬헬스타운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첫째, 서비스업 일반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의 이니셔티브로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첫째, 현 지원제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원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지원에서는 수요지원, 공급지원(부가가치

일반의 지원), 자본·노동의 효율성 비교를 포함한다. 둘째, 서비스업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현재 강원도에 존재하는 서비스업에서 생산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적 서비스업 성장정책방향을 논하게 될 것이다. 셋째, 강원도 허브(코어)서비스라고 명할 수 있는 메디컬헬스타운 조성에 관한 조건 및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표 18-1>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성지표: 종합 (1)

(단위: %, %p)

		취업자		GDP		최종수요	
		LQ	변화(%)	구성비 (%)	변화(%p)	구성비 (%)	변화(%p)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1.2	-3	6.3	0.1	7.0	0.7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4.1	-3	3.0	0.0	1.7	0.2
	기타 숙박업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1.4	3	0.6	0.1	0.7	0.1
	공연단체						
	자영 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기록보존소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서비스업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1.7	5	3.0	-0.8	2.4	0.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갠블링 및 베팅업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의료 보건	병원	0.8	-8	6.5	0.3	8.2	1.0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표 18-2>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성지표: 종합 (2)

(단위: %, 명, 억원, 개)

		내부화율 (%)	종사자 (만명)	매출액 (억원)	인구당 사업체	인구당 종사자	경쟁력
음식점 주점	음식점업	59	81	67	159	128	8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87	71	129	112	81
	중분류 기준		83	68	150	124	83
숙박 서비스	숙박시설 운영업	72	90	65	491	441	72
	기타 숙박업		789	1040	9	71	132
	중분류 기준		96	71	434	415	74
문화 서비스	공연시설 운영업	69	41	47	132	54	113
	공연단체		106	80	141	149	75
	자영 예술가		70	46	76	53	66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58	30	107	62	52
	도서관기록보존소독서실 운영업		93	88	105	98	95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58	29	323	187	51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112	95	423	472	85
	기타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서비스업		181	184	1,023	1,856	101
	중분류 기준		112	86	145	163	77
스포츠 오락 서비스	경기장 운영업	66	33	7	190	62	20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9	75	222	220	76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77	66	124	95	86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79	42	199	157	54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60	41	362	219	67
	오락장 운영업		94	78	106	100	83
	수상오락 서비스업		148	90	704	1,043	61
	게임업 및 베팅업		471	202	139	655	43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69	96	226	157	138
	중분류 기준		125	148	128	170	118
의료 보건	병원	67	95	95	86	81	101
	의원		102	95	80	81	93
	공중 보건 의료업		86	75	237	204	87
	기타 보건업		96	241	113	109	250
	중분류 기준		96	94	90	86	98

## 2. 서비스업 일반의 지원제도 평가

현재의 지원제도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수단 중에서 수요지원, 부가가치부문 지원 (공급증대효과), 부가가치 생산수단별 지원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부록 3> 참조). 수요지원 효과분석은 공공부문 혹은 특정한 산업별 수요가 유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IRIO 기본수요모형을 이용하여 정량화하여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공급증대효과는 부가가치부문(고용지원, 자본지원, 경영지원 등이 종합된 지원책)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급효과를 IRIO 공급승수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승수분석방법은 <부록 2>에 수록). 지역 산업에서는 산업 및 지역의 고유성이 결합되므로 일반론에 따라서 자본집약도를 높여야 한다는 Galenson-Leibenstein가설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본에 고유한 생산요소의 증대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IRIO의 부가가치-생산승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승수분석방법은 <부록 2>에 수록). 수단별 성장효과는 강원도 서비스업의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정책수단 입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가. 수요지원

현재 시행중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기술제품우선구매제도,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지원 정책이 해당된다. 특정한 지원금(shock)을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종별 100억의 수요(2015년 강원도 GRDP의 0.03% 해당)가 창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정량화하고자 한다. 기본승수(최종수요-생산승수) 분석을 통하여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할 것이다. 생산에 연동되어 계산되는 지역내 취업유발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최종수요에서 누출을 제외한 지역내 순유발효과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 특성상 서비스업은 중간투입은 적은 반면 지역내 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간주된다.

지역별 수요증대효과를 토대로 강원도의 42개 서비스업의 평균서비스업 유발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표 19> 참조) 강원도는 총효과를 기준으로 총취업유발효과 및 내부효과는 가장 높은 262명, 22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상황에 있는데, 내부효과를 기준으로 각각 119억(100억원투입시), 62억원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평균과 전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지만 생산유발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원도가 타지역에 비하여 많은 중간재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반입하기 때문이다(수요누출). 그렇지만 부가가치율이 다소 낮은 수준에 있어도 생산의 내부화 비중보다 부가가치의 내부화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의 열위를 다소나마 상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9> 지역별 서비스업의 수요증대효과

(단위: 명, 억원, %)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지역내 (명)	총효과 (명)	지역내 비율(%)	지역내 (억원)	총효과 (억원)	지역내 비율(%)	지역내 (억원)	총효과 (억원)	지역내 비율(%)
서울	134	161	83.3	132	176	75.2	66	79	83.5
인천	166	204	81.6	122	176	69.6	60	80	75.8
경기	163	195	83.3	128	175	73.5	62	79	79.1
대전	169	207	81.9	118	173	68.0	60	79	75.8
충북	192	227	84.4	119	174	68.3	62	81	76.5
충남	180	220	82.0	120	173	69.5	60	79	75.4
광주	181	219	82.8	119	174	68.5	61	80	76.4
전북	214	249	86.0	121	173	69.9	62	80	77.6
전남	204	246	83.2	119	173	69.0	60	80	75.2
대구	182	214	84.8	122	173	70.5	63	80	78.4
경북	185	222	83.0	120	172	69.4	62	81	76.8
부산	171	202	84.6	124	173	72.0	65	80	80.4
울산	156	198	78.6	120	175	68.8	59	80	74.3
경남	180	215	83.9	124	173	72.0	64	81	78.8
강원	225	262	86.0	119	173	68.6	62	81	76.8
제주	198	234	84.7	119	173	69.0	63	81	77.9
평균	181	217	83.5	122	174	70.1	62	80	77.4

주: 지역내 비율 = 지역내효과/총효과 x 100

자료: 한국은행

강원도의 서비스업 분석에서(<표 20> 참조) 사적 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중상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행정 및 국방과 공적성격의 소비자서비스는 중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은 중하위 수준의 고용유발효과, 대체로 평균(225명/100억원당)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와 공적기능이 강한 서비스업의 경우 타산업에 비하여 중간투입이 적어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가능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숙박서비스, 의료 및 보건, 스포츠오락서비스의 지역내 취업유발효과는 강원도 서비스 평균 225명보다 낮은 각각 212명, 120명, 13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은 230명, 문화서비스는 가장 높은 369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수요유발효과만을 기준으로 볼 때 지원이 가능하다면 문화서비스업은 수요지원을 지원정책으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0> 강원도 서비스업의 수요증대효과

(단위: 명, 억원, %)

연번		취업유발효과 (명, %)			생산유발효과 (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		
		강원	전국	비중	강원	전국	비중	강원	전국	비중
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450	473	95.0	112	147	76.1	74	86	85.8
2	사회보험서비스	417	454	92.0	121	170	71.3	70	87	80.0
3	사회복지서비스	412	459	89.9	121	190	63.6	55	76	71.6
4	부동산 임대 및 공급	372	394	94.4	129	167	77.4	74	88	84.2
5	문화서비스	369	410	89.8	119	176	67.8	64	83	77.0
6	개인 서비스	366	398	92.0	111	173	64.1	64	83	77.1
7	수리서비스	365	406	89.8	115	209	54.9	48	75	63.7
8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357	403	88.5	126	186	67.7	57	82	70.2
9	부동산관련 서비스	355	365	97.4	107	122	87.6	90	95	94.3
10	기타사업지원서비스	347	383	90.4	120	168	71.0	68	86	79.7
11	육상운송서비스	341	368	92.6	115	176	65.5	54	70	76.8
12	인력공급 및 알선업	332	352	94.2	109	134	81.3	85	93	90.7
13	청소소독시설서비스	328	347	94.5	108	144	75.3	77	88	87.7
14	사회단체	278	338	82.2	122	198	61.9	55	82	67.7
15	도소매서비스	275	304	90.3	117	157	74.4	75	89	83.4
16	정보서비스	262	313	83.9	125	200	62.6	54	82	66.3
17	출판서비스	251	308	81.6	117	205	56.8	41	70	57.9
18	광고	243	312	77.9	155	245	63.3	48	82	58.0
19	음식점 및 주점	230	303	75.9	119	207	57.7	47	76	61.5
20	숙박서비스	212	236	89.8	110	157	70.4	72	86	83.7
21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198	233	84.9	116	161	72.3	66	82	80.6
22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186	209	89.2	115	147	78.2	80	92	86.3
23	기계장비용품 임대	183	215	84.9	125	180	69.3	63	81	77.4
24	컴퓨터관리서비스	173	232	74.8	123	207	59.6	46	77	60.5
25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168	235	71.6	119	209	57.2	45	78	57.3
26	교육서비스	165	189	87.7	110	143	76.9	79	89	88.0
27	방송서비스	164	202	80.9	133	185	71.8	62	82	75.8
28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61	191	84.7	112	146	76.6	69	83	83.1
29	연구개발	156	187	83.3	115	164	69.9	65	81	80.3
30	항공운송서비스	142	153	92.9	101	145	69.8	25	34	75.0
31	기타 금융기관	137	184	74.8	127	187	68.0	60	83	72.3
32	스포츠오락 서비스	131	179	73.1	118	183	64.8	61	82	74.2
33	공공행정 및 국방	127	144	88.3	113	141	80.1	82	91	90.2
34	보험서비스	126	177	70.9	132	196	67.6	53	78	67.8
35	의료 및 보건	120	153	78.2	113	171	65.9	60	79	76.1
36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12	155	71.7	127	197	64.5	59	82	71.9
37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09	173	62.9	130	215	60.3	47	79	60.0
38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06	122	86.8	110	131	84.1	85	94	91.2
39	유, 무선 통신서비스	103	164	62.8	129	200	64.4	52	81	64.4
40	우편 서비스	70	86	80.4	109	138	78.8	76	85	89.8
41	수상운송서비스	26	43	59.5	106	149	71.2	16	27	59.4
42	주거서비스	23	36	62.3	121	144	84.1	86	95	90.5
	서비스업 평균	225	262	86.0	119	173	68.6	62	81	76.8

주: 비중(%) = 강원/전국 x 100

자료: 한국은행

### 나. 공급증대효과: 부가가치 투입지원

공급증수는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정식화된 증수분석으로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모든 지원(고용지원, 자본지원, 경영지원 등 <부록 3> 참조)의 변화에 따른 공급유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외생변수인 부가가치투입이 100억원 증가했을 때 내생변수인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정량화한다. 이 증수는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외생조건의 변화로 인한 국내생산 증가 - 공급에 연동되는 수입 증가의 전달경로를 구현한다. 공급은 국내생산과 수입으로 구성되지만 현 분석에서는 총공급과 지역내공급만을 논의하도록 한다. 서비스업도 여타산업과 같이 생산물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배분하게 되는데 타산업에 많은 중간재를 공급할수록 공급유발효과는 커지게 된다.

지역별 서비스업의 공급유발효과를 보면(<표 21> 참조) 강원도 서비스업의 총유발효과(42개 서비스업의 평균)는 194억원(100억원 투입시)으로 낮은 수준에 있지만 지역내효과는 146억원으로 내부화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75.3%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상황에서 부가가치부문의 지원은 평균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정책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지역별 서비스업의 공급유발효과

(단위: 억원, %)

	지역내효과 (억원)	총효과 (억원)	지역내비율 (%)		지역내효과 (억원)	총효과 (억원)	지역내비율 (%)
서울	146	204	71.5	전남	157	207	75.8
인천	135	205	66.1	대구	139	196	70.9
경기	139	193	72.0	경북	156	202	77.1
대전	129	202	63.8	부산	139	195	70.9
충북	145	212	68.6	울산	161	202	79.9
충남	151	210	72.1	경남	158	200	79.1
광주	138	207	67.0	강원	146	194	75.3
전북	151	200	75.7	제주	138	192	71.8
평균	146	201	72.3				

주: 지역내 비율 = 지역내효과/총효과 x 100

자료: 한국은행

강원도내 서비스업의 공급유발효과를 보면, 생산자서비스업은 소비자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및 국방에 비해 타산업에 많은 중간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22> 참조). 공급이 증대되면 생산 및 수입이 증대되어 누출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되지만 총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내 생산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및 국방은 지역간 구도에서 보면 지역내 공급비중은 높지만 타산업에 중간재를 적게 공급하므로 총공급유발효과는 작게 나타나고 따라서 지역내 공급효과도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장가능 서비스업인 업종은 대부분 일반적인 부가가치부문 지원효과는 평균인 146억원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음식점 및 주점업 108억원, 숙박서비스업 105억원, 문화서비스업 113억원, 스포츠오락서비스업 104억원, 의료 및 보건업 106억원 등이다. 다른 지표와 연계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공급유발효과만을 토대로 하면 일반적인 부

가가치부문의 지원은 강원도 서비스업 평균 수준보다 낮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표 22> 강원도 서비스업의 공급유발효과 분석

(단위: 억원, %)

연번		공급유발효과			연번		공급유발효과		
		지역내 (억원)	총효과 (억원)	지역내 비율 (%)			지역내 (억원)	총효과 (억원)	지역내 비율 (%)
1	우편 서비스	218	255	85.5	22	창고운송보조서비스	143	285	50.3
2	항공운송서비스	212	273	77.6	23	부동산관련 서비스	127	144	88.6
3	광고	211	285	74.0	24	보험서비스	127	152	83.2
4	인력공급 및 알선업	208	291	71.7	25	사회단체	119	126	94.4
5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204	266	76.8	26	출판서비스	116	226	51.3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	199	256	77.9	27	영상오디오제작배급	114	166	68.8
7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95	240	81.3	28	문화서비스	113	140	80.9
8	컴퓨터관리서비스	195	295	66.0	29	도소매서비스	112	211	53.4
9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194	209	93.1	30	개인 서비스	112	118	95.0
10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175	197	88.6	31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09	133	82.1
11	정보서비스	173	209	82.7	32	음식점 및 주점	108	173	62.2
12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73	266	65.1	33	의료 및 보건	106	110	96.2
13	기타 금융기관	173	209	82.6	34	수상운송서비스	106	181	58.4
14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72	214	80.1	35	숙박서비스	105	213	49.1
15	기계장비용품 임대	168	240	70.0	36	스포츠오락 서비스	104	123	84.6
16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162	242	67.2	37	공공행정 및 국방	102	103	99.1
17	청소소독시설서비스	160	256	62.4	38	교육서비스	100	101	99.5
18	육상운송서비스	155	224	69.4	39	연구개발	100	101	99.3
19	유, 무선 통신서비스	153	215	71.3	40	주거서비스	100	100	100.0
20	수리서비스	152	182	83.6	41	사회보험서비스	100	100	100
21	방송서비스	144	204	70.5	42	사회복지서비스	100	100	100

주: 지역내 비율 = 지역내효과/총효과 x 100  
 자료: 한국은행

#### 다. 생산요소 지원효과

우리나라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대한 지원제도를 큰 범주에서 보면 고용지원과 자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증가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정량화하는데, 공급승수와 다른 점은 생산요소 별 변화에 따라서 유발된 부가가치를 정량화한다는 부분이다. 산업별 노동·자본투입 효과의 절대규모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적합한 생산요소의 지원방향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 부가가치부문 지원은 생산요소 외에 경영지원 등을 포괄하므로 생산요소의 배타적인 효과를 찾기 어렵고, 또한 공급유발효과의 분석은 생산요소 → 부가가치 → 생산 → 공급 등으로 전달경로가 길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므로 본 절에서는 생산요소 →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정량화에 국한한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른 수익불변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몫(labor share)과 자본몫(capital share)의 합은 “1”로 나타난다. 생산요소 투입변화가 미치는 효과는 부가가치-생산요소 연계모형의 기본모형으로 구축되는 부가가치승수의 크기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자본몫과 노동몫의 합은 “1”로 설정되었으므로 자본몫이 크면 노동몫은 (1-자

본문)의 값을 갖는다. 강원도 노동·자본이 10% 증가되었을 때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은 전국 평균과 같지만 내부화율은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참조).

<표 23> 강원도 서비스업의 공급유발효과 분석

(단위: %)

	노동 10% 증가		자본 10% 증가	
	부가가치증가율	지역내효과비율	부가가치증가율	지역내효과비율
서울	5.4	82.3	4.4	82.2
인천	5.4	70.3	4.4	70.0
경기	5.5	74.0	4.4	73.8
대전	5.1	69.1	4.2	70.3
충북	5.6	70.9	4.3	70.5
충남	5.4	71.2	4.4	70.8
광주	5.4	77.1	4.5	77.0
전북	5.5	76.7	4.3	76.4
전남	5.4	76.2	4.4	75.9
대구	5.4	77.3	4.4	77.1
경북	5.3	76.9	4.5	76.6
부산	5.6	79.0	4.2	78.8
울산	5.3	79.2	4.5	79.0
경남	5.4	78.2	4.4	77.9
강원	5.4	72.8	4.4	72.5
제주	5.5	77.4	4.3	77.1
단순평균	5.4	75.5	4.4	75.4

자료: 한국은행

강원도 서비스업에서 공공행정 및 국방과 공적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의 노동투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4> 참조).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해당 산업의 자본투입효과는 반대의 순위를 갖게 된다. 사적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은 노동투입의 효과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특정한 그룹을 형성하지 않고 탄력성에 따라서 산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행정 및 국방·의료 및 보건·교육·사회보험·사회복지업은 지역내 효과의 비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발효과 자체가 작으므로 실질적 공급능력 증대효과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론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집약도를 높여야 한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동일한 업종이면 자본집약도가 높은 업체의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지역산업에서는 지역산업간 연관구조의 차이에 의하여 다소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다. 성장가능 서비스업으로 선별한 산업에서 음식점 및 주점은 자본지원, 숙박서비스업은 고용지원, 문화서비스업은 고용지원,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은 자본지원, 의료 및 보건은 고용지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 강원도 서비스업의 생산요소별 투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

연번	산업	노동증가(10%)		연번	산업	자본증가(10%)	
		증가율 (%)	내부화율 (%)			증가율 (%)	내부화율 (%)
1	사회보험서비스	9.3	100.0	1	주거서비스	10.0	100.0
2	사회복지서비스	9.3	100.0	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7.8	77.9
3	청소소독시설서비스	9.1	62.4	3	유, 무선 통신서비스	7.7	71.3
4	출판서비스	8.5	51.3	4	도소매서비스	7.1	53.4
5	사회단체	8.5	94.4	5	기계장비용품 임대	7.0	70.0
6	우편 서비스	8.4	85.5	6	보험서비스	6.7	83.2
7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8.4	88.6	7	항공운송서비스	6.6	77.6
8	인력공급 및 알선업	8.3	71.7	8	기타 금융기관	6.5	82.6
9	교육서비스	8.2	99.5	9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6.4	81.3
10	컴퓨터관리서비스	7.8	66.0	10	스포츠포락 서비스	6.3	84.6
11	연구개발	7.3	99.3	11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5.6	68.8
12	의료 및 보건	7.2	96.2	12	광고	5.4	74.0
13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6.9	93.1	13	방송서비스	5.3	70.5
14	수상운송서비스	6.5	58.4	14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5.3	50.3
15	공공행정 및 국방	6.5	99.1	15	음식점 및 주점	5.2	62.2
16	개인 서비스	6.3	95.0	16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5.0	76.8
17	부동산관련 서비스	6.1	88.6	1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5.0	80.1
18	육상운송서비스	6.0	69.4	18	기타사업지원서비스	4.9	65.1
1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5.4	67.2	19	숙박서비스	4.6	49.1
20	수리서비스	5.3	83.6	20	소프트웨어개발공급	4.5	82.1
21	문화서비스	5.3	80.9	21	정보서비스	4.5	82.7
22	정보서비스	5.3	82.7	22	문화서비스	4.4	80.9
23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2	82.1	23	수리서비스	4.4	83.6
24	숙박서비스	5.1	49.1	24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4.3	67.2
25	기타사업지원서비스	4.9	65.1	25	육상운송서비스	3.7	69.4
26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4.8	80.1	26	부동산관련 서비스	3.7	88.6
27	법무경영지원 서비스	4.7	76.8	27	개인 서비스	3.4	95.0
28	음식점 및 주점	4.6	62.2	28	공공행정 및 국방	3.3	99.1
29	창고운송보조서비스	4.5	50.3	29	수상운송서비스	3.3	58.4
30	방송서비스	4.4	70.5	30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2.9	93.1
31	광고	4.4	74.0	31	의료 및 보건	2.6	96.2
32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4.1	68.8	32	연구개발	2.5	99.3
33	스포츠포락 서비스	3.5	84.6	33	컴퓨터관리서비스	2.0	66.0
34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3.4	81.3	34	교육서비스	1.7	99.5
35	기타 금융기관	3.3	82.6	35	인력공급 및 알선업	1.6	71.7
36	항공운송서비스	3.2	77.6	36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1.5	88.6
37	보험서비스	3.1	83.2	37	우편 서비스	1.5	85.5
38	기계장비용품 임대	2.8	70.0	38	사회단체	1.4	94.4
39	도소매서비스	2.7	53.4	39	출판서비스	1.4	51.3
40	유, 무선 통신서비스	2.1	71.3	40	청소소독시설서비스	0.8	62.4
41	부동산 임대 및 공급	2.1	77.9	41	사회복지서비스	0.7	100.0
42	주거서비스	0.0	100.0	42	사회보험서비스	0.6	100.0
	서비스전체평균	5.4	72.8		서비스전체평균	4.4	72.5

자료: 한국은행

## 라. 지원수단 효과비교

일반적인 공공부문의 지원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제도로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를 들 수 있으며, 공급측면에서의 지원수단은 고용지원(노동지원), 자본지원, 운영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부록 3> 참조). 수요지원과 공급지원제도의 효과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도가 유발하게 되는 효과를 타 서비스업과 비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생산요소의 지원제도는 공급측면의 지원제도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수단의 효과를 비교하는 의미를 갖는데 고용지원과 자본지원은 산출효과에 따라서 우열이 나타나게 된다. 지원제도의 범위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은 수요지원(예로 음식점 상품권 등)은 평균수준보다 높은 230(명/100억원당)의 취업 효과를 보이겠지만 부가가치증대 지원수단을 통한 매출증대(공급유발효과)는 108(억원/100억원 투입시)의 평균이하 효과를 보이게 된다. 해당 업종은 자본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숙박서비스업(특정집단의 단체숙박 등)은 212명의 평균보다 낮은 수요유발효과를 보이게 되며, 공급측면의 지원효과도 105억원으로 평균 이하의 유발효과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자본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문화서비스업은 수요지원(예로 단체입장권 등)은 평균수준보다 높은 369(명/100억원당)의 높은 취업효과를 보인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증대 지원수단을 통한 매출증대(공급유발효과)는 113(억원/100억원 투입시)의 평균이하 효과를 보인다. 문화서비스업은 아직은 노동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므로 자본지원보다는 고용지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스포츠오락서비스업의 수요지원효과(경기장 단체이용권 등)는 131명의 낮은 효과와 공급측면에서도 낮은 120명의 유발효과를 보이게 된다. 자본지원효과는 평균보다 매우 높은 6.3%의 효과를 보인다.

대표적인 공적 소비자서비스업인 의료보건 분야의 수요지원효과(예로 건강검진 등)는 120명으로 매우 낮은 효과를 보이며, 공급효과 역시 106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유발효과를 보이게 된다. 고용지원은 평균보다 매우 높은 7.2%포인트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강원도 서비스업의 자원수단별 효과분석

(단위: 명/100억원, 억원/100억원, %)

연번	산업	수요유발효과 취업자수 (명/100억원)	공급유발효과 강원유발효과 (억원/100억원)	노동10%증가 강원유발효과 (%)	자본10%증가 강원유발효과 (%)
41	도소매서비스	275	112	2.7	7.1
42	육상운송서비스	341	155	6.0	3.7
43	수상운송서비스	26	106	6.5	3.3
44	항공운송서비스	142	212	3.2	6.6
45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12	143	4.5	5.3
46	음식점 및 주점	230	108	4.6	5.2
47	숙박서비스	212	105	5.1	4.6
48	우편 서비스	70	218	8.4	1.5
49	유, 무선 통신서비스	103	153	2.1	7.7
50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109	195	3.4	6.4
51	방송서비스	164	144	4.4	5.3
52	정보서비스	262	173	5.3	4.5
53	소프트웨어개발공급	161	109	5.2	4.5
54	컴퓨터관리서비스	173	195	7.8	2.0
55	출판서비스	251	116	8.5	1.4
56	영상오디오물제작배급	168	114	4.1	5.6
57	중앙은행예금취급기관	106	172	4.8	5.0
58	기타 금융기관	137	173	3.3	6.5
59	보험서비스	126	127	3.1	6.7
60	금융보험 보조서비스	357	175	8.4	1.5
61	주거서비스	23	100	0.0	10.0
62	부동산 임대 및 공급	372	199	2.1	7.8
63	부동산관련 서비스	355	127	6.1	3.7
64	기계장비용품 임대	183	168	2.8	7.0
65	연구개발	156	100	7.3	2.5
66	범우경영지원 서비스	186	204	4.7	5.0
67	광고	243	211	4.4	5.4
68	건축 토목 관련서비스	198	194	6.9	2.9
6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450	162	5.4	4.3
70	청소소독시설서비스	328	160	9.1	0.8
71	인력공급 및 알선업	332	208	8.3	1.6
72	기타사업지원서비스	347	173	4.9	4.9
73	공공행정 및 국방	127	102	6.5	3.3
74	교육서비스	165	100	8.2	1.7
75	의료 및 보건	120	106	7.2	2.6
76	사회보험서비스	417	100	9.3	0.6
77	사회복지서비스	412	100	9.3	0.7
78	문화서비스	369	113	5.3	4.4
79	스포츠오락 서비스	131	104	3.5	6.3
80	사회단체	278	119	8.5	1.4
81	수리서비스	365	152	5.3	4.4
82	개인 서비스	366	112	6.3	3.4
	서비스업 평균	225	146	5.5	4.3

### 3. 현서비스업의 성장촉진 방안

기존 서비스업종이 성장조건을 갖추기 위한 일반론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입지강화 조건을 공급(생산기반 구축), 수요(시장성 확보와 마케팅 등), 정책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성장가능 서비스업으로 제시한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서비스업 모두에 해당하는 지원방향이 되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설구축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서비스업 등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대체할 수요가 창출되지 않으면 시설유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가. 공급측면

첫째, 서비스 생산비용을 낮추도록 공공부문 인센티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업종별 차별성은 다소 존재하지만 기존 설비를 이용할 경우에도 자본지원이 가능하며, 서비스의 질(質)제고를 위해 적절한 인력<sup>35)</sup>의 투입은 필수적이다. 중요한 부분은 법적·제도적 판단이 필요한데 강원도 서비스업종에서도 다양한 공공부문의 인센티브제도, 즉 고용지원·자본지원·영업지원제도와 연계가 가능하다(<부록 3> 참조). 서비스업종에는 정서상 공공부문의 지원이 어렵거나 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여 지원이 어려운 업종이 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논리, 접경지역·폐광지역·보호구역의 특수성, 미래 정부부담의 감소 등 지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시설구비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는 시설에서는 공동주차구역, 물류시설 등 지역내 공동 유틸리티 등 기반시설이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지역주민의 단순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낙후지역의 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균형발전의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산비용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관산업의 집적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집적, 공간내로의 집적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인적요소가 더욱 중요하므로, 지역내에서 커넥션을 형성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발휘하는 집적화가 가능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상공인이 접촉할 수 있는 공청회·포럼·전람회 등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적 집적·집중에서는 제조업에 준하여 평가하면 안되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걸맞은 외양을 구비해야 한다.<sup>36)</sup>

물론 서비스업에서의 집적도 공간적·물리적 비용의 감소와 산업연관관계가 깊은 타산업 수요를 유발하여 시장 확대에 기여한다(공동집배송·중간재상호이용·판매망 구축·생산·수요 보완관계 형성). 집적은 지역의 지명도(인지도)를 높일 것이므로 기

35) 적절한 인력이 뜻하는 바는 사실상 풍부한 정보가 흘러다니는 전파의 세계에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 인력을 우선 지칭하며, 서비스의 개량·개선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36) 음식점의 예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회센터를 들 수 있는데 음식은 근거리 음식점 집적보다는 풍미와 경관과의 조화 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파트형이 아닌 소규모 음식점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차별화하는 집적방식이 중요하다.

존 업체의 결집·신규업종의 집적을 유도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현재 강원도 주변 지역의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보면 대체로 자급자족하는 형태(입지계수 1.0 수준)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지역적 집적화·전문화된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별화된 상품개발시 선점(先占)이 가능하다고 본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 강원도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메디컬헬스분야의 선점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부문에서 지역내/인근지역 연관업종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해당산업 성장의 정지(整地) 작업이 될 것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중간재를 생산하는 타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지역의 시장규모(인구·소득)가 작기 때문에 역내시장을 찾는 수요 계층(지역외수요)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내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앵클라브(enclave) 형태는 피해야 하지만 완성도가 높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형태로 존재해도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현 상태에서는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즉 의료관련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면 일정부분 집적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홍보 등). 이러한 경우 원주 근교의 의료산업은 그 배후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지원을 신상품에 집중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독점적 경쟁형 상품이라고 해도 표준화 단계에 이르면 경쟁심화 등으로 성장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활용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의 체계화된 정보망구축이 필요하다. 상품특성·가격·수요계층 등을 포괄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려면 GRDP 비중이 높아야 하므로 공공부문 지원시 이러한 업종에 대한 공공재 공급·일반적 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GRDP 비중은 생산비용 절감과 최종수요의 변화, 즉 민간부문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성장성분석이 그 조건이 될 것이다.

## 나. 수요측면

첫째, 수요유발이 성장의 주요한 조건이 되는데 특히 초창기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역내수요 창출은 성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소득수준이 낮아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 정도가 불투명하지만, 공적 소비자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의료·사회보장분야는 공공성도 있으며, 지역의 요구에도 정당성이 있고 정부의 지원수단도 존재한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지역내 기초수준의 수요계층 확보가 가능하며, 나아가 의료분야의 경우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의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시니어케어, 노령빈곤층 생활보장 등)도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공공부문의 공공구매제도(중소기업청·조달청·중소기업중앙회 등 연계 제도) 등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내 업종간 산업연관관계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도내에서 생산된 제

품의 경우 우선 물류비용이 적게 투입될 것이므로 이것이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규모화되고 체계적인 기관인 농협·축협·수협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인센티브를 고안해야 한다.

셋째, 강원도 서비스업에서 지역간 서비스의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 사적 소비자서비스업은 지역의 인구와 소득에 비례하여 성장하며 생산기반 이동의 거래비용이 매우 높아 지역간 거래가 매우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의 서비스 이용을 제안한다. 공동시장 구축의 개념에서 공동이용권의 사용, 즉 지역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숙식권·일반이용권 등을 보편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특성상 이동의 제한이 있다면 바우처 등의 공공부문의 이니셔티브로 공동관리가 가능하며, 전문적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배달서비스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서비스의 수요누출 비중이 크다면 강원도 서비스업 성장에 제한이 주어질 것으로 서비스업에서의 지역간 누출 정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다. 공공부문의 정책

전반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서비스업의 현 상황에서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일반론에서는 정부정책과 합치되거나 산업의 공공성이 입증되면 공공재 구비·정부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거 정권에 비하여 중하위 소득계층을 대거 포괄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적성격의 소비자서비스업은 정서상의 이유로 일반적인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낙후지역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수혜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란 공간적 특수성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자본유입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개발연대에 경제성장에 기여한 폐광지역은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을 선도할 대체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이 가해지는 지역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드배치와 지역간 갈등에서 나타난 보상차원의 논리도 정부 정책기조의 하나로 간주하고 강원도 상황에 접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현 시점에서는 강원도 1인당 GRDP의 격차는 강원도 주민 생활수준의 점진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악화에 대처하고 또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협상가격차와 같이 커지는 생활수준의 차이를 현 시점에서 바로 잡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지원은 향후 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비용감소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일자리창출과 그 반대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 등 정책간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강원도의 사업에서는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등 정부정책과 합치될 수 있는 논리·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 4. 코어서비스 구축: 메디컬헬스타운 조성

공공부문의 현재 지원제도는 지역 일반적인 제도이며, 아직은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따라서 강원도 서비스업이 일반적인 지원으로 성장의 조건을 갖추고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산업으로서 자리 잡는 구조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을 토대로 지역가용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메디컬헬스타운 조성을 강원도 서비스업 발전방안으로 제시한다.

##### 가. 메디컬헬스타운 조성의 배경

강원도의 현재 경제적 토대는 상당히 취약하며, 성장전망 또한 밝지 않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강원도의 소득수준이 낮아 시장규모가 협소하며, 따라서 민간부문의 투자 유인이 유발되지 않는다.

둘째, 연관산업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지역외 누출이 매우 크다.

셋째, 성장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업도 인규규모에 비례하여 성장하는 지역수요에 맞추어진 수준에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 서비스업이 없다.

넷째, 지역의 공간적인 괴리로 인한 국지성에 더하여 접경지역·폐광지역·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에 제한이 주어짐으로 통합된 시장을 형성할 수 없다.

다섯째, 성장축에서 제외된 발전과정을 겪었으므로 SOC·제조업기반·생산자서비스업 등이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서비스업 성장촉진 전략·방안은 정부를 위시한 공공부문의 일정 자본투입에 근거한 코어서비스 ~ 메디컬헬스타운의 조성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공공성이 있는 분야로 강원도의 해당 산업의 LQ는 0.8 정도로 인구에 비례하여 의료서비스가 적게 공급된다.

둘째, 지역내 상품공급비율이 96.2%로 타서비스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셋째, 의료 및 보건분야는 강원도의 GRDP에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다른 성장가능 서비스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넷째, 비교적 새로운 의료·헬스서비스가 부가됨으로써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공동시장(구역)을 창출할 것이므로 지역내·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분단과 개발연대 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된 강원도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업 발전전략의 입안에서 일반론으로 제시한 <코어서비스>의 조건에 맞춘 강원도 <메디컬타운> 조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강원도 메디컬타운 조성안

### 가. 사업구상

#### (1) 사업규모 및 조성지역

- 강원도 서비스업이 타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투입(임계수준은 차후의 연구로 진행). 수요추정 및 효율규모 추정을 근거로 하여 책정
- 춘천·원주·강릉은 강원도 성장의 삼각테크노벨리를 형성할 것이므로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배제된 도내 지역중 접경지역·폐광지역·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에 제한이 가해진 지역에 공동구역을 마련하고 메디컬헬스타운을 조성

#### (2) 사업내용

##### 서비스 구성

- 의료서비스
- 보건 ~ 중독예방 포함
- 건강·항노화·실버케어·외모관리
- 건강문화 ~ 치유공원·문화예술치료 등

##### 사업방향

- 수익성과 공익성을 결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수익이 지역내 재투자되고 지역내 고용을 촉진하도록 운영
- 가능한 지역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 지역의 시장도 동시 지향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으로 확대
- 메디컬헬스타운은 정주형으로 입지조성
- 수익이 강원도내 연계지역간 균점되도록 운영

나. 강원도 <메디컬헬스타운> 조성의 정성적 산업연관표

산업 및 특성화 조건		산업소분류	세부상품
의료보건 헬스케어	제조업제품	의약품	소규모 첨단기업
		의료기기 식품 건강식품·기능성화장품	의료용 보조기기 화장품 포터블장비
	서비스상품	보건의료서비스	병원진료 보건위생 방문검진서비스
		건강관리	식이/섭생 운동생활 건강관리
		외모관리서비스	모발관리 피부관리 외모개선
건강문화접목 서비스	치유공원 치유관련 오락 문화예술 치료		
상품개발	(1) 농산물/특산물	건강특산물 - 산채, 인근 지역어류, 효소	
	(2) 가공제품	기능성 식품개발 검토	
	(3) 서비스 주요상품	의료서비스 - 영립법인도 검토 도내보건서비스 건강관리 외모관리(엔티에이징, 비만관리) 건강과 문화접목	
	(4) 연계서비스상품	실버문화 기타 실버서비스	
지원서비스	홍보/상징	청정한 의료서비스 젊음과 건강	
	금융보험서비스	사부문 의료보험 관리	
공공의료	공공성격의 대중화시설 수요계층의 차별화 특수계층	주로 공공부문에 의존 사부문과 결합-수익자 부담 요양원수준/호스피스	
시설/숙박	병원 기타시설 정주형 입주형 관광형	외래/입원치료  장기거주 시설(요양원 수준) - 일시체류 시설건축 등은 위와차별화	
입지(소재)적합성 제품차별화 가격차별화	주요상품	의료서비스	
	부속서비스 - 차별화	건강관리, 외모관리, 건강문화	
	탄력성 추정	지역외수요 계층 분석	
마케팅 (서비스 수요유발)	의료진료외 쿠폰 현물지급(유통거래) 순회홍보 순회서비스	건강검진, 상품권 지역공공기관 일부 현물지급 도차원 버스운용/지역언론 지역적 서비스	
사업공공성 (조달청 구매-가능성 검토) (중기청 구매-가능성 검토)	국비조달 도시비 민자(사업성)	병원건립 - 의료 공공재 성격 공적의료는 공공구매제도와 연계 지역의료기기업 등은 연계 가능	
고용대상 유발효과	전문인(의사) 지역민		
시장조사(수익모델)	강원·수도권, 경북 수요추정 중국 의료관광객		

#### 다. 강원도 메디컬타운의 기대효과

- 강원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축으로 기능하여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기여
-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고학력실업이 심한 강원도 고용창출에 기여
- 도내에 부족한 의료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적인 후생수준 도모
- 서비스권역을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경기도 서부 및 북부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정부투자의 시혜가 주변지역으로 확산
- 메디컬헬스타운이 거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적 복지체계 분산과 인구분산에 기여



## VI. 정책제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해소, 공적 의료복지체계의 균형적 보장,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나아가 지방 서비스경제권의 형성차원에서 강원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책적 의지와 자금투입은 사경제부문이 취약한 강원도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국회에서 논의된바 있는 지방서비스경제권의 형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법·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국회 지방살리기포럼, 2014). 지방서비스경제권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등을 의도하는 만큼 공적성격의 서비스 균등화의 일환으로 강원도에도 의료 등 서비스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지원의 사각에 있는 지역의 서비스산업, 특히 낙후지역의 영세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한다. 시장규모는 작고, 영세상공인이 대중을 이루는 강원도 관련업체들의 생존권이 연계된 문제이다. 지자체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대상 계층에 홍보를 넘어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구상중인 영리병원(제주녹지국제병원 등)이나 타시도(인천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 설립계획) 사업에 앞서 강원도에도 이를 허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sup>37)</sup>

넷째,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강원도와 같은 낙후지역에 대해 정부투자가 지연되면 향후 격차확대에 따른 정부의 미래 시정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지역에 구비되는 어메니티간 격차를 초래함으로써 이동성이 낮아 지역에 고착되어 살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후생수준을 급격하게 악화시킨다.

다섯째, 단순 이동인구의 증가로는 수도권 또는 지역적 인구분산은 불가능하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인구분산이 가능하므로 강원도내 메디컬헬스타운 조성계획은 자본투입규모에 따라서 직업창출과 더불어 강원도 인구유입·이출 감소요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청정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되는 메디컬헬스타운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관련 보건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수혜가 강원도에 국한되지 않고 과밀한 수도권의 의료수요에도 대처하는 의료수급 체계의 지역적 분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곱번째, 경제력격차에 따른 낙후지역성, 분단이란 특수성, 폐광지역이라는 구개발전대의 오명이 결합되어 강원도는 사실상 정주여건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각인되어 있다. 물적 SOC는 구비되어 가고 있지만 지역간 간극을 메워줄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강원도로서는 요원하다. 서비스경제권의 형성이 그 물적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강원도 서비스산업 성장의 핵심으로 설정된 메디컬헬스타운 조성이 긴요

37) 이전 정부에서도 의료영리화를 위한 지원은 여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겨레 2017. 11. 3

하다.

여덟번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흑자와 시설의 사후관리에도 초점을 모아야 한다.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지 않으면 강원도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할 스포츠오락서비스, 숙박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등에서 유희시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흑자로 축적된 자본이 지역내에서 공익성이 있는 수요창출로 이어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2017 강원 지역투자 지원시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 시행령」.
- 국회(2014), 「국회지방살리기포럼」.
- 강원도 전략산업기획단(2008), 「강원전략산업 산업연관분석」.
- 지해명(2005), 「강원도 지연산업의 발전방안」.
- 지해명(2007), “수요승수(final demand multiplier)와 생산승수(Ritz-Spaulding multiplier) 비교분석: 문화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55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pp. 135-154.
- 지해명(2007), 「춘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효율적 조성방안」.
- 지해명(2010), “지역간 수요승수와 수요연관구조 분석: IRIO모형의 적용”, 「지역연구」, 제26권 제4호, 한국지역학회, pp. 33-54.
- 지해명(2011), “산업별 수요계약과 공급계약의 효과: 산업연관분석의 RS모형과 내외생전환모형의 적용성 검토”,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pp. 133-156.
- 지해명(2012), “지역·산업간 부가가치 연관구조의 분석: 지역 부가가치승수의 정립”, 「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경제통상학회, pp. 133-155.
- 지해명·황성일(2013), “부가가치승수와 산업간 부가가치 연관구조 분석”, 「응용경제」, 제15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pp. 5-26.
- 지해명(2014), “지역·산업별 자본집약도와 부가가치 연관구조 분석: IRIO모형 부가가치승수를 이용한 Galenson - Leibenstein 가설의 평가”, 「경제분석」, 제20권 제2호, 한국은행, pp. 27-55.
- 통계청 KOSIS.
- 한국은행(2015),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역경제효과 제고방안”, 「지역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논문집(Ⅱ)」.
- Aghion, Philippe (2002), "Schumpeterian Growth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come Inequality", *Econometrica*, Vol. 70, No. 3, pp. 855-882.
- Argyrous, G. (1996), "Cumulative Causation and Industrial Evolution: Kaldor's Four Stages of Industrialization as an Evolutionary Model",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X, No. 1, pp. 97-119.
- Bell, C. and P. Hazell (1986), "Measuring the Indirect Effects of an Agricultural Investment Project on Its surrounding reg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2, pp. 75-86.
- Camanho, A.S. and R.G. Dyson (2005), "Cost Efficiency, Production and Value-added Models on the Analysis of Bank Branch Performance",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Vol. 56, pp. 483-494.
- Carter, A. (1974), "Applications of Input-Output Analysis to Energy Problem", *Energy Issues*, Vol. 184, No. 4134, 1974, pp. 325-329.
- Castro, Rui (2006), "Economic Development under Alternative Trade Regimes",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7, No. 2, pp. 611-649.
- Chamon, Marcos de Carvalho and Michael R. Kremer (2006), "Asian Growth and African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6, No. 2, pp. 400-404.
- Chenery, H. (1953), "Regional Analysis", *The Structure and Growth of the Italian Economy*, ed. by Chenery, H., P. Clark, and V. Pinna, Rome, U.S. Mutual Security Agency.
- Ciaschini, M. (ed.) (1988), *Input-Output Analysis*, Chapman and Hall.
- Cicccone, A. (2002), "Input Chains and Industrializ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9, No. 3, pp. 565-587.
- Conway, R. (1975), "The Stability of Regional Input-Output Multiplier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 9, No. 2, pp. 197-214.
- Dhanmanjiri, Sathe (2001), "Balanced Growth and Foreign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36, No. 51, pp. 4761-4766.
- Francois, Patrick and Jan Zbojnik (2005), "Trust,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3, No. 1, pp. 51-94.
- Ghosh, A. (1958), "Input-Output Approach in an Allocation System", *Economica*, 25(1), pp. 58-64.
- Haggblade, S., J. Hammer, and P. Hazell (1991), "Modeling Agricultural Growth Multiplier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3, No. 2, pp. 361-374.
- Harriss, B. (1987), "Discussion: Regional growth Linkage from Agricultur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23, No. 2, pp. 275-289.
- Hirshman, A. (1961),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Yale Univ. Press.
- Holmes, T. and John Stevens (200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Establishment Size*, holmes@econ.umn.edu.
- Hudson, E. and D. Jorgenson (1974), "U.S. energy policy and economic growth, 1975~2000", *The Bell Journal of Economic and Management System*, Vol. 5, No. 2, pp. 461-514.
- Hulton, C. and R. Schwab (1984), "Regional Productivity Growth in US Manufacturing: 1951-78",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pp. 152-162.
- Key, N., E. Sadoulet, and Janvry, A. (2000), "Transaction Costs and Agricultural Household Supply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2, No. 2, pp. 245-259.
- Khaled Hussein and A. P. Thirlwall (2000), "The AK Model of "New" Growth Theory Is the Harrod-Domar Growth Equation: Investment and Growth Revisited",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2, No. 3, pp. 427-435.
- Kongsamut, Piyabha, Sergio Rebelo and Danyang Xie (2001), "Beyond Balanced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68, No. 4, pp. 869-882.
- Krishna, Kala and César A. Pérez (2005), "Unbalanced Growth",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38, No. 3, pp. 832-851.
- Krugman, P. (1993), "Toward a Counter-Counter Revolution in Development Theory",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 Landau, D. (2003), "A Simple Theory of Economic Grow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52, No. 1, pp. 217-235.

- Lewis, B & E. Thorbecke (1992), "District-Level Economics Linkages in Kenya: Evidence Based on a Small Regional Social Accounting Matrix", *World Development*, Vol. 20, No. 6, pp. 881-897, 1992.
- Lin, Justin Yifu (2003), "Development Strategy, Viability, and Economic Convergenc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51, No. 2, pp. 277-308.
- Llerena, P. and A. Lorentz (2004), "Cumulative Causation and Evolutionary Micro-Founded Technical Changes", *Revue Économique*, Vol. 55, No. 6, pp. 1191-1214.
- Martin, P. and G. Ottaviano (2001), "Growth and Agglomer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42, No. 4, pp. 947-968.
- Meardon, S. (2001), "Modeling Agglomeration and Dispersion in City and Countr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60, No. 1, pp. 25-57.
- Miller, R. and P. Blair (2009),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 Moses, L. (1974), "Outputs and Prices in Inter-industry model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32, pp. 7-18.
- Nijkamp, P. (1988), "Information Center Policy in a Spatial Development Perspectiv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7, No. 1, pp. 173-193.
- Norcliffe, G. B. (1983), "Using location quoti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base and trade flows", *Regional Studies*, Vol. 17, No. 3, pp. 161-168.
- Nurkse, R. (1961), "The size of the market and the inducement to invest",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lackwell.
- Polenske, K. (1978), "Energy Analysis and the Determination of Multi-regional Price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43, pp. 83-97.
- Puga, D. and A. Venables (1999), "Agglom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mport Substitu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The Economic Journal*, Vol. 109, pp. 292-311.
- Quah, D. (2002), "Spatial Agglomeration Dynamic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2,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Hundred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p. 247-252.
- Rima, Ingrid H. (2004), "Increasing Returns, New Growth Theory, and the Classics",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27, No. 1, pp. 171-184.
- Ritz, M. & E. Spaulding (1975), *Basic I-O Termi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Rosenstein-Rodan, P.N. (1943),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of East and South-Eastern Europe", *Economic Journal*, Vol. 53, pp. 202-211.
- Round, J. (1972), "Regional Input-Output Models in the U.K.: A Reappraisal of Some Techniques", *Regional Studies*, Vol. 6, No. 1, pp. 1-9.
- Round, J. (1978), "An Interregional Input-Output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Non-Survey Metho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8, No. 2, pp. 179-194.
- Scitovsky, T. (1954), "Two concepts of External econom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2, pp. 143-151.
- Scott, P. and P. Auerbach (1995), "Cumulative causation and the new theories of

-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17, No. 3, pp. 381-402.
- Stryker, D. (1976), "Population Density, Agricultural Technuque, and Land Utilization in a Village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No. 3, 1976, pp. 347-358.
- Subramanian, S. and E. Sadoulet (1990), "The Transmission of Production Fluctuations and Technical Change in a Village Economy: A Social Accounting Matrix",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39, No. 1, pp. 131-173.
- Takahashi, H. (2008), "Optimal Balanced Growth in a General Multi-Sector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Constant Returns", *Economic Theory*, Vol. 37, No. 1, pp. 31-49.
-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pp.190-207.
- Warner, A., Harry J. Holzer and Nina Pavcnik (2006), "Wage Dynamics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Comments and Discussion]", Brookings Trade Forum, *Global Labor Markets*, pp. 97-135.

## 〈부록 1〉 수요연관구조와 수요-수요승수

### 1. 수요연관구조

불균형론의 성장조건은 특정산업에서 외생적 수요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산업간 보완관계에 준하여 유발수요가 창출되는데 이때 유발수요가 커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수요승수와 수요연관구조를 분석하자는 것이 불균형론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성장촉진형 산업구조의 정립을 위하여 수요측면을 분석하게 되는데 수요제약, 지역내외 수요누출구조(수요의 지역별 분산)의 정량화 역시 분석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기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책은 대체로 공급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사업재원의 일부 혹은 단위사업의 작은 부분으로만 수단이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공급중시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Nurkse(1953), Scitovsky(1954), Rosenstein-Rodan(1943)),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수요연관구조 분석이 제시되는 것이다.

수요제약은 협소한 시장과 낮은 가격탄력성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유인 과소가 연계되어 공급능력을 제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공급조건뿐만 아니라 수요조건과 그 영향을 평가하고 낙후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수요조건과 공급조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당연히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지만 지역경제간 구도에서는 누출(leakage)로 인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균형론에서는 보면 산업간 보완관계에 근거한 유발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수요에 근거하여 투자가 유발되는 등 파생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간 보완관계에 근거하여 수요가 공급(생산)에 주는 효과와 외생적인 수요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유발수요의 중요성은 불균형론의 주요한 논지로 정형화되었다(Hirshman(1961)). 유발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 공급이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지역경제가 연계된 구도에서 보면 유발수요의 창출과 지역간 분산효과(누출구조)는 지역의 성장성이나 지역내 비교우위 산업을 밝히는데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량화를 위한 분석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산업간 보완관계에 의거한 공급효과(생산효과)는 IRIO모형(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이나 MRIO모형(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수요-생산승수를 적용하면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수요변화에 의한 유발수요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모형으로는 지해명(2008)에서 정식화된 단일지역 수요-수요승수가 참조할 수 있는 선행연구이다. 다지역으로 확장된 모형에서 수요-수요승수가 정립되면 Hirshman(1961)에서 제기된 지역간 유발수요의 창출과정이 밝혀질 수 있으며, 또한 누출구조에 근거한 정책의 실효성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간 연계구조는 특정지역의 외생적 수요변화가 역내시장과 역외시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포괄적인 투자유인을 추론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것이다.1)

## 2. 수요-수요승수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정책은 대체로 공급능력(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요측면에서는 사업재원의 일부 혹은 단위사업의 작은 부분으로만 수단(예: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와 연계)이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신고전학과 계열의 공급중시이론, 특히 산업간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균형발전론자들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급능력의 미비가 저성장 악순환의 주요한 원인이며, 공급능력이 확충되면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요계약(시장미비) 역시 저소득과 투자유인의 과소로 이어지며, 공급능력의 증대를 제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도 있다.<sup>2)</sup> 이러한 면에서 공급조건뿐만 아니라 수요조건과 그 영향을 평가하고 적합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수단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간 보완관계에 근거하여 수요가 공급(생산)에 주는 효과와 외생적인 수요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유발수요의 중요성(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은 이미 고전적 경제발전론에서 주요한 이론으로 정형화되었다(Hirshman(1961)). 유발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 공급이 반응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sup>3)</sup> 지역경제가 연계된 구도에서 보면 유발수요의 창출과 지역간 분산효과(누출구조)는 지역의 성장성이나 지역내 비교우위 산업을 밝히는데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량화를 위한 분석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

산업간 보완관계에 의거한 공급효과(생산효과)는 IRIO모형(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이나 MRIO모형(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수요-생산승수를 적용하면 분석이 가능하다.<sup>4)</sup> 반면 수요변화에 의한 유발수요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모형으로는 지해명(2008)에서 정식화된 수요-수요승수가 참조할 수 있는 선행연구이다. 동 모형은 단일지역(혹은 국가 차원)에 국한된 모형이므로 지역간 연계구조가 사상되어 있어 지역경제간 수요창출과 누출효과를 정식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지역간 수요-수요승수를 도출하는데 있어 IRIO모형이나 MRIO모형에 기존 수요-수요승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1) 특정지역의 시장은 소득과 인구수에 비례하여 성장하지만 지역산업간 연계구조에 의거한 유발수요도 시장형성에 기여하는 변수로 나타나게 된다. 고전적 발전이론에서는 시장규모를 주요한 투자유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장규모의 과소가 성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 2) 경제상황이 유효수요부족(디플레이션 갭)인지 혹은 공급부족(인플레이션 갭)인지 평가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하자는 논지이다(Nurkse(1953)). 수요조건과 공급조건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당연히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지만 지역경제간 구도에서는 누출(leakage)로 인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므로 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한국의 지역경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논점 중의 하나이다.
- 3) 고급(고차원·고전) 경제발전이론(high development theory)은 1960년대 이전의 경제발전이론을 칭하는 것으로 그 명칭은 Krugman(1993)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론의 한 축이 불균형성장론으로 구분되는데 경제성장이 유발되는 구조에서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투자가 집중되는 선도산업과 후발산업간에는 산업간 보완관계에 근거한 유발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수요에 근거하여 투자가 유발되는 등 파생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견해이다(Hirshman(1961)).
- 4) IRIO모형은 지역내 투입과 지역간 투입을 구분, 실사를 통하여 모형을 구축하며, MRIO모형은 지역별 투입구조에 대하여 지역간 교역비율을 적용하는 형식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차이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실사를 통하여 구축하는 IRIO모형은 지역내외 투입과 최종수요를 구분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MRIO모형은 추정된 교역구조(중간투입과 최종수요의 합으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내·지역외 투입이 결정되므로 정확도는 IRIO모형에 비하여 떨어지지만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MRIO모형은 개별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구축되고 있는 반면 IRIO모형은 한국은행의 2003년, 2005년(2003년의 연장표) 모형만이 있을 뿐이다.



### 3. 수요승수의 도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에서는 지역별 투입(intra-regional input)과 지역간 투입(inter-regional input)이 존재하므로 한지역의 경제적 조건 변화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승수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포괄하는 지역간 승수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역간 수요승수 즉 특정지역의 산업별 수요변화가 지역내 타산업과 타지역·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단일지역 수요승수는 지해명(2008)에서 개발되었으며, 산업별 수요승수와 수요연관구조를 분석하였고, 생산승수와의 차별성을 분석한바 있다. 단일지역 승수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간 수요승수를 도출하고 수요연관구조를 분석하도록 한다.

#### 가. 지역간 수요승수의 도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의 수요-수요승수(수요승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2지역(L, M)을 설정하고, 각 지역이 <2개 산업>으로 구성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을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내 투입계수행렬을 ( $A^{LL}, A^{MM}$ ), 지역간 투입행렬은 ( $A^{ML}, A^{LM}$ ), 지역별 생산벡터는 ( $X^L, X^M$ ), 최종수요벡터는 ( $Y^L, Y^M$ )로 표기하면 두 지역의 산업연관관계는 식(1)과 식(2)로 표현된다.

$$(1) (I - A^{LL}) X^L - A^{LM} X^M = Y^L$$

$$(2) -A^{ML} X^L + (I - A^{MM}) X^M = Y^M$$

지역 L과 지역 M을 결합하여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3) \begin{bmatrix} X^L \\ X^M \end{bmatrix} = \begin{bmatrix} I & 0 \\ 0 & I \end{bmatrix} - \begin{bmatrix} A^{LL} & A^{LM} \\ A^{ML} & A^{MM} \end{bmatrix}^{-1} \begin{bmatrix} Y^L \\ Y^M \end{bmatrix}$$

식(3)에서 오른 편의 역행렬(Leontief inverse)은 전형적인 지역간 생산승수로서 지역별·산업별 최종수요가 변화될 때 이에 대응하여 지역별 생산벡터를 산출하게 된다. 식(3)을 수요승수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렬 및 벡터를 정의한다.<sup>5)</sup>

<L 지역> 생산  $X^L = \begin{pmatrix} X_1 \\ X_2 \end{pmatrix}$ , <M 지역> 생산  $X^M = \begin{pmatrix} X_3 \\ X_4 \end{pmatrix}$

5) 분석에서는  $\begin{bmatrix} X_1^L \\ X_2^L \\ X_1^M \\ X_2^M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LL} & a_{12}^{LL} & a_{11}^{LM} & a_{12}^{LM} \\ a_{21}^{LL} & a_{22}^{LL} & a_{21}^{LM} & a_{22}^{LM} \\ a_{11}^{ML} & a_{12}^{ML} & a_{11}^{MM} & a_{12}^{MM} \\ a_{21}^{ML} & a_{22}^{ML} & a_{21}^{MM} & a_{22}^{MM} \end{bmatrix} \begin{bmatrix} Y_1^L \\ Y_2^L \\ Y_1^M \\ Y_2^M \end{bmatrix}$  형태로 행렬식을 표현할 수 있으나 지역구분과 승수구

분을 위한 첨자들에 의한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L, M)의 첨자대신 4개의 산업으로 표기하였다.

$$\langle L \text{ 지역} \rangle \text{ 최종수요 } Y^L = \begin{pmatrix} Y_1 \\ Y_2 \end{pmatrix}, \quad \langle M \text{ 지역} \rangle \text{ 최종수요 } Y^M = \begin{pmatrix} Y_3 \\ Y_4 \end{pmatrix}$$

두 지역 2개 산업의 생산과 최종수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매개하는 지역간 생산승수를  $(I-A)^{-1}$ (4×4 행렬)로 표기하면 지역간 생산승수의 관계식은 식(4)와 같이 표현된다.

$$(4) \quad \begin{bmatrix} X_1 \\ X_2 \\ X_3 \\ X_4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a_{12} & a_{13} & a_{14} \\ a_{21} & a_{22} & a_{23} & a_{24} \\ a_{31} & a_{32} & a_{33} & a_{34} \\ a_{41} & a_{42} & a_{43} & a_{44} \end{bmatrix} \begin{bmatrix} Y_1 \\ Y_2 \\ Y_3 \\ Y_4 \end{bmatrix}, \quad \text{두지역 생산 } X = \begin{bmatrix} X_1 \\ X_2 \\ X_3 \\ X_4 \end{bmatrix}, \quad \text{두지역 최종수요 } Y = \begin{bmatrix} Y_1 \\ Y_2 \\ Y_3 \\ Y_4 \end{bmatrix}$$

$$\text{지역간 생산승수 } (I-A)^{-1} = \begin{bmatrix} a_{11} & a_{12} & a_{13} & a_{14} \\ a_{21} & a_{22} & a_{23} & a_{24} \\ a_{31} & a_{32} & a_{33} & a_{34} \\ a_{41} & a_{42} & a_{43} & a_{44} \end{bmatrix}$$

지역간 생산승수를 도출하는 식(1)~식(3)에서 두 지역에는 지역간 투입이 존재하므로 한 지역의 최종수요가 변화될 때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지역간 생산유발효과는 지역간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승수의 원소(L지역의 투입이 M지역에 유발하는 효과(원소:  $a_{13}, a_{14}, a_{23}, a_{24}$ ), M지역의 투입이 L지역에 유발하는 효과(원소:  $a_{31}, a_{32}, a_{41}, a_{42}$ ))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역간 수요유발 측면에서 지역간·산업간 관계를 정식화하기 위하여 최종수요와 생산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식(4)의 생산승수(레온티에프 역행렬)의 대각원소는 식(5)와 같이, 비대각원소는 식(6)의 형태로 표현하도록 한다.

$$(5) \quad \alpha_{ii} = \frac{\Delta X_i}{\Delta Y_i}, \quad i = 1, 2, 3, 4$$

$$(6) \quad \alpha_{ij} = \frac{\Delta X_i}{\Delta Y_j}, \quad i, j = 1, 2, 3, 4, \quad i \neq j$$

대각·비대각원소의 조합을 이용하면 식(5)와 식(6)은 식(7) 및 (8)과 같이 최종수요-수요(final demand to demand)간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j산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i산업의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계수이다. 즉 수요-수요간의 관계는 한 산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산업별 생산을 매개하지 않고 해당지역 및 타지역의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정립될 수 있다.

$$(7) \ a_{ij}^* = \frac{a_{ij}}{a_{ii}} = \frac{\left[ \frac{\Delta X_j}{\Delta Y_j} \right]}{\left[ \frac{\Delta X_i}{\Delta Y_i} \right]} = \frac{\Delta Y_i}{\Delta Y_j}$$

$$(8) \ \Delta Y_i = a_{ij}^* \cdot \Delta Y_j$$

단일지역 수요승수를 지역간 수요승수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첫째, 수학적 연결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식(7)에서 보면 식(5)와 식(6)의 생산을 서로 상쇄시키는 한편 원소는 <산업 i> 와 <산업 j>의 수요의 변화로 변환된다. 이러한 중간과정의 생략은 첫 번째 요인은 수요-생산승수, 두 번째 요인은 생산과 수요간 관계를 매개하는 식이므로 수학적 관계로서 연속적 연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지해명(2008) 참조). <L 지역>의 산업은 <산업 1, 산업 2>로 <M 지역>의 산업은 <산업 3, 산업 4>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산업간 수요관계식을 지역산업간 수요변화로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7)과 식(8)을 식(4)의 지역간 생산승수에 적용할 경우 수요-수요승수행렬 (A\*)은 식(9)와 같이 도출될 수 있으며, 지역간 산업연관관계는 식(10)으로 정의된다. 지역간 생산승수에서는 지역별 최종수요가 독립변수로서, 지역별 생산이 종속변수로서 기능하게 되지만 지역간 수요승수에서는 특정지역·산업의 최종수요가 독립변수로서, 타지역·타산업의 수요가 종속변수로서 도출되는 형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에서 나타나는 외생적인 최종수요가 해당지역 및 타지역의 개별산업에 주는 수요유발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9) \ A^* = \begin{bmatrix} \frac{1}{a_{11}} & 0 & 0 & 0 \\ a_{11} & \frac{1}{a_{22}} & 0 & 0 \\ 0 & 0 & \frac{1}{a_{33}} & 0 \\ 0 & 0 & 0 & \frac{1}{a_{44}} \end{bmatrix} \begin{bmatrix} a_{11} & a_{12} & a_{13} & a_{14} \\ a_{21} & a_{22} & a_{23} & a_{24} \\ a_{31} & a_{32} & a_{33} & a_{34} \\ a_{41} & a_{42} & a_{43} & a_{4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frac{a_{12}}{a_{11}} & \frac{a_{13}}{a_{11}} & \frac{a_{14}}{a_{11}} \\ \frac{a_{21}}{a_{22}} & 1 & \frac{a_{23}}{a_{22}} & \frac{a_{24}}{a_{22}} \\ \frac{a_{31}}{a_{33}} & \frac{a_{32}}{a_{33}} & 1 & \frac{a_{34}}{a_{33}} \\ \frac{a_{41}}{a_{44}} & \frac{a_{42}}{a_{44}} & \frac{a_{43}}{a_{44}} & 1 \end{bmatrix}$$

6) 그 관계를 보면 첫째, 산업 j의 최종수요 변화가 산업 i의 생산변화를 유발하며, 둘째, 산업 i의 생산변화가 산업 i의 최종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산업i의 변화가 상쇄된다(지해명(2008)).

$$(10)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a_{14} \\ a_{21} & 1 & a_{23} & a_{24} \\ a_{31} & a_{32} & 1 & a_{34} \\ a_{41} & a_{42}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a^*_{14} \\ a^*_{21} & 1 & a^*_{23} & a^*_{24} \\ a^*_{31} & a^*_{32} & 1 & a^*_{34} \\ a^*_{41} & a^*_{42}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서론에서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지역간 수요승수의 경제적 의미에 관한 것이다. 식(10)은 식(11)에서와 같이 지역내·지역간 승수로 분해할 수 있다.

$$(11)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0 & 0 \\ a^*_{21} & 1 & 0 & 0 \\ 0 & 0 & 1 & a^*_{34} \\ 0 & 0 & a^*_{43} & 1 \end{bmatrix} + \begin{bmatrix} 0 & 0 & a^*_{13} & a^*_{14} \\ 0 & 0 & a^*_{23} & a^*_{24} \\ a^*_{31} & a^*_{32} & 0 & 0 \\ a^*_{41} & a^*_{42} & 0 & 0 \end{bmatrix}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여기에서 단일지역 수요승수와 차별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 쪽 승수행렬의 첫 번째 행렬은 <L 지역>과 <M 지역>의 지역내 중간투입에 근거한 수요승수, 두 번째 행렬은 <L 지역>과 <M 지역>간의 지역간 투입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지역간 수요승수를 나타낸다. <L 지역>의 2개 산업과 <M 지역>의 2개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L 지역>과 <M 지역>의 자기지역 수요 뿐만 아니라 <L 지역>이 <M 지역>에 미치는 효과, <M 지역>이 <L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지역간 수요승수의 연관구조

			투입측면			
			L 지역		M 지역	
			산업 1	산업 2	산업 3	산업 4
배분측면	L 지역	산업 1	1	$a^*_{12}$	$a^*_{13}$	$a^*_{14}$
		산업 2	$a^*_{21}$	1	$a^*_{23}$	$a^*_{24}$
	M 지역	산업 3	$a^*_{31}$	$a^*_{32}$	1	$a^*_{34}$
		산업 4	$a^*_{41}$	$a^*_{42}$	$a^*_{43}$	1

지역간 수요승수의 강도는 <표 1>에서와 같은 범주구분을 갖게 되는데 식(12)에서 보면 <L 지역>의 두 산업(<산업 1>과 <산업 2>)에서 최종수요가 변화되면 <L 지역> 뿐만 아니라 <M 지역>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효과의 강도는 산

업연관관계에 준하게 된다. 좌변의 산출된 유발수요 벡터를 보면 <L 지역>의 <산업 1>은  $(1 + a^{*12})$ , <산업 2>는  $(a^{*21} + 1)$ 로 표현되는데 자체의 수요증대뿐만 아니라 지역내 산업연관관계에 의하여 수요가 증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M 지역>에서 <산업 3>의 수요는  $(a^{*31} + a^{*32})$ , <산업 4>의 수요는  $(a^{*41} + a^{*42})$ 로, <산업 1>과 <산업 2>에 공급하는 지역간 투입비중에 근거하는 지역간 파급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지역간·산업간 연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조사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게 된다.

$$(12) \quad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a_{14}^* \\ a_{21}^* & 1 & a_{23}^* & a_{24}^* \\ a_{31}^* & a_{32}^* & 1 & a_{34}^* \\ a_{41}^* & a_{42}^*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1 \\ 1 \\ 0 \\ 0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12} \\ a^{*21} + 1 \\ a^{*31} + a^{*32} \\ a^{*41} + a^{*42} \end{bmatrix}$$

지역간 투입이 없는 경우에는 식(13)에서와 같이 지역간 유발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수요가 발생한 지역의 산업연관관계만이 승수로 기능하게 된다. 현실에서는 지역간 교차거래(cross-hauling)<sup>7)</sup> 등이 존재하므로 지역간 투입이 존재하지 않는 연관관계는 비현실적이며,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13) \quad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0 & 0 \\ a_{21}^* & 1 & 0 & 0 \\ 0 & 0 & 1 & a_{34}^* \\ 0 & 0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1 \\ 1 \\ 0 \\ 0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12} \\ a^{*21} + 1 \\ 0 \\ 0 \end{bmatrix}$$

여기에서 지역내·지역간 승수의 원소들은 중간투입에 근거한 수요-생산관계의 승수분석(통상적인 기술구조에 근거한 승수분석)과는 달리 지역산업간 최종수요-수요간의 연관관계(수요연관구조)를 나타내는 승수이다. 생산승수가 포괄적이고, 유용한 모형이지만 생산승수로 파악이 되지 않는 지역간 수요연관구조, 수요의 누출구조, 수요제약이 발생할 경우의 성장제약의 분석 등에서는 수요승수가 적합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승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sup>8)</sup> 지역간 수요승수에서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비중에 따라서 중간투입률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지역간 수요승수의 개개의 원소에 영향을 주므로 부가가치 비중도 동 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정요인에 의한 산업별 수요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도 타지역·타산업의 영향(파급효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유발수요, 즉 상쇄요인을 감안해야 하므로 외생적 최종수요와 관련된 시나리오의 설정

7) 교차거래에 관한 연구는 지해명(2005)을 참조할 수 있다.

8) 닫힌 모형에서 최종수요인 독립변수는 산업별 최종수요(예로 3부문을 가정하면 Y1, Y2) 외에 소득에 의하여 유발되는 최종수요(Y3)가 포함되며, 종속변수에는 유발수요( $Y_1^*$ ,  $Y_2^*$ ) 외에 소득에 의하여 유발되는 수요( $Y_3^*$ )가 포함된다. 소득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생수요의 변화(Y3)는 1, 2 부문에서는 내생소비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내생소비는 생산에 영향을 미쳐 유발수요( $Y_1^*$ ,  $Y_2^*$ )를 변화시키는 전달경로를 보인다. 외생수요(Y3)는 직접적으로 소득에 의하여 나타나는 외생수요에 의한 유발수요( $Y_3^*$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Y1과 Y2는 내생인 소득변화를 유발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유발수요( $Y_3^*$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분석방법**

자체의 외생적 수요에 근거한 수요(시장)의 형성(내부화 비중), 타지역의 외생적 수요변화에 근거한 유발수요의 강도, 지역간 생산승수와 지역간 수요승수의 차별성, 그리고 산업별 유발효과를 식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석방법을 설정한다. 이는 서론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의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첫째, 지역간 수요유발효과의 평가는 식(14)에서와 같이 <L 지역>의 <산업 1>과 <산업 2>에서 최종수요가 나타나는 경우, 식(15)에서와 같이 <M 지역>의 <산업 3>과 <산업 4>에서 최종수요가 나타나는 경우에 유발되는 지역내·지역간 수요유발효과에 근거한다. 이는 지역내 산업간 연계정도, 나아가 지역간 산업간 연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의 수요누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수요의 누출은 타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유발효과의 영향을 받는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해당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장 동인이 유출되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14) \text{ L 지역: }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a_{14}^* \\ a_{21}^* & 1 & a_{23}^* & a_{24}^* \\ a_{31}^* & a_{32}^* & 1 & a_{34}^* \\ a_{41}^* & a_{42}^*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1 \\ 1 \\ 0 \\ 0 \end{bmatrix},$$

$$\text{내부화비중} = \frac{(\Delta Y_1^* + \Delta Y_2^*)}{\sum_1^4 \Delta Y_i^*} \times 100$$

$$(15) \text{ M 지역: }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a_{14}^* \\ a_{21}^* & 1 & a_{23}^* & a_{24}^* \\ a_{31}^* & a_{32}^* & 1 & a_{34}^* \\ a_{41}^* & a_{42}^*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0 \\ 1 \\ 1 \\ 1 \end{bmatrix},$$

$$\text{내부화비중} = \frac{(\Delta Y_3^* + \Delta Y_4^*)}{\sum_1^4 \Delta Y_i^*} \times 100$$

둘째, 지역간 생산승수와 지역간 수요승수의 지역내·지역간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생산연계구조와 수요연계구조간 차별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생산유발효과와 수요유발효과의 차별성은 식(16)~식(17)의 예와 같이 <L 지역>의 <산업 1>과 <산업 2>에서 수요가 발생할 경우의 생산승수와 수요승수의 내부화비중 등을 비교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하다.

$$(16) \text{ 생산증수: } \begin{bmatrix} \Delta X_1 \\ \Delta X_2 \\ \Delta X_3 \\ \Delta X_4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a_{12} & a_{13} & a_{14} \\ a_{21} & a_{22} & a_{23} & a_{24} \\ a_{31} & a_{32} & a_{33} & a_{34} \\ a_{41} & a_{42} & a_{43} & a_{44} \end{bmatrix} \begin{bmatrix} \Delta Y_1 = 1 \\ \Delta Y_2 = 1 \\ \Delta Y_3 = 0 \\ \Delta Y_4 = 0 \end{bmatrix},$$

$$\text{내부화비중} = \frac{(\Delta X_1 + \Delta X_2)}{\sum_1^4 \Delta X_i} \times 100$$

$$(17) \text{ 수요증수: } \begin{bmatrix} \Delta Y_1^* \\ \Delta Y_2^* \\ \Delta Y_3^* \\ \Delta Y_4^* \end{bmatrix}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a_{14}^* \\ a_{21}^* & 1 & a_{23}^* & a_{24}^* \\ a_{31}^* & a_{32}^* & 1 & a_{34}^* \\ a_{41}^* & a_{42}^* & a_{43}^* & 1 \end{bmatrix} \begin{bmatrix} \Delta Y_1 = 1 \\ \Delta Y_2 = 1 \\ \Delta Y_3 = 0 \\ \Delta Y_4 = 0 \end{bmatrix},$$

$$\text{내부화비중} = \frac{(\Delta Y_1^* + \Delta Y_2^*)}{\sum_1^4 \Delta Y_i^*} \times 100$$

셋째,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은 지역내 산업별 유발수요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식(14)와 식(15)의 분석을 통하여 식(18)과 (19)의 비교에서와 같이 지역내 수요유발효과가 큰 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18) \text{ <L 지역> <산업 1> } \frac{\Delta Y_1^*}{\Delta Y_1^* + \Delta Y_2^*}, \text{ <산업 2> } \frac{\Delta Y_2^*}{\Delta Y_1^* + \Delta Y_2^*}$$

$$(19) \text{ <M 지역> <산업 3> } \frac{\Delta Y_3^*}{\Delta Y_3^* + \Delta Y_4^*}, \text{ <산업 4> } \frac{\Delta Y_4^*}{\Delta Y_3^* + \Delta Y_4^*}$$

$$\begin{bmatrix} 1 & \frac{a_{12}}{a_{11}} & \frac{a_{13}}{a_{11}} & \frac{a_{14}}{a_{11}} \\ \frac{a_{21}}{a_{22}} & 1 & \frac{a_{23}}{a_{22}} & \frac{a_{24}}{a_{22}} \\ \frac{a_{31}}{a_{33}} & \frac{a_{32}}{a_{33}} & 1 & \frac{a_{34}}{a_{33}} \\ \frac{a_{41}}{a_{44}} & \frac{a_{42}}{a_{44}} & \frac{a_{43}}{a_{44}} & 1 \end{bmatrix}$$

## 〈부록 2〉 IRIO-CD생산함수 연계모형

### 1. 공급승수의 유도

Ghosh(1958)는 배분구조에서의 산업연관승수, 생산측면에서의 기술계수 대신 배분계수(allocation coefficient, 혹은 supply coefficient) 개념을 도입하고 공급모형을 정식화하였다. Ghosh(1958, p. 62)에서는 폐쇄경제모형을 개방경제모형으로 확장하면서 국내공급만이 아닌 수입까지를 포괄하는 공급개념으로 모형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도출하는 공급계수는 생산이 아닌 공급으로 나누어 유도되어야 정확한 승수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지만 Miller·Blair(1985·2009)에서는 공급측면의 모형(supply-side model)이라는 주요한 논점은 받아들였지만 폐쇄경제라는 구조에서도 생산과 공급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단일국가모형에서는 생산과 공급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모형을 전개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면 지역간 모형이 아닌 일국모형에서도 생산 이외 잔폐물·자가공정산출물 등 공급이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간 모형에서는 공급대신 생산을 기반으로 공급계수를 유도하면 승수의 왜곡은 더욱 커지게 된다.<sup>1)</sup>

모형의 구조를 보면 산업연관모형의 산출승수(output multiplier)는 식(1)과 같이 표현된다(Miller·Blair(1985·2009) 참조). 2산업( $i, j=1$ 산업, 2산업)으로 구성된 모델 경제에서 ( $X_i$ )는 생산, ( $W_i$ )는 산업별 생산과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현행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면 산출(총투입액)은 공급이 아니므로 잔폐물과 자가공정산출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출승수는 산출액과 해당산업이 타산업에 공급하는 중간수요를 기준으로 도출된다. 산출승수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계수는 <2개 산업>으로 구성된 모형에서 식(1)과 같이 나타나며, 승수( $(I-\bar{A})^{-1}$ )는 식(2)와 같이 표기된다.

$$(1) \bar{A} = \begin{bmatrix} \bar{a}_{11} & \bar{a}_{12} \\ \bar{a}_{21} & \bar{a}_{22} \end{bmatrix} = \begin{bmatrix} Z_{11}/X_1 & Z_{12}/X_1 \\ Z_{21}/X_2 & Z_{22}/X_2 \end{bmatrix}$$

$$(2) X' = W(I-\bar{A})^{-1}, (I-\bar{A})^{-1} = \begin{bmatrix} (1-\bar{a}_{11}) & -\bar{a}_{12} \\ -\bar{a}_{21} & (1-\bar{a}_{22}) \end{bmatrix}^{-1}$$

식(2)의 산출승수는 식(3)과 같이 계산된다. <1 산업>의 잔폐물·자가공정산출액이 많아 산출이 공급에 비하여 작다면 <1 산업>이 타산업에 대한 공급비중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식에서 <1 산업>이 <2 산업>에 공급하는 중간수요( $Z_{12}$ )가 크면 (2)식에서 첫 행 두 번째 열의 원소 ( $-\bar{a}_{12}$ )의 값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전체적인 승수는 물론 해당 원소의 역행렬 값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초래된다. 식(3)

1) 공급은 국내생산과 수입을 포괄하므로 Ghosh(1958)는 해당모형을 개방경제모형을 확장하면서 수입까지를 포괄하는 공급개념으로 모형을 정식화하고 있다. Miller·Blair(1985·2009)가 폐쇄경제, 혹은 국내부문만을 고려했다고 해도 생산과 공급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급은 자가공정산출액과 잔폐물을 포함하게 되는데 제조업(공산품)에 고유한 현상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크기 나타난다(산업연관분석해설(2014)). 해당 모형을 지역간 모형으로 확장하게 되면 지역간 교역이 존재하므로 승수의 왜곡은 더욱 심해진다.



을 조정한 승수, 즉 공급승수로 변환하여 비교하면(S 및 s는 생산에 잔폐물·자가공정산출액을 포함하여 보정한 공급계수 행렬과 공급계수) 식(4)와 같이 표현되며, 간략하게 역행렬의 원소를 비교하면 식(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3) (I - \bar{A})^{-1} = \frac{1}{|1 - \bar{A}|} \begin{bmatrix} (1 - \bar{a}_{22}) & \bar{a}_{12} \\ \bar{a}_{21} & (1 - \bar{a}_{11}) \end{bmatrix}$$

$$(4) (I - \bar{S})^{-1} = \frac{1}{|1 - \bar{S}|} \begin{bmatrix} (1 - \bar{s}_{22}) & \bar{s}_{12} \\ \bar{s}_{21} & (1 - \bar{s}_{11}) \end{bmatrix}$$

$$(5) \frac{\bar{a}_{12}}{|1 - \bar{A}|} > \frac{\bar{s}_{12}}{|1 - \bar{S}|}$$

결과적으로 산출승수를 기준으로 승수를 분석할 경우 해당산업에 대한 외생적인 주입으로 인한 효과가 타산업의 승수효과를 더욱 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부분이 Miller·Blair(1985·2009)가 파악하지 못한 승수효과의 왜곡이다. 따라서 공급으로 보정한 공급승수로 승수분석을 해야만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게 된다. 내생공급을 (SX)로 표기하면 식(4) 및 식(5)에 기반한 공급승수는 식(6)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6) SX'^* = W \cdot (I - \bar{S})^{-1}, \quad (I - \bar{S})^{-1} = \frac{1}{|1 - \bar{S}|} \begin{bmatrix} (1 - \bar{s}_{11}) & \bar{s}_{12} \\ \bar{s}_{21} & (1 - \bar{s}_{22}) \end{bmatrix}$$

<표 1> 2013년 IRIO모형의 산출승수와 공급승수: 사례

	산출승수	공급승수
서울-인천 금속제품 승수	1.19	0.30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에서는 2013년 서울의 <1차 금속제품>의 생산은 3,363.8억원, 잔폐물은 9,616.1억원, 총공급은 1조 2,980억원으로 인천 <1차 금속제품>으로의 반출이 3,183.3억원(서울 생산의 95%를 점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한 승수비교에서는 서울-인천간 <1차 금속산업>의 승수는 식(3)의 계산식을 토대로 할 경우 (1.19)로 나타나 서울지역 <1차 금속>산업이 인천의 <1차 금속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공급승수로 보정한 식(4)의 공급승수에서는 (0.30)으로 승수가 낮아져 이를 보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기준 IRIO모형(한국은행(2015))의 대분류(30개 산업)에서는 30개 산업중 잔폐물이 발생하는 산업은 제조업군에 속하는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등 7개 산업으로 전산업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산출승수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이 본 논문이 방법론 개선에 기여한 부분이라고 제시한다.

## 2. 지역산업간 부가가치승수의 도출: 공급승수의 적용

산출승수를 개선한 공급승수를 도입하였으므로 기존 지해명(2012, 2013)에서 정립된 지역간 부가가치승수를 개선하여 지역산업별 생산요소의 성장기여도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기존 산출승수를 보정한 공급승수 행렬을  $(Q)$ , <지역  $L$ >과 <지역  $M$ >의 <산업  $1$ >과 <산업  $2$ >의 공급승수행렬의 원소를  $(q_{ij}^{RR}, R=L, M, i, j=1, 2)$  라고 하면 보정된 공급승수는 식(7)과 같이 나타난다.

$$(7) [SX_1^L, SX_2^L, SX_1^M, SX_2^M] = [W_1^L, W_2^L, W_1^M, W_2^M] \cdot \begin{bmatrix} q_{11}^{LL} & q_{12}^{LL} & q_{11}^{LM} & q_{12}^{LM} \\ q_{21}^{LL} & q_{22}^{LL} & q_{21}^{LM} & q_{22}^{LM} \\ q_{11}^{ML} & q_{12}^{ML} & q_{11}^{MM} & q_{12}^{MM} \\ q_{21}^{ML} & q_{22}^{ML} & q_{21}^{MM} & q_{22}^{MM} \end{bmatrix}$$

지역산업별 공급승수를 부가가치승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각각의 승수를 재계산하면 식(8)과 같이 나타나며, 변환된 부가가치 승수행렬은 식(9)와 같이 표현된다 (지해명(2012) 참조).

$$(8) q_{ij}^{GG*} = \frac{q_{ij}^{GG}}{q_{jj}^{GG}} = \frac{\Delta SX_j^G / \Delta W_i^G}{\Delta SX_j^G / \Delta W_j^G} = \frac{\Delta W_j^G}{\Delta W_i^G}, \Delta W_j^G = q_{ij}^{GG*} \cdot \Delta W_i^G, G=L, M, i, j=1, 2$$

$$(9) Q^* = [q_{ij}^{GG*}]$$

부가가치의 연관구조는 <2 지역>, <2 산업>으로 구성된 구조에서 지역내 산업간, 지역간 산업간 효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역산업간 관계로 인해 특정산업의 부가가치변화는 타지역·타산업 부가가치변화를 초래한다. 식(8)을 재구성하면 식(10)의 부가가치승수가 유도된다. 여기에서  $(\Delta W_i^{L*}, \Delta W_i^{M*}, Q^*)$ 를 각각 내생부가가치, 외생부가가치, 부가가치 승수행렬을 나타낸다.

$$(10) \Delta W'^* = \Delta W' \cdot Q^*$$

$$[\Delta W_1^{L*}, \Delta W_2^{L*}, \Delta W_1^{M*}, \Delta W_2^{M*}] = [\Delta W_1^L, \Delta W_2^L, \Delta W_1^M, \Delta W_2^M] \cdot \begin{bmatrix} 1 & q_{12}^{LL*} & q_{11}^{LM*} & q_{12}^{LM*} \\ q_{21}^{LL*} & 1 & q_{21}^{LM*} & q_{22}^{LM*} \\ q_{11}^{ML*} & q_{12}^{ML*} & 1 & q_{12}^{MM*} \\ q_{21}^{ML*} & q_{22}^{ML*} & q_{21}^{MM*} & 1 \end{bmatrix}$$

$(L, M)$ 지역과  $(1, 2)$ 산업으로 구성된 모델경제의 부가가치승수에서는 외생부가가

치의 변화에 따라서 두지역과 두산업의 내생부가가치가 변화되는 전달경로를 갖게 된다. <L지역>·<1산업>의 내생부가가치( $\Delta W_1^{L*}$ )를 예로 하면 식(11)~식(14)와 같은 식이 유도된다.

<L지역 1산업>의 외생부가가치만이 변할 경우

$$(11) \Delta W_1^{L*} = \Delta W_1^L,$$

<L지역 1, 2산업>의 외생부가가치가 변할 경우

$$(12) \Delta W_1^{L*} = \Delta W_1^L + q_{21}^{LL*} \cdot \Delta W_2^L$$

<L지역 1, 2산업, M지역 1산업>의 외생부가가치가 변할 경우

$$(13) \Delta W_1^{L*} = \Delta W_1^L + q_{21}^{LL*} \cdot \Delta W_2^L + q_{11}^{ML*} \cdot \Delta W_1^M$$

<L지역 1, 2산업, M지역 1, 2산업>의 외생부가가치가 모두 변할 경우

$$(14) \Delta W_1^{L*} = \Delta W_1^L + q_{21}^{LL*} \cdot \Delta W_2^L + q_{11}^{ML*} \cdot \Delta W_1^M + q_{21}^{ML*} \cdot \Delta W_2^M$$

즉 모형내에 포함된 모든 지역산업의 외생부가가치 변화는 변환된 부가가치승수의 원소가 "0"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지역산업의 부가가치를 변화시키게 된다. 이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승수를 유도한 방법론의 정교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출승수는 이 메커니즘을 모형내에서 구현할 수 없다.

### 3. 부가가치승수와 CD생산함수의 연계

부가가치승수와 노동·자본 생산요소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생산함수는 CD형으로 가정한다(지해명(2013·2014) 참조).  $w_i^R$ 는 지역산업별 부가가치,  $A_i^R$ 은 총요소생산성,  $L_i^R$ 는 노동투입,  $\alpha_i^R$ 는 노동분배몫(labor share),  $K_i^R$ 는 자본투입,  $\beta_i^R$ 는 자본분배몫(capital share)으로 표기하면 지역산업별 생산함수는 식(15)와 같이 표기된다.

$$(15) W_i^R = A_i^R (L_i^R)^{\alpha_i^R} (K_i^R)^{\beta_i^R}, \quad \alpha_i^R + \beta_i^R = 1, \quad R = L, M, \quad i = 1, 2$$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노동·자본의 분배몫이 단기·중기적으로 일정하다면<sup>2)</sup> 식(15)의 부가가치는 식(16)에서와 같이 노동투입변화율을 ( $\Delta L_i^R$ ), 자본투입변화율을 ( $\Delta K_i^R$ )로 나타낼 수 있다.

$$(16) \Delta W_i^R = (\Delta L_i^R)^{\alpha_i^R} (\Delta K_i^R)^{\beta_i^R}, \quad R = L, M, \quad i = 1, 2$$

2) 노동과 자본의 기술진보(labor or capital augmenting technological progress)는 없으며, 노동과 자본의 민티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Barro-Sala-i-Martin(1995, pp.32~36)) 참조.

노동투입변화와 자본투입변화를 각각  $(l_i^R)^{\alpha_i^R}$ ,  $(k_i^R)^{\beta_i^R}$  로 표기하면 외생부가가치행렬은 식(16)에 의거하여 식(17)와 같이 나타난다.

$$(17) \Delta W' = [(l_1^L)^{\alpha_1^L} (k_1^L)^{\beta_1^L}, (l_2^L)^{\alpha_2^L} (k_2^L)^{\beta_2^L}, (l_1^M)^{\alpha_1^M} (k_1^M)^{\beta_1^M}, (l_2^M)^{\alpha_2^M} (k_2^M)^{\beta_2^M}]$$

식(10)의 지역산업별 생산요소-부가가치승수는 식(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Delta W'^* = \Delta W' \cdot Q^*,$$

$$[\Delta W_1^{L*}, \Delta W_2^{L*}, \Delta W_1^{M*}, \Delta W_2^{M*}] =$$

$$[(l_1^L)^{\alpha_1^L} (k_1^L)^{\beta_1^L}, (l_2^L)^{\alpha_2^L} (k_2^L)^{\beta_2^L}, (l_1^M)^{\alpha_1^M} (k_1^M)^{\beta_1^M}, (l_2^M)^{\alpha_2^M} (k_2^M)^{\beta_2^M}] \begin{bmatrix} 1 & q_{12}^{LL*} & q_{11}^{LM*} & q_{12}^{LM*} \\ q_{21}^{LL*} & 1 & q_{21}^{LM*} & q_{22}^{LM*} \\ q_{11}^{ML*} & q_{12}^{ML*} & 1 & q_{12}^{MM*} \\ q_{21}^{ML*} & q_{22}^{ML*} & q_{21}^{MM*} & 1 \end{bmatrix}$$

생산요소 부가가치승수 모형의 도출과정은 (지해명(2012·2013))에서와 같으나 본 연구에서는 승수의 변환과정에서 공급승수를 적용하였으며, 노동·자본 등 부가가치 생산요소의 외생적 투입변화가 나타났을 때 개별 생산요소의 지역간 누출규모를 정량화한다.

### <부록 3> 강원 지역투자 지원시책 (2017년도 기준)

지원유형		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고용 지원	고용창출	고용촉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지원기업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li> <li>▪고용 6개월 경과시 6개월 단위 지급, 임금의 80% 한도</li> </ul>
		일자리함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1인당 월80만원(대규모 40만원)</li> <li>▪설비투자 지원: 우선지원대상 고용추가 1인당 5백만원(제조업 1천만원, 총액의 1/3이내), 용자 최대 50억원(우선지원 25억원, 총액의 2/3이내)</li> <li>▪임금보전지원: 우선지원기업 1인당 최대 40만원</li> </ul>
		시간선택제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의 80%(우선지원 월60만원 한도, 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 한도), 3개월 주기로 신청</li> </ul>
		지역성장산업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60만원 1년간 지원 (임금의 80% 한도), 3개월 주기로 신청</li> </ul>
		전문인력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60만원 1년간 지원 (임금의 80% 한도), 3개월 주기로 신청</li> </ul>
	고용안정	정규직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상승분의 80%를 월 40만원 한도 1년간 지원</li> <li>▪간접노무비 월20만원 지원</li> </ul>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자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 지원 제외), 해당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지원</li> <li>-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20만원 (대규모 월 10만원)</li> <li>- 육아휴직 1개월후 30만원, 이후 복직후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인력: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기계약 재고용: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월60만원 (대규모 월30만원) 지원</li> </ul>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장려금: 비례임금 상승분 주15시간~주25시간이하: 월 최고40만원</li> <li>주25시간~주30시간이하: 월최고24만원</li> <li>(단, 임신기는 근로시간 구분없이 월 최고4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월20만원</li> <li>▪대체인력: 임금의 80%를 월60만원(대규모 월30만원) 한도 지원</li> </ul>			
일가정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노무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주10만원</li> <li>▪인프라 지원: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구축 비용 (최대 2천 5백만원 한도)</li> <li>▪인프라 용자: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을 위한 구축비용 용자 (최대 5천만원 지원)</li> </ul>		

지원유형		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고용 지원	고용 유지	고용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li> <li>▪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li> <li>- 근로자 1인당 1일 43천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li> </ul> </li> <li>▪ 타시도에서 이전해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1명당 60만원(6개월), 10억원 한도</li> </ul> </li> <li>▪ 콜센터의 경우 고용 및 교육훈련비 각각 10억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보조: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시 1명당 60만원(6개월)</li> <li>- 고용: 도내 거주자 신규채용 하여 상시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12개월)</li> </ul> </li> </ul>																					
	기 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에게 매분기 기준고용을 초과 고령자 1인당 18만원씩 지원</li> <li>▪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후 6개월간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li> </ul>																					
		임금피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크임금 대비 10%이상 감액된 금액을 1인당 연 1,080만원 한도 지원</li> <li>- 연소득 7,250만원 미만</li> </ul>																					
		근로시간 단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감소된 임금의 1/2을 지원,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li> <li>▪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li> </ul>																					
	세대간상생 고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피크제1인+청년3인=청년 1인당 연 1,080만원(대규모 540만원)을 총 2년간 지원</li> </ul>																						
자본 지원	국비 보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 연속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또는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강원도로의 이전 기업</li> <li>▪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기업으로 해외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이며 4년 이내 청산 또는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한도 기업당 60억원, 국내 복귀 기업은 입지 지원 한도 5억원,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 초과 불가</li> </ul> </li> </ul>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지역별</th> <th colspan="3">지원비율</th> <th rowspan="2">국비 비율</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지역</td> <td>설비보조 8%</td> <td>입지보조 10% 설비보조 11%</td> <td>입지보조 30% 설비보조 14%</td> <td>65%</td> </tr> <tr> <td>수도권인접</td> <td>설비보조 6%</td> <td>설비보조 8%</td> <td>입지보조 9% 설비보조 11%</td> <td>45%</td> </tr> <tr> <td>우대지역</td> <td>설비보조 1%</td> <td>입지보조 20% 설비보조 19%</td> <td>입지보조 40% 설비보조 24%</td> <td>75%</td> </tr> </tbody> </table>	지역별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보조 8%	입지보조 10% 설비보조 11%	입지보조 30% 설비보조 14%	65%	수도권인접	설비보조 6%	설비보조 8%	입지보조 9% 설비보조 11%	45%	우대지역	설비보조 1%	입지보조 20% 설비보조 19%
지역별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보조 8%	입지보조 10% 설비보조 11%	입지보조 30% 설비보조 14%	65%																				
수도권인접	설비보조 6%	설비보조 8%	입지보조 9% 설비보조 11%	45%																				
우대지역	설비보조 1%	입지보조 20% 설비보조 19%	입지보조 40% 설비보조 24%	75%																				

지원유형		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자 본 지 원	국비 보조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이전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했던 123개 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지역</th> <th colspan="3">지원비율</th> <th rowspan="2">국비 비율</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지역</td> <td>설비보조 8%</td> <td>입지보조 20% 설비보조 21%</td> <td>입지보조 30% 설비보조 24%</td> <td>65%</td> </tr> <tr> <td>수도권 인접지역</td> <td>설비보조 6%</td> <td>입지보조 10% 설비보조 18%</td> <td>입지보조 19% 설비보조 21%</td> <td>45%</td> </tr> <tr> <td>지원우대지역</td> <td>설비보조 1%</td> <td>입지보조 30% 설비보조 29%</td> <td>입지보조 40% 설비보조 34%</td> <td>75%</td> </tr> </tbody> </table>	지역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보조 8%	입지보조 20% 설비보조 21%	입지보조 30% 설비보조 24%	65%	수도권 인접지역	설비보조 6%	입지보조 10% 설비보조 18%	입지보조 19% 설비보조 2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보조 1%	입지보조 30% 설비보조 29%	입지보조 40% 설비보조 34%	75%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인 이상, 투자사업 장 영위 업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역전략산업 해당 ▪신규 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 이상						
	지역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보조 8%	입지보조 20% 설비보조 21%	입지보조 30% 설비보조 24%	65%																												
수도권 인접지역	설비보조 6%	입지보조 10% 설비보조 18%	입지보조 19% 설비보조 2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보조 1%	입지보조 30% 설비보조 29%	입지보조 40% 설비보조 34%	75%																												
지역기업의 증설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지역</th> <th colspan="3">지원비율</th> <th rowspan="2">국비 비율</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지역</td> <td>설비보조 8%</td> <td>설비보조 11%</td> <td>설비보조 14%</td> <td>65%</td> </tr> <tr> <td>수도권 인접지역</td> <td>설비보조 6%</td> <td>설비보조 8%</td> <td>설비보조 11%</td> <td>45%</td> </tr> <tr> <td>지원우대지역</td> <td>설비보조 1%</td> <td>설비보조 19%</td> <td>설비보조 24%</td> <td>75%</td> </tr> </tbody> </table>				지역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보조 8%	설비보조 11%	설비보조 14%	65%	수도권 인접지역	설비보조 6%	설비보조 8%	설비보조 1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보조 1%	설비보조 19%	설비보조 24%	75%	▪타시도 1년이상 경영, 상시고용 이전 전·후 20인 이상 또는 투자 20억원 이상 ▪공장, 본사, 연구소 등 전부 또는 각각 이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지역	지원비율			국비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지역	설비보조 8%	설비보조 11%	설비보조 14%	65%																												
수도권 인접지역	설비보조 6%	설비보조 8%	설비보조 11%	45%																												
지원우대지역	설비보조 1%	설비보조 19%	설비보조 24%	75%																												
지 방 비 보 조	타시도에서 이전하는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지 매입</td> <td>20명 이상 또는 20억이상 투자</td> <td>15%</td> <td>30억</td> </tr> <tr> <td>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td> <td>40%</td> <td>60억</td> </tr> <tr> <td rowspan="3">투자</td> <td>대기업</td> <td>10%</td> <td rowspan="3">30억</td> </tr> <tr> <td>중견기업</td> <td>20%</td> </tr> <tr> <td>중소기업</td> <td>30%</td> </tr> <tr> <td>임대료</td> <td>5년간 임대료</td> <td>30%</td> <td>10억</td> </tr> <tr> <td>본사 이전</td> <td>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td> <td></td> <td>10억</td> </tr> </tbody> </table>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부지 매입	20명 이상 또는 20억이상 투자	15%	30억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40%	60억	투자	대기업	10%	30억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임대료	5년간 임대료	30%	10억	본사 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부지 매입	20명 이상 또는 20억이상 투자	15%	30억																													
	100명 이상 또는 200억이상 투자	40%	60억																													
투자	대기업	10%	30억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임대료	5년간 임대료	30%	10억																													
본사 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지역기업 신증설 지원	▪국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업 경영 ▪상시고용 10명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신증설</td> <td>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 자 30억 이상</td> <td rowspan="4">총투자의 20%</td> <td>10억</td> </tr> <tr> <td>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 자 100억 이상</td> <td>20억</td> </tr> <tr> <td>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 자 200억 이상</td> <td>40억</td> </tr> <tr> <td>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td> <td>60억</td> </tr> </tbody> </table>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 자 3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 자 100억 이상	20억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 자 200억 이상	40억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60억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신증설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 자 3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 자 100억 이상		20억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 자 200억 이상		40억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60억																													

지원유형		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자 본 지 원	지 방 비 보 조	중대규모기업 (이전 신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li> <li>이전, 신설, 증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중대규모 (이전, 신·증설)</td> <td>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td> <td>총투자의 40%</td> <td>80억</td> </tr> <tr> <td>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td> <td>총투자의 50%</td> <td>100억</td> </tr> <tr> <td>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td> <td>총투자의 50%</td> <td>300억</td> </tr> <tr> <td>물류</td> <td>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td> <td>운송비 50%(3년)</td> <td>30억</td> </tr> </tbody> </table>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총투자의 40%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총투자의 50%	100억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총투자의 50%	300억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운송비 50%(3년)	30억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총투자의 40%	8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총투자의 50%	100억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총투자의 50%		300억																					
물류	상시고용 1,000명 이상 이고 투자 5,000억 이상	운송비 50%(3년)	30억																					
중대규모(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이상인 제조업 기업</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기준</th> <th>비율</th> <th>한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중대규모 (창업)</td> <td>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td> <td rowspan="4">총투자의 20%</td> <td>10억</td> </tr> <tr> <td>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td> <td>20억</td> </tr> <tr> <td>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300억 이상</td> <td>40억</td> </tr> <tr> <td>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td> <td>60억</td> </tr> </tbody> </table>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창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300억 이상	4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60억						
내용	기준	비율	한도(억원)																					
중대규모 (창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총투자의 20%	10억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20억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300억 이상		40억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60억																					
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고용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이 도내로 이전, 신설, 증설 전후 상시고용 규모 충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비율</th> <th>한도(억원)</th> </tr> </thead> <tbody> <tr> <td>입지보조</td> <td>매입비의 10%</td> <td>10억</td> </tr> <tr> <td>투자</td> <td>투자비의 10%</td> <td>10억</td> </tr> <tr> <td>임대료</td> <td>임대료의 30%</td> <td>5억</td> </tr> <tr> <td>본사이전</td> <td>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td> <td>10억</td> </tr> </tbody> </table>				내용	비율	한도(억원)	입지보조	매입비의 10%	10억	투자	투자비의 10%	10억	임대료	임대료의 30%	5억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내용	비율	한도(억원)																						
입지보조	매입비의 10%	10억																						
투자	투자비의 10%	10억																						
임대료	임대료의 30%	5억																						
본사이전	본사이전 10명 초과 시 10명초과 1명당 2백만원	10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규모: 700억원 (운영자금 지원 포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이자보전율</th> <th>용자기간</th> <th>용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th> </tr> </thead> <tbody> <tr> <td>시설투자 자 금</td> <td>2%</td> <td>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5년거치, 4년균등상환)</td> <td>12억원 ※ 북평공단입주기업 30억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이자보전율	용자기간	용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시설투자 자 금	2%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5년거치, 4년균등상환)	12억원 ※ 북평공단입주기업 30억원												
구 분	이자보전율	용자기간	용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시설투자 자 금	2%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5년거치, 4년균등상환)	12억원 ※ 북평공단입주기업 30억원																					



지원유형	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지역 영 지 원	지방비 보조	▪지원규모 연 1,20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산업 - 2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 운수업(시내·외버스, 택시 법인기업), 무역업(매출액대비 수출액 1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체유형</th> <th>융자금리 (이자보전을)</th> <th>융자한도</th> <th>융자기간 (거치·상환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td> <td>3.5%</td> <td>8억원이하</td> <td rowspan="5">최대 4년 (일시상환)</td> </tr> <tr> <td>향토기업(20년이상)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td> <td>3%</td> <td>7억원이하</td> </tr> <tr> <td>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가부장관선정)</td> <td>2.5%</td> <td>7억원이하</td> </tr> <tr> <td>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및 Main-biz 선정기업</td> <td>2.5%</td> <td>6억원이하</td> </tr> <tr> <td>일반기업</td> <td>2.5%</td> <td>5억원이하</td> </tr> </tbody> </table>				업체유형	융자금리 (이자보전을)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기간)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3.5%	8억원이하	최대 4년 (일시상환)	향토기업(20년이상)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3%	7억원이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가부장관선정)	2.5%	7억원이하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및 Main-biz 선정기업	2.5%	6억원이하	일반기업	2.5%	5억원이하
	업체유형	융자금리 (이자보전을)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기간)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3.5%	8억원이하	최대 4년 (일시상환)																						
향토기업(20년이상)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3%	7억원이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자치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가부장관선정)	2.5%	7억원이하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및 Main-biz 선정기업	2.5%	6억원이하																								
일반기업	2.5%	5억원이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지원규모: 700억원 (설비지원 포함)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산업, 특별지원지역(동해 북평공단) 입주기업 또는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 관광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운수업(시내·외버스, 택시 법인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이자보전을</th> <th>융자기간</th> <th>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th> </tr> </thead> <tbody> <tr> <td>운전자금</td> <td>2%</td> <td>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td> <td>3억원 ※ 북평공단입주기업 5억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이자보전을	융자기간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운전자금	2%	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	3억원 ※ 북평공단입주기업 5억원													
구 분	이자보전을	융자기간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운전자금	2%	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	3억원 ※ 북평공단입주기업 5억원																							
특수목적자금 지원	▪지원규모: 300억원 ▪지원대상 - 수출지원자금: 현재 수출계약 체결 중인 '수출기업' -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기술혁신지원자금: 기술력 바탕의 성장잠재력 있는 기술혁신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자연재해(개별)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도내 고용 우수 기업 - 지역산업지원자금: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예정) 기업 ▪융자조건: 8억한도, 1.5%고정금리, 최대 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지원유형		지원제도	세부 지원내용																	
공 영 지 원	지방비 보조	특수목적자금 지원	▪자금용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사업</th> <th>자 금 용 도</th> </tr> </thead> <tbody> <tr> <td>수출지원기업</td> <td>◦ 수출 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 자금</td> </tr> <tr> <td>창업초기지원자금</td> <td>◦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td> </tr> <tr> <td>기술혁신지원자금</td> <td>◦ 보유기술활용제품개발경쟁력강화 자금</td> </tr> <tr> <td>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td> <td>◦ 피해복구 소요 자금</td> </tr> <tr> <td>고용창출지원자금</td> <td>◦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지원 자금</td> </tr> <tr> <td>지역산업지원자금</td> <td>◦ 지역산업 육성기업을 위한 지원 자금</td> </tr> <tr> <td>산업단지지원자금</td> <td>◦ 산업단지 · 농공단지 정착안정화 지원 자금</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자 금 용 도	수출지원기업	◦ 수출 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 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기술혁신지원자금	◦ 보유기술활용제품개발경쟁력강화 자금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	◦ 피해복구 소요 자금	고용창출지원자금	◦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지원 자금	지역산업지원자금	◦ 지역산업 육성기업을 위한 지원 자금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 농공단지 정착안정화 지원 자금
			세부사업	자 금 용 도																
			수출지원기업	◦ 수출 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 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기술혁신지원자금	◦ 보유기술활용제품개발경쟁력강화 자금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	◦ 피해복구 소요 자금																
			고용창출지원자금	◦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지원 자금																
			지역산업지원자금	◦ 지역산업 육성기업을 위한 지원 자금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 농공단지 정착안정화 지원 자금																